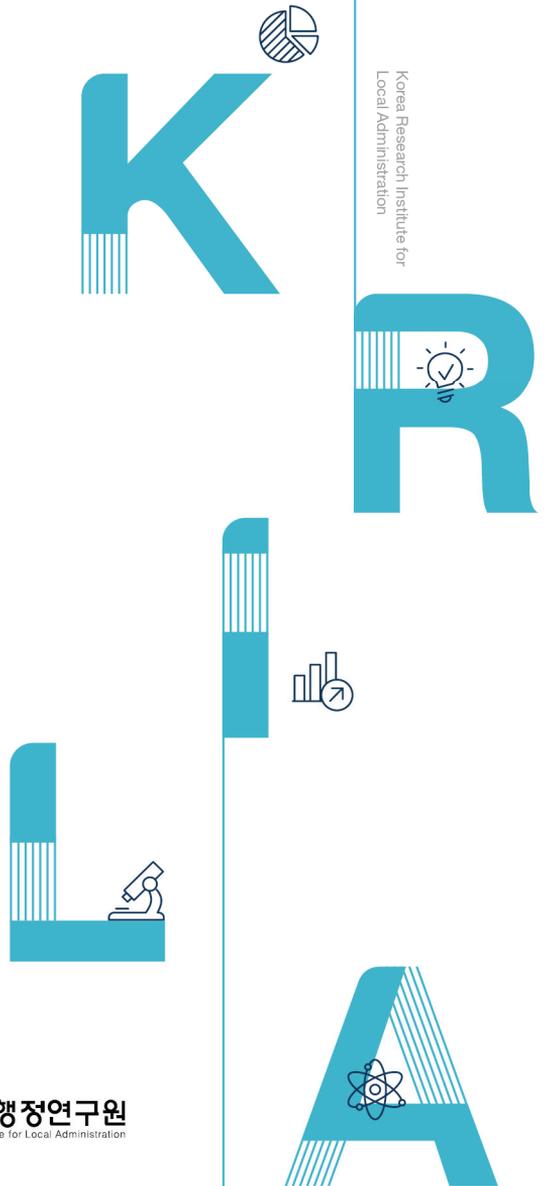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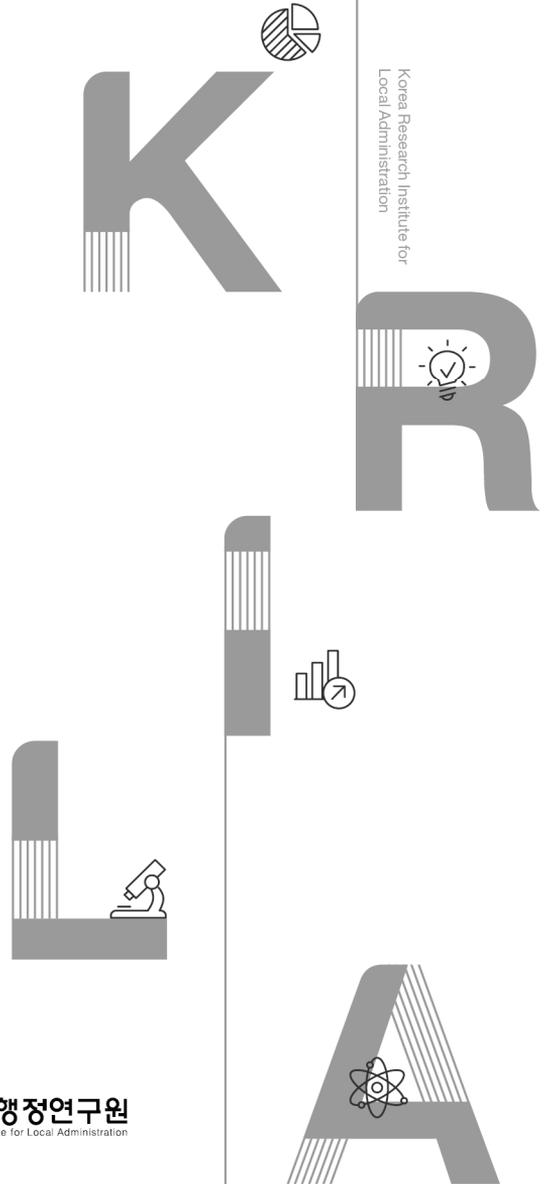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개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개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
- 여 효 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간사
- 김 봉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 재 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장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 태 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성 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 지 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최초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위축 및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 애로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2) 연구 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증가, 생계비 마련 애로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의 심대함을 고려,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처방 및 정책대응방안을 마련
- 코로나19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현재 뿐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된 후 까지 여파가 있음을 고려하여 빈사상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시책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의 경제회복 방안 마련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

회경제 영향, 정부 및 지자체 정책대응 진단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자 함

- 시책 개발에 있어서 거시적 경제 정책보다는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차원에서 적용·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체감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1)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의 위기

- OECD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깊이를 반영하여 주요 경제권의 생산 및 소비의 충격을 추정한 바, 제조업 경기동향지수는 기준치 50을 크게 밑도는 30 정도로 예상함
 - 주요국의 내수경제도 전년대비 -25%~-30% 축소될 것으로 전망
- IMF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는 코로나 확산 속도를 반영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함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worst recession)’를 겪을 것이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을 것이라 평가하였음
 -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 세계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4월에는 -3.0%, 6월에는 -4.9%로 수정하였음
- OECD는 6월 하반기에 코로나19 재확산을 상정한 경제전망 결과를 발표함
 - 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없다면 올해 세계경제는 -6.0%이나,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7.6%로 더 큰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경제 영향

- 한국은행 5월 경제전망(5.28)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20

- 년 -0.2%, 2021년 3.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 국내경기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크게 위축 되겠으나, 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
- 대체로 외국의 주요 기관에 비하여 국내 기관들의 한국경제 전망은 낙관적임
 - 국내의 주요 기관들은 -0.2%에서 0.2% 범위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예상
 - 다만,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국제기관과 비슷한 -2.3% 성장세를 전망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5월 기준(전년동월대비) 392천명의 감소를 기록함
 -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크고, 대면 접촉이 잦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짐

□ 지역경제 영향

-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하락하였으나, 정부 2차 추경예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2020년 5월 최고 점을 찍었다가 6월 들어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
- 지역별로는 소상공인 체감지수의 경우 울산(-75%), 세종(-73%), 경남(-67%), 강원(-65%), 경기(-64%), 경북(-62%)의 순으로 체감경기가 악화
 - 전통시장 체감지수의 경우 전북(-64%), 서울(-63%), 인천(-62%), 경기(-60%), 경북(-60%)의 순으로 낙폭이 컸음
 - ※ 확진자수가 가장 많이 보고된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지수의 감소폭이 크긴 하였으나 확진자수와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았음
- 업종별 소상공인 체감경기를 보면, 업종에 구분 없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큰 낙폭을 기록하고, 4월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유입

-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패턴을 나타냄
- 업종별로 낙폭이 큰 업종으로는 음식점업, 전문기술사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업종, 수리업종 등임
 - 코로나19는 지역의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데,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취업자 수 감소율이 컸음
 - 대구, 부산, 울산의 취업자 수 감소폭(-5%)이 크게 나타남
 - 도지역의 경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감소폭이 컸음
 - 지역별 GRDP 전망에서 대구지역의 GRDP 성장률(증립: -0.83%, 부정: -1.56%)이 가장 낮으며, 특별·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의 성장률 둔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는 인구밀집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증립: 1차 팬데믹만 상정, 부정: 2차 팬데믹을 감안한 시나리오

2)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대응 진단

□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 2020년 6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하였음
-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비상경제회의(대통령 주재)를 출범하여 5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완료
-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방역 및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민생·금융안정, 3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위기극복에 적극 대응
 - 실물피해대책(업종·분야별 긴급대책, 민생·경제종합대책 등), 금융안정대책(민생·금융안정패키지, 기간산업안정기금), 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에 총 250조원 규모(GDP의 13.1% 수준) 지원 대책을 마련

□ 중앙정부의 정책진단

- 외신 등에서 우리의 방역 대응(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 주요국 정부에서도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
 - (BBC, 20.3.12) 한국의 추적·검사·치료 대응은 다른 나라의 “롤모델”
 - (WSJ, 20.4.28) 사회활동 재개를 준비 중인 한국은 모든 것에 대한 규칙을 마련
 - (佛 마크롱 대통령, 20.3.13)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경의, 조치 방식·경험 공유 요청
- 한편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20.4.25.)에서 아래 사항을 지적함
 - 중장기적 영향보다 단기적 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경제관료 중심, 기업지원 중심
 -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대책 마련 필요

□ 지자체의 정책대응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침체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등을 대상으로 직접지원(현금·현물), 금융(융자)지원, 매출증대, 소비진작, 산업육성, 수출지원, 재정·세제 관련 지원 시책을 추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기 부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 완화, 실직 지원(긴급운영자금, 고용유

- 지지원금, 금융용자지원, 공공일자리 등)
-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심리 활성화 대책(지역사랑상품권 혜택확대, 착한 건물주 운동, 농수산물드라이브스루 판매, 공공요금 감면 등)
- 주민생활 밀착형사업 지원(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보육·돌봄 등 복지 지원, 문화체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물류와 교육사업 지원 등)

□ 지자체의 정책진단

- 긴급수당 지급 등 현금·현물보조의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시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보다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와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처한 상황과 사안별 시급성이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재량·자율성을 토대로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 예상
 - 지자체는 그간 3차에 걸친 긴급 추경예산 편성으로 결산잉여금, 예비비, 기금, 세출구조조정 등을 실시
 -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지자체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3)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시책 개발

(1) 시책 개발의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변화 고려

- 디지털 비대면(Untact) 문화와 사회가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새로운 근무형태 경험, 온라인 구매·배송·상품홍보

- 등 온라인 방식 확대
-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언택트 시대에 모바일, 전통시장의 온라인 기술 접목, 교육콘텐츠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화
-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증대
 - 정부에 의한 공적 마스크 제공,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안전망 마련
 -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나 공동체의 합의보다는 정부의 통제력,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은 크기와 범위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원되는 등 정부의 역할 증대
-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공동체 사회 강화
 - 코로나19로 접촉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교환도 어려워질 것이며, 폐쇄경제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게 자급자족의 수준이 강화될 것임
 - 재택근무, 온라인 거래 등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 및 지역공동체 사회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임

□ 시책 유형: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7개 분야로 구분

-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들의 시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함
- 지원 대상 기준에 의한 7개 시책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 중소기업 분야
 - 문화·체육·관광 분야
 - 농·축·수산 분야

- 정보화기반(ICT) 분야
- 사회적 가치 분야
- 재정 지원 분야

□ 분야별 시책의 정책차림표 구성

- 시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각 시책에 대한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 정책차림표는 시책별로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을 포함하여 구성
 - 지원 방식은 직접지원(현금·현물)을 비롯하여 매출증가, 소비진작, 정보화기반(ICT), 금융용자지원, 세제 및 요금감면, 재정지원 등 정책목적과 효과를 반영
 - 광역/기초는 시책의 추진 주체로서 광역(시·도)과 기초(시·군·자치구)로 구분
 - 단기/장기는 시책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관점으로 구분

(2) 분야별 시책의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7개 분야에 걸쳐 총 52개 시책을 개발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등 주로 매출증대, 경영지원을 위한 사용료감면, 금융·세제지원, 정보화기반과 관련한 시책을 제시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의 8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인상(매출증대, 광역·기초, 단기)
-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부담 해소(사용료감면, 광역·기초, 단기)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매출증대, 광역·기초, 단기)
-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지원(정보화기반, 광역·기초, 장기)
- 지역의 사회적 관광기반 구축(정보화기반, 행안부·광역, 장기)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제도개선, 광역·기초, 장기)
- 소상공인 국·공유재산 대부료 인하(요금감면, 광역·기초, 단기)
- 고금리 대출이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금융지원, 광역·기초, 단기)

□ 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등 소비촉진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한 시책을 제시함
- 중소기업 분야의 4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프로그램(소비촉진, 기초, 단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적용범위 확대(규제완화, 기초, 단기)
 - 중소기업가 우선조달제도 기준 완화(규제완화, 광역·기초, 단기)
 -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세제지원, 광역, 단기)

□ 문화·체육·관광 분야

-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의 취소나 이용 제약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경영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 등 직접(현금)지원, 매출증대, 소비촉진, 온라인 중계, 바우처를 통한 경영지원 등과 관련한 시책을 제시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10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직접지원, 기초, 단기)

- 예술하기 좋은날, 더 넓은 라운드테이블(온라인 제공, 기초, 단기)
-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온라인 제공, 기초, 단기)
-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여행(소비촉진, 기초, 단기)
- 관광인센티브 세분화로 관광사업 활성화(매출증대, 기초, 단기)
- 관광버스·영화관을 이용한 학생 등하교 관리 및 강의·행사 개최(매출증대, 기초, 단기)
- 관광안심존(safe-zone) 지정 및 자가격리호텔 인증제도(정보제공, 기초, 단기)
- 휴직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소비촉진, 기초, 단기)
- 주민세·개인대상 보조금 일부를 생활SOC 문화체육시설이용 바우처화(경영지원, 기초, 단기)
- 지역 관광자원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기반, 광역·기초, 장기)

□ 농·축·수산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 분야의 소비 감소,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기구 중심의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 등 소비진작,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정보화기반 구축 등과 관련한 단·장기 시책을 제시함
- 농·축·수산 분야의 10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소비진작, 기초, 단기)
 - 지역화폐와 ICT·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및 운영(소비진작, 광역·기초, 장기)
 - 비대면 지역농축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로컬푸드 안테나샵 구축(정보화기반, 광역, 장기)
 - 지역상생 경제를 위한 농축수산 공공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매출증대, 광역·기초, 장기)

- 지역 내 농축수산 도매전용 결제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농축수산물거래소 운영(정보화기반, 광역, 장기)
- 역인클로저 운동(Reverse-Enclosure Movement)과 공유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자산화 추진(정보제공, 기초, 장기)
- 재생에너지 자본투자로 창출한 수익을 통한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직접지원, 기초, 장기)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계절적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일자리 창출, 기초, 단기)
-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품앗이 및 귀농·귀촌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초, 단기)
-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2.0 조성(정보화기반, 광역·기초, 장기)

□ 정보화기반(ICT) 분야

- 저소득층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정보화 기반 관련 직접(현금)지원, 온라인 제공,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지원 사업 등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단·장기 시책을 제시함
- 정보화기반(ICT) 분야의 9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모바일 라이프라인(Mobile Lifeline) 지원사업(직접지원, 기초, 단기)
 - AI 무장한 코로나19 방역로봇 다중이용시설 대여서비스(직접지원, 기초, 단기)
 -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직접지원, 기초, 단기)
 -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온라인 제공, 기초, 장기)
 - 디지털 뉴딜시대 R&D 개발을 위한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사업(직접지원, 광역·기초, 장기)

- AI 활용 의료영상판독 원격진료서비스 제공(직접지원, 광역·기초, 장기)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문연구기관 신설(직접지원, 광역, 장기)
- 지자체 차원에서의 ICT 기반 감염병 예방플랫폼 구축사업(정보제공, 광역·기초, 장기)
- ICT활용 버스노선 운행보조 확대 및 노선관리시스템 구축(정보제공, 광역·기초, 장기)

□ 사회적 가치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하여 복지·돌봄서비스, 자원봉사, 기부활성화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민간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사업 등 돌봄, 재능기부, 교육 및 온라인지원, 소비진작, 정보제공 등과 관련하여 주로 단기적인 시책을 제시함
- 사회적 가치 분야의 8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Agile 정책플랫폼 운영(정보제공, 기초, 단기)
 -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지식경연 한마당(정보제공, 기초, 단기)
 - 유·초·중등학생의 온라인수업 멘토링프로그램(교육지원, 기초, 단기)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활성화 ‘굿굿즈’로 취약계층 매칭(재능기부, 기초, 단기)
 -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신부지원 프로그램(돌봄지원, 기초, 단기)
 - 비대면 민간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사업(온라인지원, 기초, 단기)
 - 자원봉사활동의 결합을 통한 온-오프 착한소비 운동(소비진작, 기초, 단기)
 - 비대면 코로나19 마음챙김사업(돌봄지원, 기초, 단기)

□ 재정지원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관련하여 재정투자사업 활성화, 투자재원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현금·현물)지원,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시책을 제시함

- 재정지원 분야의 3개 시책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계획계약 제도를 활용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 활성화(직접지원, 광역·기초, 단기)
 - 지방재정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도개선, 광역·기초, 단기)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추가재원 확보(제도개선, 광역·기초, 단기)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7
제1절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과 글로벌 경제위기	9
제2절 한국경제 영향	12
1. 2020년 경제전망	12
2. 고용동향	15
제3절 지역경제 영향	16
1.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16
2. 지역경제 전망을 위한 사전검토	22
3. 지역경제 전망	32
제3장 코로나19 대응 정부 및 자치단체 정책대응 진단	35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진단	37
1. 정책 동향	37
2. 정책 진단	3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	41
1. 정책 동향	41
2. 코로나19 대응 분야별 시책 현황	43
3. 정책 진단	53

제4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시책 개발 55

제1절 포스트 코로나와 패러다임 전환 57

1. 디지털 비대면(Untact) 문화와 사회가 본격 확산될 전망 57
2.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증대 58
3.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공동체 사회의 중요성 증가 58
4.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 59

제2절 시책 개발의 기본 방향 61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고려 61
2. 시책의 유형 구분 61
3. 시책의 정책차림표 구성 63

제3절 분야별 시책의 정책차림표 64

1. 개요 64
2.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64
3. 중소기업 분야 66
4. 문화·체육·관광 분야 67
5. 농·축·수산 분야 69
6. 정보화기반(ICT) 분야 71
7. 사회적 가치 분야 73
8. 재정지원 분야 75

제5장 분야별 시책의 주요내용 77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79

1.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인상 79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부담 해소 80
3.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81

CONTENTS

4. 지역의 사회적 관광기반 구축	83
5.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 지원	85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86
7. 소상공인 국·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88
8. 고금리 대출이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	89
제2절 중소기업 분야	90
1.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90
2.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적용범위 확대	91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기준 완화	93
4.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94
제3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95
1.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95
2. 예술하기 좋은 날, 더 넓은 라운드 테이블	96
3.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	97
4.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 여행	100
5. 관광 인센티브 세분화로 관광사업 활성화	101
6. 관광버스·영화관을 이용한 학생 등하교 관리 및 강의·행사 개최 ..	103
7. 관광 안심존(safe-zone) 지정 및 자가격리 호텔 인증제도	105
8. 휴식 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108
9. 주민세 및 개인대상 보조금 일부를 생활SOC 문화·체육시설이용 바우처화	109
10. 지역 관광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110
제4절 농·축·수산 분야	112
1. 주민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	112

2. 지역화폐와 ICT·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14
3. 비대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로컬푸드 안테나샵 구축	117
4. 지역 상생경제를 위한 농·축·수산 공공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119
5. 지역 내 농축수산 도매전용 결제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농축수산물거래소 운영	121
6. “역인클로저 운동(Reverse-Enclosure Movement)”과 공유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산화 추진	123
7. 재생에너지 자본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활용한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지급	126
8.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계절적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129
9.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품앗이 및 귀농·귀촌 활성화	131
10.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2.0 조성	133
제5절 정보화기반(ICT) 분야	136
1. 모바일 라이프라인(Mobile Lifeline) 지원 사업	136
2. AI 무장한 코로나19 방역로봇 다중이용시설 대여서비스 지원 사업 ..	138
3.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	140
4.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143
5. 디지털 뉴딜시대 R&D개발을 위한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사업	145
6.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원격진료서비스 제공사업	147
7.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문연구기관 신설	148
8. 지자체 차원에서 ICT 기반 감염병 예방 플랫폼 구축사업	150

CONTENTS

9. ICT 활용 버스노선 운행보조 확대 및 노선관리시스템 구축	151
제6절 사회적 가치 분야	153
1. 온라인 Agile 정책플랫폼 운영	153
2.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지식경연 한마당	155
3. 유·초·중등학생의 온라인수업 멘토링 프로그램	158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활성화 ‘굿굿즈’로 취약계층 등 매칭	159
5.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산부 지원프로그램	160
6. 비대면 민간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 사업	161
7. 자원봉사활동의 결합을 통한 온-오프 착한 소비 운동	163
8. 비대면 코로나19 마음 챙김 사업	164
제7절 재정지원 분야	167
1. 계획계약 제도를 활용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 활성화	167
2. 지방재정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68
3.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70
제6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7
【부 록】	
1. GRDP 전망모형과 추정결과	179
2. 지방재정 분야의 정책 대응	183

표목차

[표 2-1] 코로나19 사태 전·후 세계경제 전망	11
[표 2-2]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내역	13
[표 2-3] 2020년 한국은행 경제전망	14
[표 2-4] 2020년도 한국경제 전망치 비교	15
[표 2-5]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동향	15
[표 2-6]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대상 단위근 검정 결과	24
[표 2-7] 국내 및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대상 공적분 검정 결과	24
[표 2-8] 국면전환모형에 의한 경기변동단계 발생 확률	31
[표 2-9] 지역별 GRDP 전망 결과	34
[표 3-1]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37
[표 3-2]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내용	38
[표 3-3]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긴급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 부산시 사례	42
[표 3-4]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지원시책	44
[표 3-5] 중소기업 분야 지원시책	47
[표 3-6]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시책	48
[표 3-7] 농·축·수산 분야 지원시책	50
[표 3-8] 정보화기반(ICT) 분야 지원시책	51
[표 3-9] 사회적 가치 분야 지원시책	52
[표 3-10] 재정지원 분야 시책	53
[표 4-1] COVID-19에 대응한 신규 정책 또는 기존 사회안전망 장치의 확대	59
[표 4-2]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지원대책의 유형 구분 사례	62
[표 4-3] 시책의 정책차림표 구성	63
[표 5-1]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	146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1]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9
	[그림 2-2]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경제충격	10
	[그림 2-3]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반영한 OECD 경제전망 시나리오	12
	[그림 2-4]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17
	[그림 2-5] 지역별 소상공인 체감경기	18
	[그림 2-6] 업종별 소상공인 체감경기	19
	[그림 2-7] 업종별 전통시장 체감경기	20
	[그림 2-8]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	21
	[그림 2-9] OECD의 한국경제 전망 시나리오	23
	[그림 2-10] HP필터를 이용한 시·도별 경기순환 비교	25
	[그림 2-11]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시·도별 경기변동 특징	28
	[그림 2-12] 지역별 대형소매점 판매 누계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5월 누계 기준)	33
	[그림 5-1] 제로페이 캐시백 혜택 사용방법	82
	[그림 5-2] 온누리 전통시장관 입점절차	85
	[그림 5-3]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의 개념	113
	[그림 5-4] 국내 이동통신사와 벤처기업이 개발한 5G·AI 자율주행 방역로봇	116
	[그림 5-5]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 드론택배 시범사업 개념도 ..	116
	[그림 5-6]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의 쇼핑분야 활용 사례 ..	118
	[그림 5-7] 경기도의 농사펀드 플랫폼	120
	[그림 5-8]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유통단계	123
	[그림 5-9] 주민주도의 지역자산화의 사례: 마을기업 "건맥1897 협동조합"의 공유건물	125

[그림 5-10] 유희부지의 활용을 통한 강원도청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128
[그림 5-11] 서울형 농촌일손 교류프로젝트: 농촌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130
[그림 5-12] 경상북도 농촌일손 품앗이 사업	132
[그림 5-13] 지능형 로봇에 의한 스마트팜 2.0	134
[그림 5-14]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137
[그림 5-15] 코로나19 방역로봇이 방문객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140
[그림 5-16] 스마트기기 대여 절차	142
[그림 5-17] 현재 운영 중인 초·중학교 온라인 교육플랫폼 「e학습터」	144
[그림 5-18] 현장전문가의 살아있는 정책플랫폼	155
[그림 5-19] 정책지식경연 한마당	1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국가 및 개인적 차원에서 대면 및 접촉 회피,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모임 및 회식 부재, 관광 등 접촉경제 활동 기피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최초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위축 및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

-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 2019.12.1.(중국 우한)
- 우리나라 최초 확진자 발생 : 2020.1.20.
-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 : 2020.2.20.
-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 : 2020.2.23.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 2020.3.11.

- 코로나19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불명의 전염병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위기관리(risk management)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번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
 - 둘째,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무차별적이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
 - 셋째,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한 불신의 확산이 특징이며,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불신해야 하는 상황
 - 넷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4차 산업혁명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에 변화를 맞고 있음. 이에 따라 재

택근무, 영상회의, 온라인 수업 등 디지털 비대면 사회와 문화가 확산되고 정부의 역할, 교육의 방식 등이 변화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실업 증가, 생계비 마련 애로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의 심대함을 고려,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처방 및 정책대응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대응 진단을 살펴본 후,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개발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코로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현재 뿐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된 후까지 여파가 있음을 고려
 - 현재 빈사상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시책
 -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의 추진 대책
-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체감도 높은 방안을 마련
- 거시적 경제 정책보다는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시책을 개발
 - ※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관련되더라도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시책, 패키지, 지자체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 부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영향 파악
 -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경제 부문 실태
 -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동향
 - 한국경제 영향: GDP성장률, 고용현황
 - 지역경제 영향: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 지역별/업종별 체감경기,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
 - 지역경제 전망: 지역별 GRDP 전망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자치단체 정책대응 및 진단
 - 코로나19 대응 중앙정부 정책 동향과 진단
 - 코로나19 대응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과 진단
 -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지자체 지원시책 현황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시책 개발
 - 포스트 코로나와 패러다임 전환
 - 시책 개발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정보화기반(ICT), 사회적 가치, 재정지원 분야
 - 시책별로 핵심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을 포함

2. 연구방법

- 단기적 과제 완성으로 시책의 활용성 강화, 브리프 발신, 세미나 개최
- 융합적 추진: 원내 및 외부 전문가 참여
 - Brain Storming 통해 아이디어 발굴
 - * 연구보고서 형식보다는 아이디어 발굴 및 취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파 및 공유
- 전문가워크숍,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자문의견 수렴

연구자문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재원(부경대학교 교수) 윤홍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인하대학교 교수) 양오석(강원대학교 교수)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훈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임연구원)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

-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병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영향,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제2장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제1절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과 글로벌 경제 위기

제2절 한국경제 영향

제3절 지역경제 영향

제2장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KR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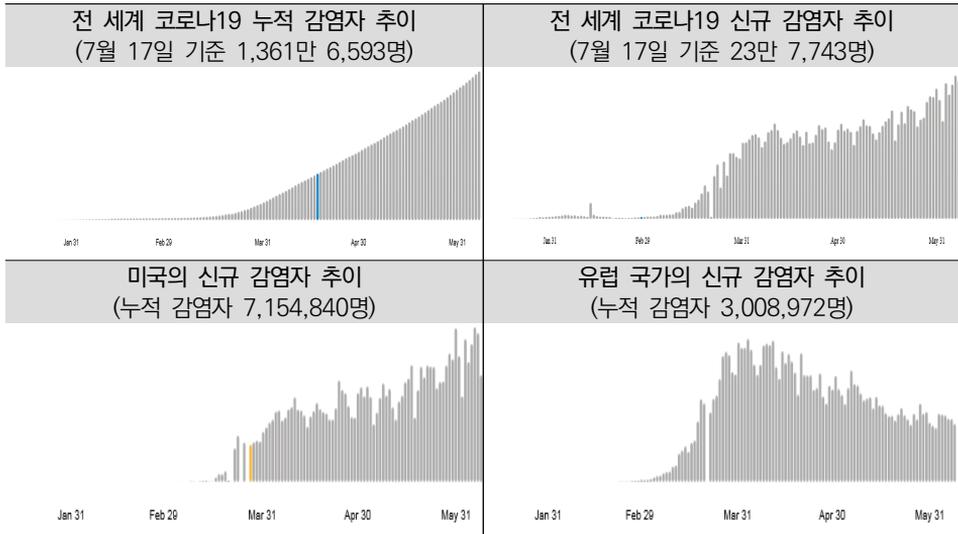
제1절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과 글로벌 경제위기

□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 2020년 7월 17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세계보건기구, WHO 기준)는 누계 기준으로 1,361만 6,593명이며 사망자는 58만 5,727명, 전일 대비 신규 감염자는 23만 7,743명, 신규 사망자는 5,682명을 기록하고 있음
- 유럽 지역은 신규 감염자가 저하되는 추세이나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 종료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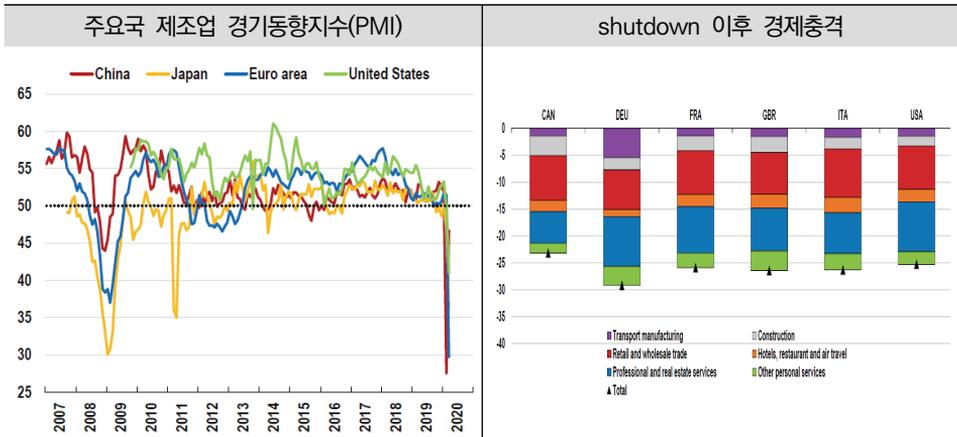
[그림 2-1]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자료: <https://covid19.who.int>

□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의 위기**

- OECD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깊이를 반영하여 주요 경제권의 생산 및 소비의 충격을 추정한 바, 제조업 경기동향지수는 기준치 50을 크게 밑도는 30 정도로 예상함
- 주요국의 내수경제도 전년대비 -25%~-30%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2-2]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경제충격



자료: OECD, The Global Economic Impacts of COVID-19, 27 April 2020.

- Capital Economics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전망 수치를 수정하고 있는 바, 5월에 발표한 수치는 3월 전망치 보다 더 비관적임
 -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로존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3월 전망치보다 더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
 -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5%이나,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2분기에는 -8% 역성장을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3월의 -1.0%이었으나 5월에는 -3.0%를 예상하여 더 비관적으로 전망

- 다만, 3분기부터 경기회복 단계에 진입하며, 2021년에는 뚜렷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V자형 경기회복’을 예상
- IMF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는 코로나 확산 속도를 반영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함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worst recession)’를 겪을 것이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을 것이라 평가하였음
 -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 세계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4월에는 -3.0%, 6월에는 -4.9%로 수정하였음

[표 2-1] 코로나19 사태 전·후 세계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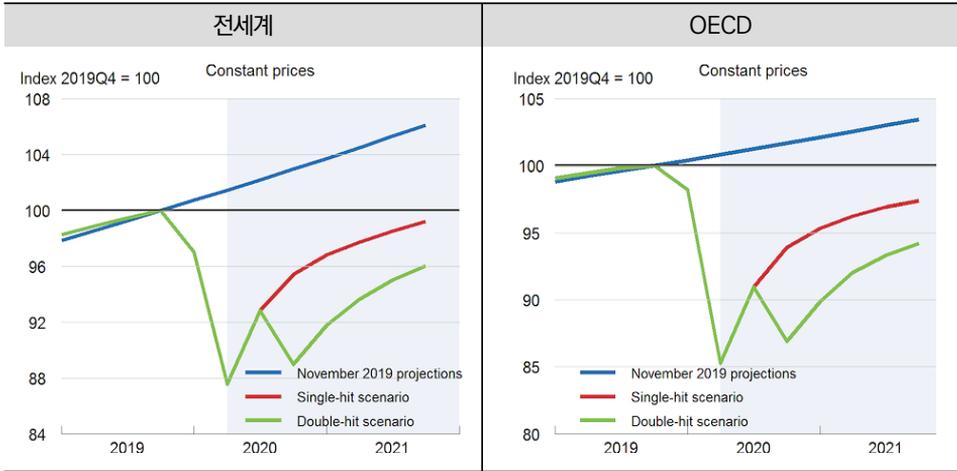
(단위: %)

구분	Capital Economics			IMF			OECD	
	당초 전망 (1월)	수정 전망 (3.26)	수정 전망 (5.18)	당초 전망 (1월)	수정 전망 (4.14)	수정 전망 (6.24)	Single-Hit (6.10)	Double-Hit (6.10)
한국	2.0	-1.0	-3.0	2.4	-1.2	-2.1	-1.2	-2.5
전세계	3.0	-3.1	-4.0	2.9	-3.0	-4.9	-6.0	-7.6
미국	2.3	-5.5	-5.5	2.0	-5.9	-8.0	-7.3	-8.5
일본	0.7	-4.0	-7.0	0.7	-5.2	-5.8	-6.0	-7.3
중국	6.1	-3.0	-5.0	6.0	1.2	1.0	-2.6	-3.7
유로존	1.2	-6.0	-12.0	1.3	-7.5	-0.2	-4.6	-11.5

주: Capital Economics, IMF, OECD 홈페이지 수록된 경제전망 보고서 인용

- OECD는 6월 하반기에 코로나19 재확산을 상정한 경제전망 결과를 발표함
 - 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없다면 올해 세계경제는 -6.0%이나,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7.6%로 더 큰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3]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반영한 OECD 경제전망 시나리오



제2절 한국경제 영향

1. 2020년 경제전망

-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23일 1/4분기 GDP 실질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였다고 잠정 집계하였음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됨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나 건설투자 등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에서 -1.8%, 서비스업이 -2.0%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별로는 운수업 -12.6%,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6.5%, 문화 및 기타서비스 -6.2%의 역성장을 기록하여 경제위기 진양지로 나타났음

[표 2-2]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내역

(단위: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국내총생산 (GDP)	1.0	0.6	0.5	0.9	-0.4	1.0	0.4	1.3	-1.4	-1.3
민간소비	0.7	0.5	0.4	0.8	0.1	0.7	0.2	0.9	-6.4	(-4.7)
정부소비	1.9	0.6	1.6	2.8	0.4	2.2	1.4	2.5	0.9	-7.1
건설투자	0.9	-2.5	-6.0	1.8	-0.8	1.4	-6.0	7.0	1.3	-3.4
설비투자	4.3	-8.4	-4.0	3.2	-9.1	3.2	0.6	3.3	0.2	-7.6
수출	3.5	0.7	4.0	-1.4	-3.2	2.0	4.6	0.5	-2.0	-4.9
수입	4.3	-2.3	-1.1	1.6	-3.4	2.9	1.2	0.6	-4.1	-0.5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3.2	-2.6	-3.5	2.8	4.7	-3.6	0.6	1.4		0.1
제조업	0.8	1.6	1.6	1.6	-3.3	1.1	2.4	1.6		-1.8
전기·가스·수도사업	-1.8	4.5	-0.1	2.5	0.0	10.7	-13.6	4.2		5.7
건설업	1.1	-2.1	-5.0	0.8	-1.0	1.6	-4.9	5.6		0.3
서비스업	1.3	0.4	0.5	0.5	0.8	0.8	0.6	0.8		-2.0
- 도소매 및 숙박음식	-0.7	0.7	1.4	1.2	-2.3	0.8	1.4	1.4		-6.5
- 운수	-3.1	4.1	0.4	1.0	-3.4	1.9	0.7	0.2		-12.6
- 금융 및 보험	3.4	1.7	0.1	-0.6	2.5	1.3	1.7	0.0		2.3
- 의료보건	0.7	1.8	4.5	3.1	-0.9	2.1	3.8	1.9		-5.2
- 문화 및 기타서비스	6.0	-3.4	-1.1	-0.3	3.9	-0.7	-2.3	0.1		-6.2

주: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4.23.)

- 이에 대해 한국은행 5월 경제전망(5.28)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20년 -0.2%, 2021년 3.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국내경기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었으나, 정부정책 등으로 소득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증가로 전환 전망
 - 설비투자는 비IT부문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

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감소로 전환되겠으나 각국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상방리스크)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반등하고, 국내외의 경기대응정책이 성과를 나타낸다면 국내경제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음
- (하방리스크) 반대로 하반기 전세계적인 2차 대유행, 미중 무역갈등의 재점화 및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은 국내 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임

【표 2-3】 2020년 한국은행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9	2020 [㉠]			2021 [㉠]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 GDP ¹⁾	2.0	-0.5	0.1	-0.2	3.4	2.8	3.1
민간소비	1.9	-3.4	0.6	-1.4	6.3	2.4	4.3
설비투자	-7.7	2.6	0.5	1.5	5.7	7.4	6.5
건설투자	-3.1	-0.2	-4.1	-2.2	-2.0	0.3	-0.8
상품수출	0.5	-0.4	-3.7	-2.1	2.5	3.9	3.2
상품수입	-0.8	1.2	-1.4	-0.2	3.9	4.0	3.9
■ 취업자수 증감(만명) ¹⁾	30	-4	11	3	38	21	29
■ 실업률	3.8	4.3	3.6	4.0	4.1	3.4	3.7
■ 고용률	60.9	60.0	61.3	60.7	60.6	61.5	61.0
■ 소비자물가 ¹⁾	0.4	0.5	0.0	0.3	0.8	1.5	1.1
■ 경상수지(억달러)	600	170	400	570	200	350	550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2020. 5월)

- 대체로 외국의 주요 기관에 비하여 국내 기관들의 경제전망은 낙관적임
 - 국내의 주요 기관들은 -0.2%에서 0.2% 범위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예상
 - 다만,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국제기관과 비슷한 -2.3% 성장세를 전망

【표 2-4】 2020년도 한국경제 전망치 비교

(단위: %)

국내					국외		
정부 (‘20.6.)	한국은행 (‘20.5)	예산 정책처 (‘20.5)	KDI (‘20.5)	한경련 (‘20.5)	IMF (‘20.6)	OECD (‘20.6)	Capital. Eco. (‘20.5)
0.1	-0.2	0.1	0.2	-2.3	-2.1	-1.2	-3.0

자료: 관계부처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0.6.1.); 한국은행, 경제전망(2020.5.28.); 국회예산정책처,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KDI,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ne 2020;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2. 고용동향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4월,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5월 기준(전년동월대비) 392천명 감소함
 -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크고, 대면 접촉이 잦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2-5】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동향

구분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실업자(실업률)	1,180천명(4.2%)	1,172천명(4.2%)	1,278천명(4.5%)	
취업자(전년동월대비)	26,609천명(-195천명)	26,562천명(-476천명)	26,930천명(-392천명)	
증감	• 숙박·음식점업	-109천명(-4.9%)	-212천명(-9.2%)	-183천명(-7.9%)
	• 교육서비스업	-100천명(-5.4%)	-130천명(-6.9%)	-70천명(-3.7%)
	• 도매·소매업	-168천명(-4.6%)	-123천명(-3.4%)	-189천명(-5.1%)
고용률(전년동월대비)	65.4%(-0.8%p)	65.1%(-1.4%p)	65.8%(-1.3%p)	

자료: 통계청, 2020년 3월 고용동향(‘20.4.17.); 2020년 4월 고용동향(‘20.5.13.); 2020년 5월 고용동향(‘20.6.10.)에 기초하여 작성

제3절 지역경제 영향

1.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

- 소상공인의 경기전반 체감 지수의 올해 추이는 1월 67.3, 2월 41.5, 3월 29.7로 급격히 하락
- 소상공인의 경기전반 체감 지수는 '15년 7월 메르스 감염병 사태 때 43.5로 전 저점을 찍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9년 4분기에는 70.1로 체감지수가 1분기 대비 상승 추세였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하는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조사의 체감경기 전반에 대한 지수(파란색 실선)를 6개월 이동평균선(붉은색 실선)과 함께 표시. 그림 상단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전반, 하단은 전통시장 체감경기 전반을 나타냄
-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조사(BSI)는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하며, 확진자수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이후 4월 들어서는 체감지수가 73.8, 경기전망은 95.0으로 회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소비가 재개됨에 따라 빠른 반등을 나타내고 있음
- 전망지수도 작년 4월 수준을 회복하여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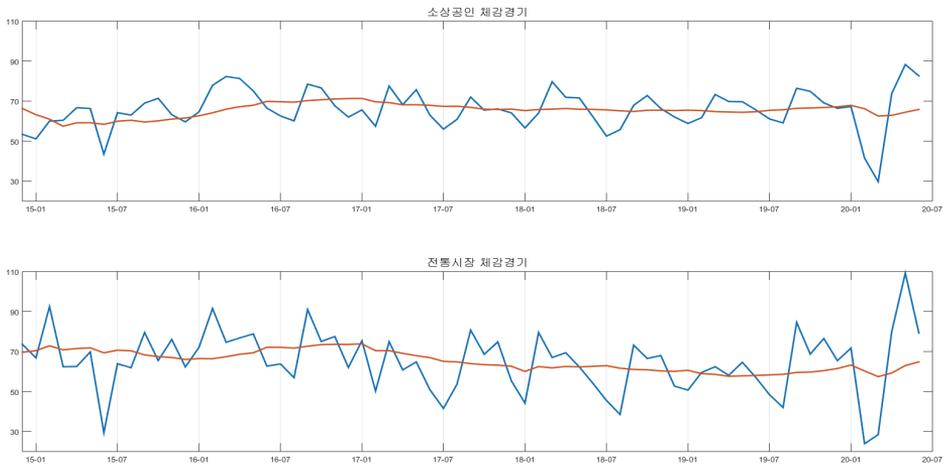
□ 전통시장 시장경기동향조사

- 전통시장 체감경기 또한 월별 데이터가 지나는 특성으로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세 또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전통시장 체감경기도 메르스의 여파가 한창이던 '15년 7월에 전 저점을 지나고 있으며, '17년부터 '19년 기간 동안 지수 자체는 변동을 나타내나 6

개월 이동평균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 20년 1월 이후의 그래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지수의 낙폭이 크게 떨어졌다가 4월 반등에 성공
-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지자체 및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올해 들어 5월 최고점을 찍었다가 6월 들어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

[그림 2-4]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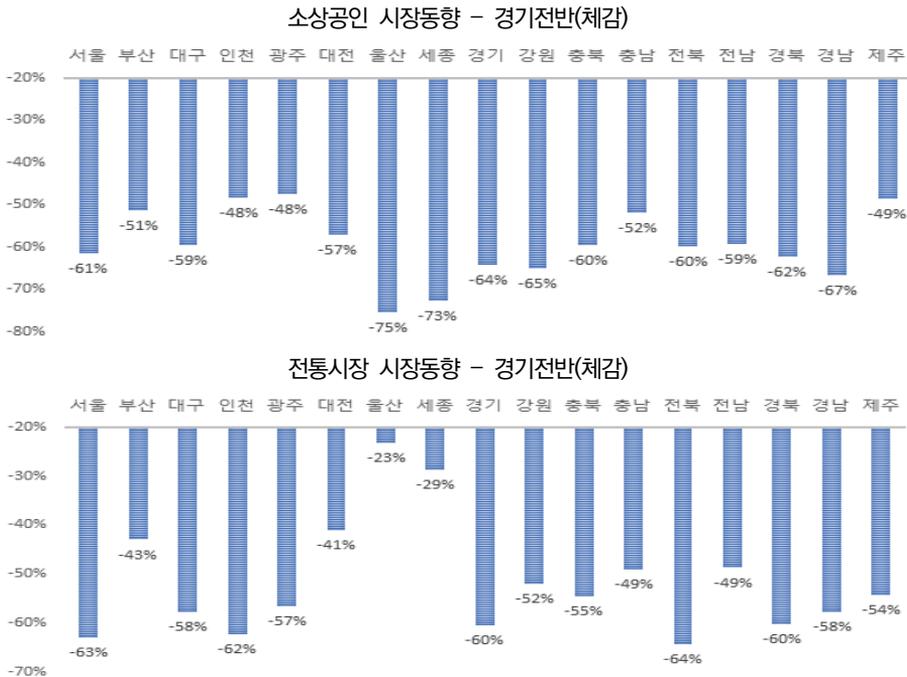
□ 지역별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 소상공인 체감지수의 경우 울산(-75%), 세종(-73%), 경남(-67%), 강원(-65%), 경기(-64%), 경북(-62%)의 순으로 체감경기가 악화
- 전통시장 체감지수의 경우 전북(-64%), 서울(-63%), 인천(-62%), 경기(-60%), 경북(-60%)의 순으로 낙폭이 컸음¹⁾

1)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지역별 체감경기 악화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정점이던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감소폭을 제시함

-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가장 많이 보고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수 감소폭이 크긴 하였으나 확진자수와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았음

[그림 2-5] 지역별 소상공인 체감경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지역별 경기전반 체감 지수

기준시점: 202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체감경기가 전년동월 대비 가장 악화된 시점(20년 3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감소폭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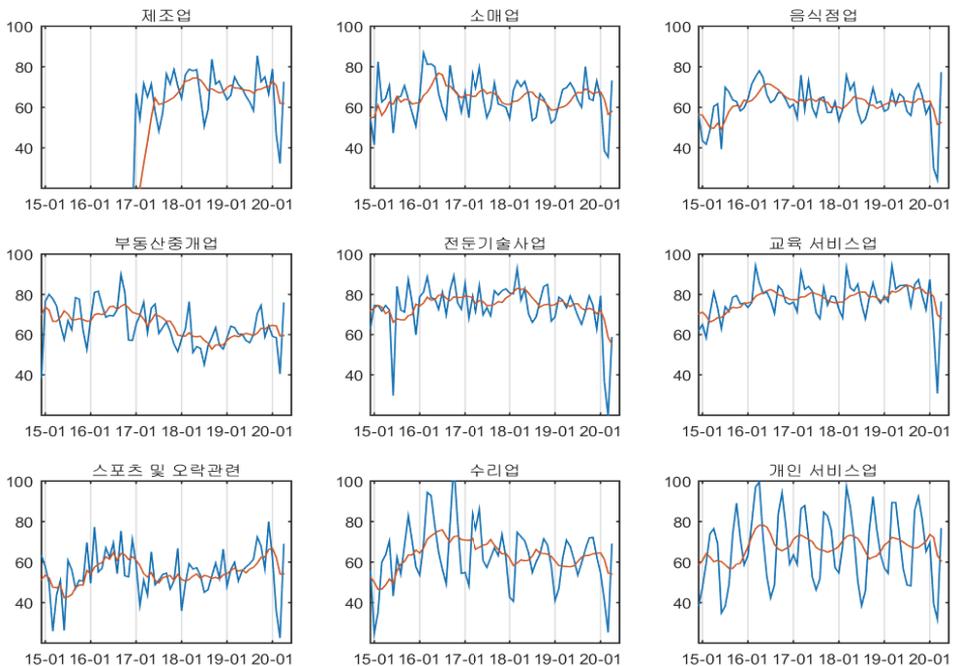
□ 업종별 소상공인 체감경기

-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기술사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의미

- 업종에 구분 없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큰 낙폭을 기록하고, 4월 반등하는 패턴을 공통적으로 나타냄
- 업종별로 낙폭이 큰 업종으로는 음식점업, 전문기술사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업종, 수리업종 등임
- 4월 이후 지자체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유입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저점에서의 반등폭도 가파른 양상임

[그림 2-6] 업종별 소상공인 체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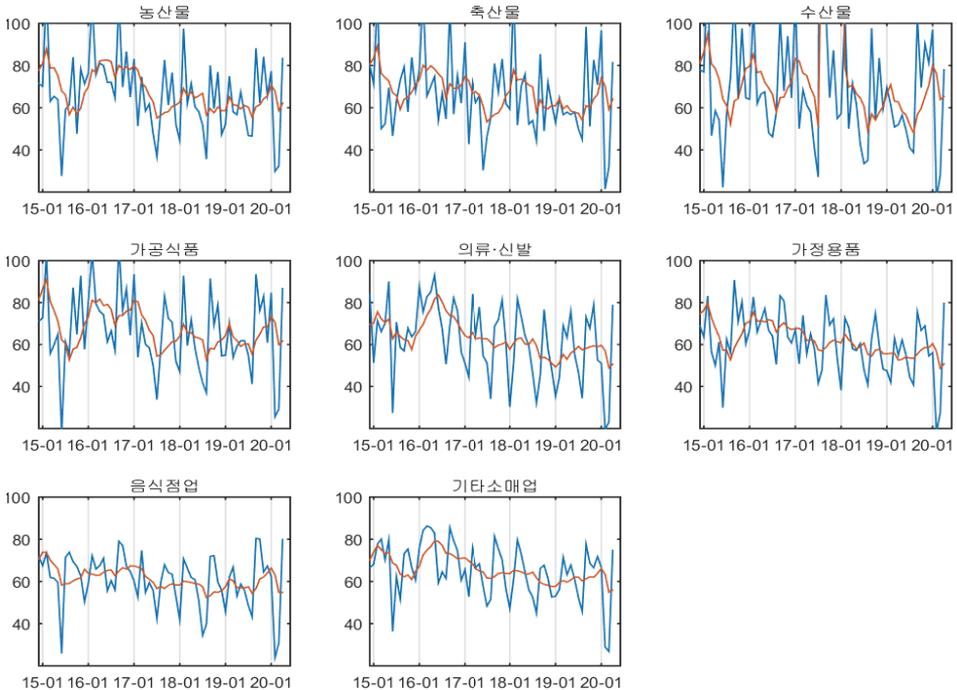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업종별 경기전반 체감 지수

□ 업종별 전통시장 체감경기

- 전통시장의 경우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 전통시장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업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충격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
- 의류신발 및 가정용품업의 경우 '16년 이후 이미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이번 감염병 사태가 부정적 충격을 더함

[그림 2-7] 업종별 전통시장 체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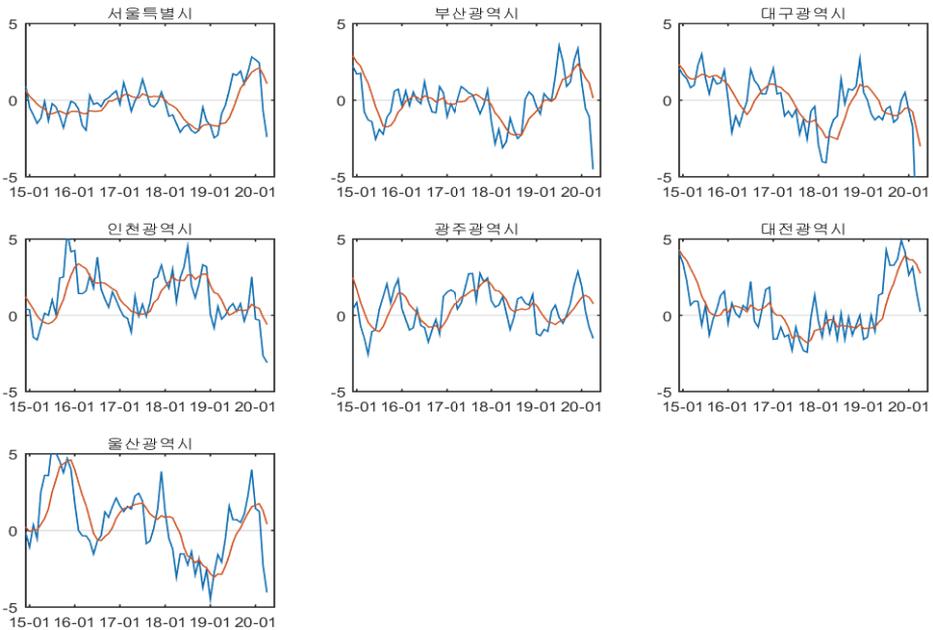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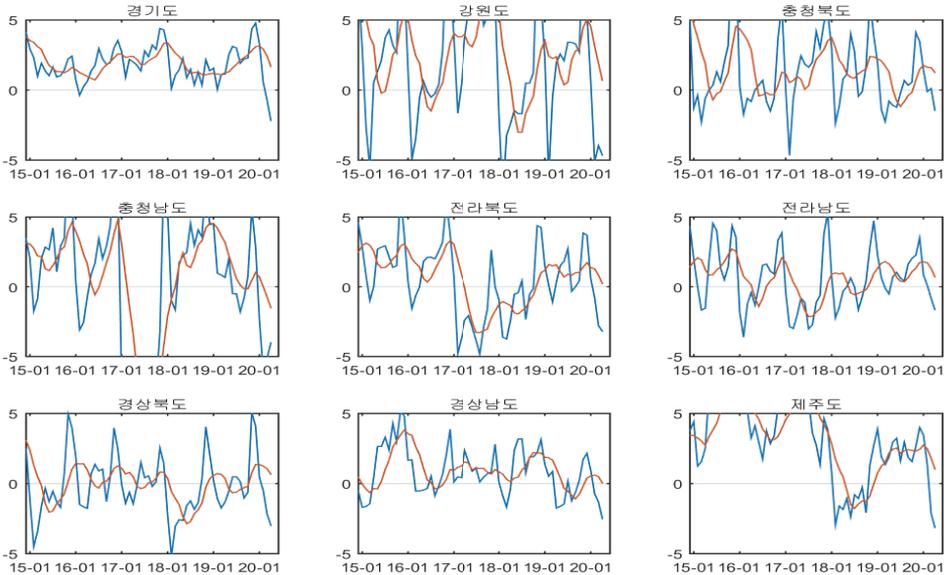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업종별 경기전반 체감 지수

□ 지역별 고용시장

- 코로나19는 지역의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행정구역별 월별 취업자 수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로 제시
- 특별·광역시의 경우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취업자 수 감소율이 컸음
 - 대구, 부산, 울산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5%에 이르는 등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큼
 - 도의 경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감소폭이 컸음

[그림 2-8]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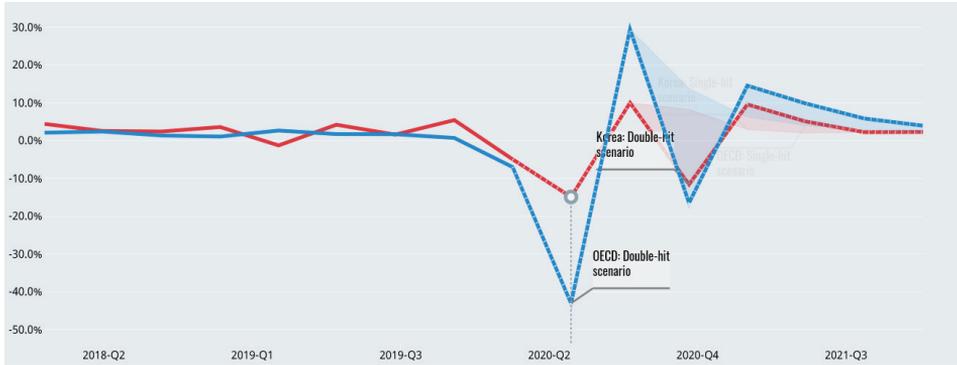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별(시도) 취업자수(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지역경제 전망을 위한 사전검토

□ 전망을 위한 사전탐색: 2차 팬데믹 가능성의 진단

- 경제회복 양상이 'U자형'을 보일지, 'V자형'으로 나타날지는 코로나19 사태의 안정화 여부와 시점에 좌우될 것임
 - 지난 6월에 발표된 OECD의 경제전망은 하반기 2차 팬데믹 발생 시, 세계 경제는 -6.0%에서 -7.6%로 더 위기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였음
 - 한국경제 역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될 경우 -1.2%에서 -2.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경제회복 양상이 'W자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그림 2-9] OECD의 한국경제 전망 시나리오



- 2차 팬데믹 가능성과 관련하여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단위근 (unit root) 존재 여부를 검정함
 - 어느 시계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미래에도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면,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non-stationary) 시계열이라 함
 - 일반화된 단위근 검정식은 절편과 시간추세 T 가 포함된 $\Delta y_t = \alpha + \beta T + \gamma y_{t-1} + \epsilon_t$ 으로 표기되며, 절편과 시간추세가 없는 경우, 절편만 포함된 경우, 절편과 시간추세가 모두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됨
 - 3종류의 시계열기법(Levin, Lin & Chu의 t-test, ADF검정 및 PP검정의 χ^2 통계량)으로 단위근 존재($\gamma = 0$)를 검정하였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1월 20일부터 최근의 7월 4일 기간에 0시 기준 누적확진자 수 대상으로 검정함
 - 전체 기간 대상으로 한 검정에서 P&P 기법에서 단위근 존재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가 하나 관찰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5월 6일 이후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불안정 시계열로 판단할 수 있음

[표 2-6]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대상 단위근 검정 결과

	전 기간 (1.20~7.4)	생활방역 이후 (5.6~7.4)	생활방역 이전 (1.20~5.5)
단위근 회귀식에 상수항 포함			
Levin, Lin & Chu	-1.480	2.832	-1.503
ADF	3.613	0.002	2.343
P&P	20.64**	0.000	10.40**
단위근 회귀식에 상수항과 시간추세 포함			
Levin, Lin & Chu	-0.388	-1.260	0.023
ADF	0.378	1.081	0.152
P&P	5.427	1.750	0.697

주: **는 1%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단위근 존재) 기각

- 국내 확진자와 전 세계 확진자의 공적분 관계의 존재 여부를 Johansen 검정기법으로 확인한 바,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였음

[표 2-7] 국내 및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대상 공적분 검정 결과

	절편 및 추세 없음	절편만 포함	추세만 포함	절편 및 추세 포함
공적분 없음	12.3**	15.5**	20.3**	25.9**
1개 이상 공적분 존재	4.12	3.8**	9.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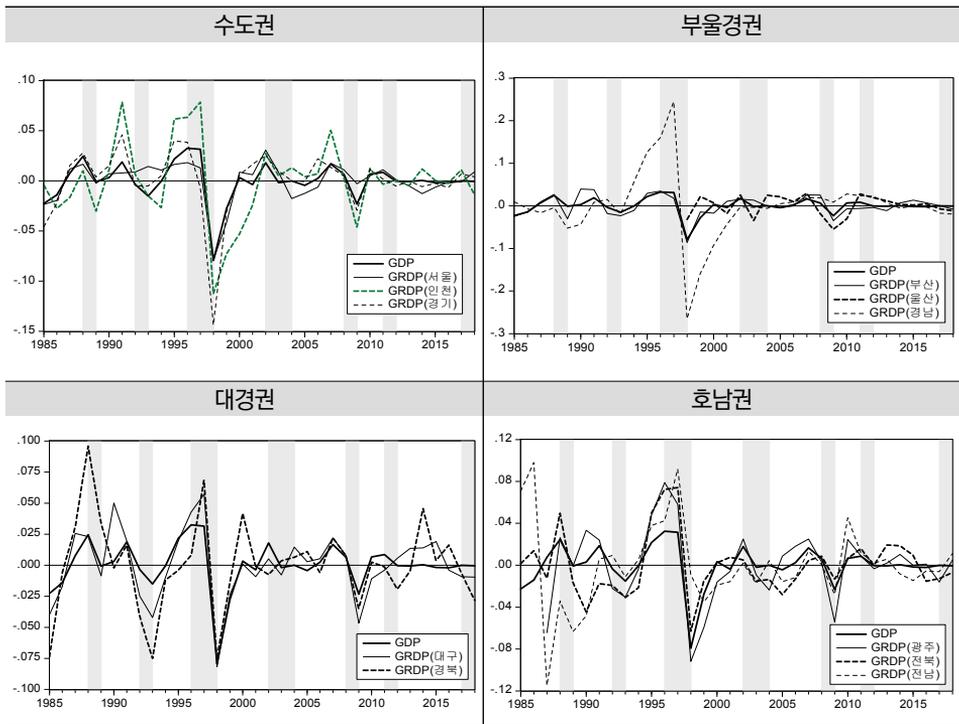
주: **는 1%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단위근 존재)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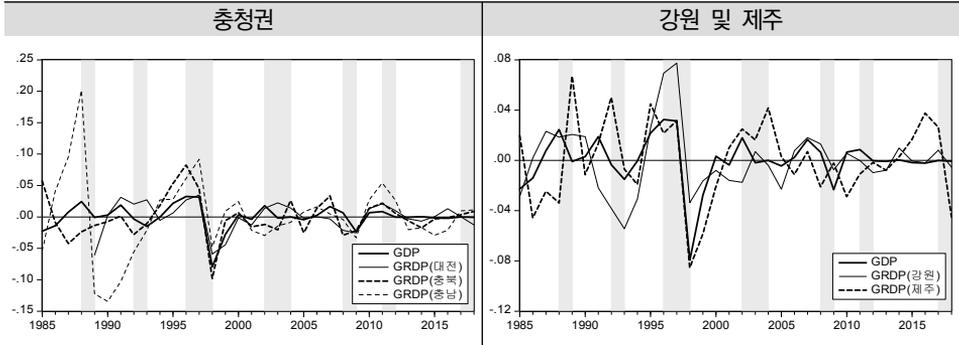
- 국내 및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단위근과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2차 팬데믹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말해줌
 - 단위근 검정에 의하면 국내의 지역감염 확산세도 아직 불안정 단계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와 공적분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 상태에서 해외 유입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2차 팬데믹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 지역경제 위기 진단

- 지역별 경기변동의 특성을 살펴본 바,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경기순환주기와 시·도별 경기순환주기가 다르며, 경기 고점 및 저점의 깊이도 다른 것으로 보임
 - GRDP 및 GDP 대상으로 HP필터(Hodrick-Prescott Filter)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경기순환을 비교하면 인천, 경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지역은 수축국면에서 GDP보다 하강 속도가 빠르고, 더 깊이 하락하는 경향
 -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여파가 추가되면서 경기하강의 속도와 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그림 2-10] HP필터를 이용한 시·도별 경기순환 비교





주: 음영 처리 부분은 통계청 공식 경기순환국면의 수축기에 해당함

- HP필터는 GRDP 연간 수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 비교, 그리고 최근의 지역경제가 경기순환 상 어느 상태 및 단계에 있는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국면전환모형(regime switching model)으로 자세히 분석하기로 함
 - 경기변동(business cycle)은 소비, 투자, 수출, 생산,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는 움직임을 말함
 - 여기서 추세보다 상승하는 시기를 호황기, 추세보다 하락하는 시기를 불황기로 정의 가능
 - 국면전환모형이 경기변동에서 나타나는 상승과 하강 시기를 잘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Hamilton(1989)의 초기 연구 이후 호황, 불황 등과 같은 경기상황을 판정하는데 가장 널리 애용²⁾
 - 불황, 호황 등과 같이 현실세계에서 관측되지 않은 경제 상태를 내생적으로 추정하고 식별하는 모형이 바로 국면전환모형임
 - 즉, 국면전환모형은 ① 성장률(y_t)이 불황기, 호황기, 위기시기와 같이 관측되지 않는 경제상태(state variable)에 의존하고 ② 경제위기를 경험하여 경제에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가 있을 때 널리 사용하는 모형

2) Hamilton, J.D.(1989),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Analysis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and the Business Cycle." *Econometrica*, 57, 357-384.

- 여기서는 호황, 불황 기간 이외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제3의 기간도 식별하기 위해 3-상태 국면전환모형을 사용
- 여기서 첫 번째 경기상태는 호황기, 두 번째 경기상태는 불황기, 세 번째 경기상태는 위기시기로 정의할 수 있음
 - 동 모형을 통해 경제가 불황기에 있을 가능성(확률), 호황기에 있을 가능성(확률), 위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확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음
 - 경제가 위기국면에 있는 경우(국면0라 부르고 수리적으로 $s_t = 0$ 라 씀) 성장률의 경로(평균방정식)는 $y_t = \mu_0 + e_{0,t}$, $e_{0,t} \sim N(0, \sigma_0^2)$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
 - 경제가 불황기에 있는 경우(국면1라 부르고 수리적으로 $s_t = 1$ 라 씀) 성장률의 경로(평균방정식)는 $y_t = \mu_1 + e_{1,t}$, $e_{1,t} \sim N(0, \sigma_1^2)$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
 - 경제가 호황기에 있는 경우(국면2라 부르고 수리적으로 $s_t = 2$ 라 씀) 성장률의 경로(평균방정식)는 $y_t = \mu_2 + e_{2,t}$, $e_{2,t} \sim N(0, \sigma_2^2)$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
 - 이 때, y_t 는 경제성장률. μ_0, σ_0^2 는 위기시기의 평균성장률과 성장률의 분산을, μ_1, σ_1^2 는 불황기의 평균성장률과 성장률의 분산을, μ_2, σ_2^2 는 호황기의 평균성장률과 성장률의 분산을 의미하며, 정의상 위기시기의 성장률(μ_0) < 불황기의 성장률(μ_1) < 호황기의 성장률(μ_2)의 특징을 가짐
 - 위의 국면전환모형은 관측되지 않는 상태변수에 의존하므로 불황기, 호황기, 위기시기 등과 같이 경제국면에 의존하는 성장률(μ_0, μ_1, μ_2)과 분산($\sigma_0^2, \sigma_1^2, \sigma_2^2$)을 구할 수 없으므로, 관측되지 않는 상태변수가 1차 마코프체인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위기시기, 불황기, 호황기 등 각 경제국면을 판별
- * 1차 마코프체인은 현재 시점의 상태변수(s_t)가 바로 전기 시점의 상태변수(s_{t-1})에만 의존하는 확률과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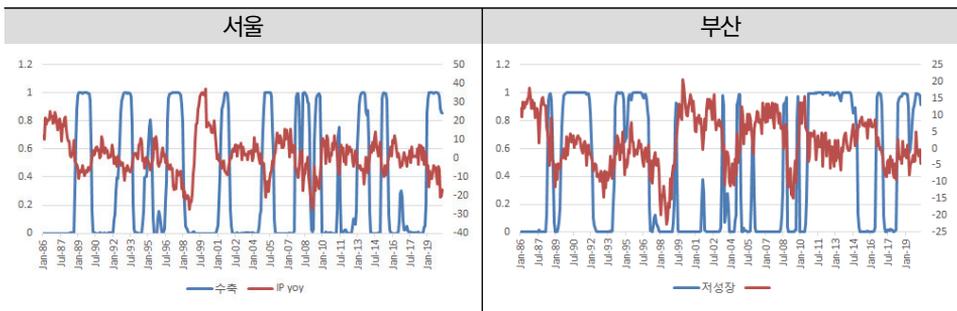
- 경제국면에 의존하는 성장률(μ_0, μ_1, μ_2)과 분산($\sigma_0^2, \sigma_1^2, \sigma_2^2$)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이확률이 필요함. 즉 전기(t-1) 위기시기에서 현재(t) 위기시기로 국면이 지속될 확률(p_{00}), 전기(t-1) 불황기에서 현재(t) 불황기로 국면이 지속될 확률(p_{11}), 전기(t-1) 호황기에서 현재(t) 호황기로 국면이 지속될 확률(p_{22}), 전기(t-1) 위기시기에서 현재(t) 불황기로 국면이 전이될 확률(p_{01}), 전기(t-1) 위기시기에서 현재(t) 호황기로 국면이 전이될 확률(p_{02}), 전기(t-1) 불황기에서 현재(t) 위기시기로 국면이 전이될 확률(p_{10}), 전기(t-1) 불황기에서 현재(t) 호황기로 국면이 전이될 확률(p_{12}), 전기(t-1) 호황기에서 현재(t) 위기시기로 국면이 전이될 확률(p_{20}), 전기(t-1) 호황기에서 현재(t) 불황기로 국면이 전이될 확률(p_{21}) 등이 필요하며,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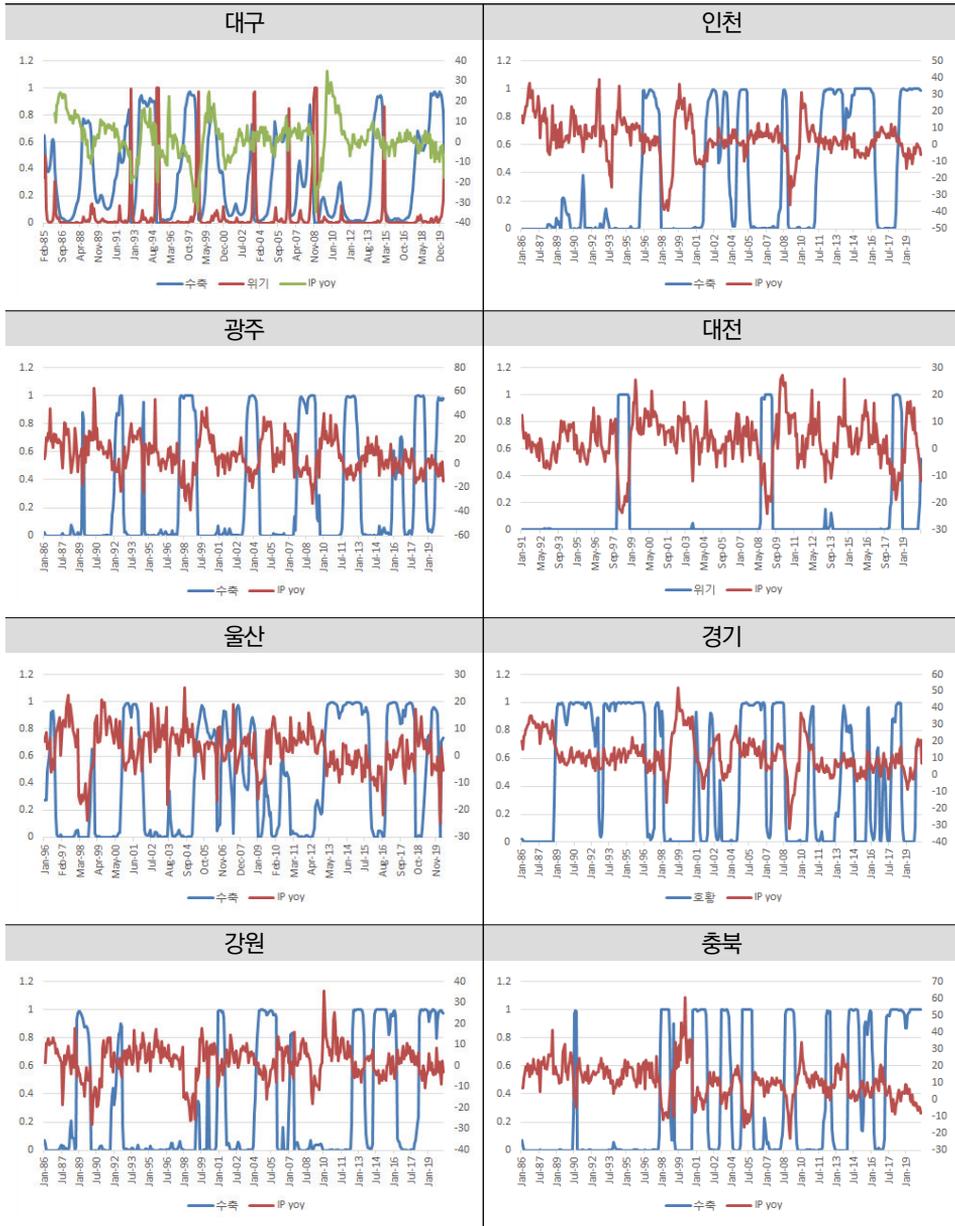
$$\Pr(s_t = 0 | s_{t-1} = 0) = p_{00}, \Pr(s_t = 1 | s_{t-1} = 0) = p_{01}, \Pr(s_t = 2 | s_{t-1} = 0) = p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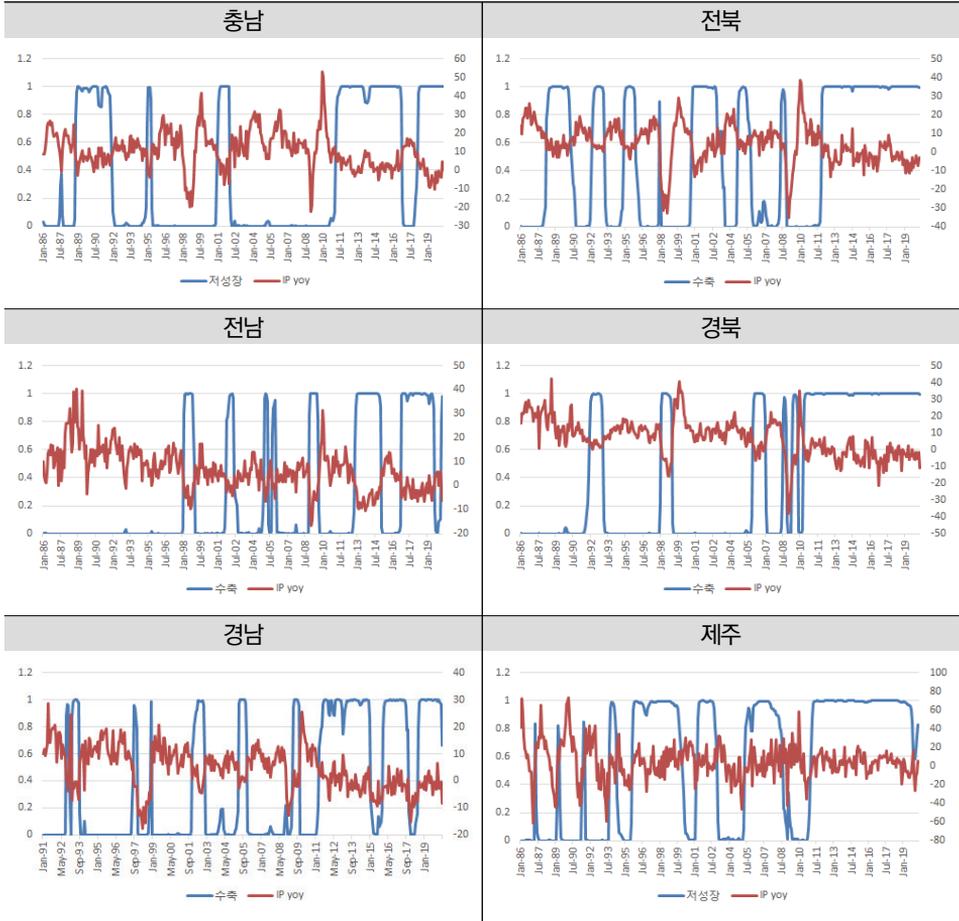
$$\Pr(s_t = 0 | s_{t-1} = 1) = p_{10}, \Pr(s_t = 1 | s_{t-1} = 1) = p_{11}, \Pr(s_t = 2 | s_{t-1} = 1) = p_{12}$$

-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의 월별 증가율 자료를 y_t 로 설정하여 시·도별 수축국면 또는 저성장 국면을 계산
 - 수축국면 또는 저성장 국면의 발생 확률은 [그림 2-11]에서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1]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시·도별 경기변동 특징







- 상기 분석 결과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8]에서처럼 모든 시·도가 수축국면, 저성장 및 경제위기 국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HP필터 기법에 의해 시·도별 경기변동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국면전환모형에서는 특성을 고려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 type 1 - 4는 3-상태 국면전환모형을 통해 얻어진 세 가지의 경기상태(예, 호황, 불황, 위기)를 의미

- 기본적으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속에서 마이너스 역성장 폭이 커 위기국면으로 판정(type 1)할 수 있고, 그간 고성장으로 인해 고성장과 저성장 사이클을 보이는 가운데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수축국면으로 판정(type 2)할 수 있음
- 이렇게 지역별 경기변동의 차이를 type1-4로 표시
- 어떤 유형을 채택하든, 한국경제는 모든 지역에서 위기국면, 수축국면, 저성장국면 상태일 확률이 90.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대구, 울산, 경남은 수축 국면에 있으나 위기 국면으로 전이되는 모습이고 대전은 이미 위기 국면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됨

[표 2-8] 국면전환모형에 의한 경기변동단계 발생 확률

	Type 1			Type 2			Type 3			Type 4		
	위기	수축	확장	수축	저성장	고성장	수축	확장	고성장	저성장	중성장	고성장
서울							0.85					
부산					0.92							
대구	0.48	0.52										
인천							0.99					
광주							0.98					
대전	0.53	0.47										
울산	0.23	0.74										
경기	0.99											
강원		0.97										
충북							0.99					
충남										0.99		
전북		0.99										
전남							0.98					
경북							0.99					
경남	0.34	0.66										
제주					0.83							

3. 지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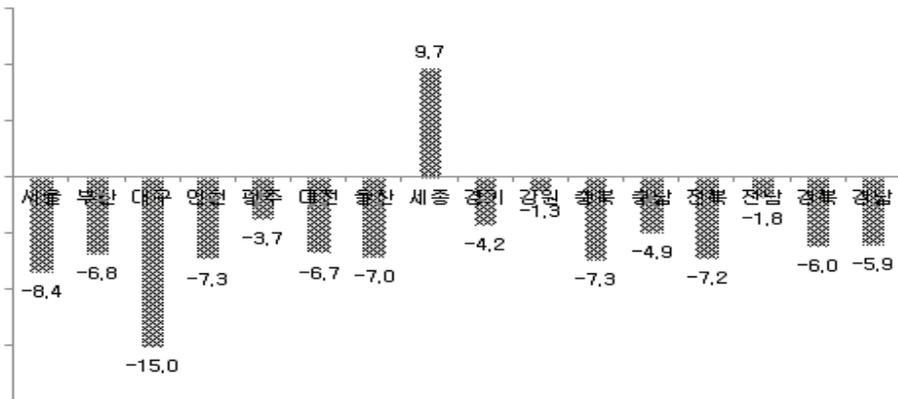
□ 전망모델 개요

- 경제성장 전망은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이나 생산함수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이나 다변량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거나, 지방세입 전망이 목표라는 점, 이용 가능한 지역통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교한 전망모형 설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적분 개념을 접목시킨 시계열기법을 활용하기로 함
 - 공적분회귀식(FMOLS: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 혹은 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
 - 일반적으로 공적분 관계식은 $z_t = (y_t, x_t)'$ 로 놓아 y_t 를 단일 시계열로, x_t 를 $r-1$ 차원 다변량 시계열로 정의하는데, $\alpha = (1, -\beta)'$ 로 표준화(normalization)하면 $y_t = x_t'\beta + u_t$ 의 회귀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
 - 시차가 i 인 VECM(i) 일반모형은 $\Delta Y_t = \mu + \alpha\beta'Y_{t-i} + \Gamma\Delta Y_{t-i} + u_t$ 로 표현됨. 여기서 β' 는 공적분 관계 파라미터임
- 2차 팬데믹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도출함
 - 상반기 1차 팬데믹만 상정한 시나리오는 중립모형으로 하며, 2차 팬데믹을 감안한 것을 부정적 시나리오로 도입함
- 기본적으로 GRDP를 종속변수로 하며 설명변수로는 GDP,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을 설정함. 즉, $GRDP = f(GDP)$, $GRDP = f(\text{민간소비지출}, \text{정부지출})$ 의 두 형태를 상정하였으며, FMOLS와 VECM 기법으로 전망함
- 공적분회귀식 및 오차수정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먼저, 함수식에 들어갈 내생변수에 대한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바, 하나 이상의 공적분 벡터가 확인됨

□ 시나리오

- [표 2-9]의 GRDP 성장률 전망치 중에서 예산정책처의 0.1%를 중립모형, 한국은행의 -0.2%를 부정적 시나리오로 가정함
 - 코로나 19의 확산,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시책 등에서 해외기관이 국내기관에 비해 정보비대칭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민간소비지출을 사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와 같은 맥락에서 중간 수치를 중립모형, 가장 낮은 수치를 부정적 시나리오로 상정함
 - 민간소비 전망치는 예산정책처 -0.9%, 한국은행 -1.4%, KDI -2.0%이며, 한국은행 전망치를 중립모형, KDI 전망치를 부정적 시나리오로 상정하였음
 - 민간소비지출 대리변수는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으로 함
 - 다음의 그림은 1월부터 5월까지 판매 누계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을 표시한 것으로서 대구가 -15.0%를 기록하여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임

[그림 2-12] 지역별 대형소매점 판매 누계액의 전년대비 증감률(5월 누계 기준)



□ GRDP 전망 결과

- 전망모형은 함수식과 시계열기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16개 시·도 전체를 만족하는 모형을 찾을 수 없어 평균치로 판단하였음
- 대구지역의 GRDP 성장률이 가장 낮으며, 특별·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의 성장률 둔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바, 인구밀집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판단됨³⁾

[표 2-9] 지역별 GRDP 전망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GRDP = f(GDP)	VECM(1)	-0.47%	-1.12%	-1.78%	-0.53%	-0.81%	1.25%	-1.88%	-0.82%	
	FMOLS	부정적	-0.82%	-1.49%	-1.57%	-1.81%	-1.37%	-0.96%	1.27%	-3.57%
		중립적	-0.02%	0.88%	-0.13%	-0.63%	0.31%	0.89%	1.60%	-2.86%
GRDP = f(민간소비, 정부지출)	FMOLS	부정적	0.23%	0.70%	-1.32%	-1.03%	0.65%	-0.67%	-2.81%	1.13%
		중립적	0.46%	1.09%	-0.57%	-0.54%	0.89%	-0.28%	-2.11%	1.30%
GRDP 성장률 전망치 평균		부정적	-0.36%	-0.64%	-1.56%	-1.12%	-0.51%	-0.12%	-1.14%	-1.09%
		중립적	-0.01%	0.28%	-0.83%	-0.57%	0.13%	0.62%	-0.80%	-0.7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GRDP = f(GDP)	VECM(1)	-0.02%	-0.90%	-0.14%	-0.25%	0.61%	-0.10%	2.50%	1.84%	
	FMOLS	부정적	-2.22%	-3.35%	-1.13%	0.68%	1.24%	3.09%	0.49%	-3.49%
		중립적	-1.98%	-3.02%	-0.56%	1.67%	2.16%	3.59%	1.10%	-3.21%
GRDP = f(민간소비, 정부지출)	FMOLS	부정적	2.76%	2.57%	-1.79%	1.30%	2.25%	1.64%	-0.98%	0.98%
		중립적	2.80%	2.79%	-1.07%	1.39%	2.15%	2.16%	-0.47%	1.06%
GRDP 성장률 전망치 평균		부정적	0.17%	-0.56%	-1.02%	0.58%	1.37%	1.54%	0.67%	-0.23%
		중립적	0.27%	-0.38%	-0.59%	0.93%	1.64%	1.88%	1.04%	-0.11%

3) 모형별 추정결과는 <부록 1>에 수록하였음

제3장

코로나19 대응 정부 및 자치단체 정책대응 진단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진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

제3장 코로나19 대응 정부 및 자치단체 정책대응 진단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진단

1. 정책 동향

-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6.1.)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
-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비상경제회의(대통령 주재)를 출범하여 5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완료
- 총 250조원 규모(GDP의 13.1% 수준) 지원대책 마련

[표 3-1]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실물피해대책 : 32조원	금융안정 대책 : 175조원	추가 보강대책 : 4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업종·분야별 긴급대책 <4조원> • (2단계) 민생·경제 종합대책 <16조원> • (3단계) 추경 <11.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35조원+α> ※ 자금지원/ 금융시장 안정 •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재난지원금<14.3조원> • 사회보험료 감면<0.9조원> • 고용안정패키지<10.5조원> • 수출·벤처기업지원<10.1조원> • 기타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등

* 250조원 = 32 + 175 + 46 - 8 + 5

<주> 8 : 소상공인 최저금리 대출 중복분 차감/

5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한은 국고채매입 별도 포함

*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349조원

자료: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20.6.1.)

- 또한 정부는 5년간('21~'25)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디지털 뉴딜+그린뉴딜)”을 마련함

- 경기위축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기를 혁신기회로 전환해 선도형 경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가 핵심이며 원격교육, 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 디지털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린 뉴딜은 경제·기후 위기에 대비한 것으로 녹색전환을 통해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추진. 즉,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표 3-2】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내용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A. 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발·활용 -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1·2·3차 숲산업 5G·AI 융합 확산 -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 SOC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핵심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업 단 조성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자료: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 2020.6.1.)

- 비상경제하 2단계 대응체제로서 상시적 위기관리·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부총리 주재, 경제중대본) 본격 가동
 - 경제상황·리스크 점검, 기 발표 대책의 이행 및 현장애로 점검, 추가 대책 마련 등
 - * 정부 핵심대책 결정 또는 중요사안 결단 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2. 정책 진단

-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방역 및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고, 3차에 걸쳐 총 59조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대응함
 -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20.2.13.)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20.)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20.2.28.)
 - 정부 1차 추경예산안(11.7조원) 국회 확정('20.3.17)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
 -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Ⅱ)('20.3.18.)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제1차 비상경제회의)('20.3.19.)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제2차 비상경제회의)('20.3.24.)
 - 코로나19 피해 추가지원방안('20.3.25.)
 -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제3차 비상경제회의)('20.3.30.)
 - 업종별 지원방안(Ⅲ)('20.4.1.)
 - 제4차 비상경제회의(내수 및 수출활력 제고방안)('20.4.8.)
 - 제5차 비상경제회의(고용·기업안정대책)('20.4.22.)
 - 정부 2차 추경예산안(12.2조원) 국회 확정('20.4.30)
 -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제6차 비상경제회의(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
- 정부 3차 추경예산안(35.1조원) 국회 확정(’20.7.4)
 -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위기·기업 일자리보호 금융지원
 - 한국판 뉴딜 등 경기보강,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 외신 등에서 우리의 방역 대응(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 주요국 정부에서도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
 - (BBC, 3.12) 한국의 추적·검사·치료 대응은 다른 나라의 “롤모델”
 - (WSJ, 4.28) 사회활동 재개를 준비 중인 한국은 모든 것에 대한 규칙을 마련
 - (佛 마크롱 대통령, 3.13) 韓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경의, 조치 방식·경험 공유 요청
- 강력한 방역 대응 노력과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평가
- 한편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20.4.25.)에서 아래 사항을 지적함
 - 중장기적 영향보다 단기적 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경제관료 중심, 기업지원 중심
 -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대책 마련 필요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

1. 정책 동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
-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 정책 대응은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하여 피해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정보화기반, 사회적 가치, 재정지원 분야로 구분
 - 지원방식에서는 직접지원(현금, 현물)을 비롯하여 금융(융자)지원, 매출증대, 소비진작, 산업육성, 수출지원, 정보제공, 온라인 제공,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존자금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생활 밀착형 지원시책을 추진함
 -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역주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추경예산편성의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 완화, 실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입(긴급운영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심리 활성화 지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착한 건물주 확산운동 등)
-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지원(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보육·돌봄 등 복지 시설 지원, 문화체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물류 분야와 교육사업 등)

[표 3-3]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긴급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부산시 사례

구분	추경규모 (증가율)	지원시책	추경의 재원
1차 추경 (‘20.3.13)	2,258억원 (1.8%)	민생안정(1,537억) - 서민생활안정(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아동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가정양육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취득세 초과세입 추가 국고보조금 재난 특별교부세 예비비
		지역경제 활력 지원(539억) - 피해소상공인 융자지원, 지역화폐(동백전)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 중소기업 수출보증 보험료 지원	
		시민보호(66억) - 방역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 등	
2차 추경 (‘20.5.4)	10,050억원 (7.8%)	전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574억원) (국비 8,197억, 시비 1,377억) 지역화폐(동백전) 발행 지원사업(100억원) 코로나19 극복 구·군 조정교부금 지원(1,136억원)	국고보조금(긴급재난 지원금) 세출구조조정 지방채발행확대 예비비
3차 추경 (‘20.6.29)	6,543억원 (4.7%)	고용안정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2,005억) - 희망일자리사업 등 고용안정화 사업 -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 소비회복,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1,764억) - 자영업·중소상공인 지원 - 관광·자동차 등 지역산업 지원 - 부산형 뉴딜사업 추진 K-방역 및 재난대응·사회안전시스템 강화(187억)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편성(1,868억원)	결산인여금 도시공사배당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3차 추경)
합계		18,851억원	

자료: 부산시, 2020년도 제1회, 제2회, 제3회 긴급추경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코로나19 대응 분야별 시책 현황

-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자체의 지원 시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문화·체육·관광, 고용유지, 일자리, 사회적 가치,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은 직접(현금·현물)지원, 요금감면·면제, 교육지원, 금융지원, 대여·서비스 이용권, 정보제공, 규제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이 위축된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임대료 인하, 선결제 운동을 비롯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
 - 착한 임대인 운동: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
 - 착한 선결제 운동: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이용은 나중에 하는 방식
 - 긴급생계비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실업 충격 등 생계애로에 대한 직접 지원
 - 금융지원: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매출증대: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혜택확대, 행복나눔 도시락, 전통시장 자매결연 등
 - 소비촉진: 착한 소비 운동,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서비스 지원사업 등

[표 3-4]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지원시책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정보제공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서울 금천구)	○		단기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코로나컨설팅'(서울 송파구)	○			장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설(서울 송파구)	○		단기	
금융지원	골목 생활상권 기반사업 추진(서울 서초구)	○		단기	
	고금리 대출이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서울)		○	단기	
	골목상권 특례보증(광주)		○	단기	
	소상공인 3무 용자(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광주)		○	단기	
	소상공인 임차사업자 우대 특별자금지원 특례보증(부산)		○	단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성남시)	○		단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 인하(소상공인 대상)(서울 강서구)	○		단기	
매출증대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서울 구로구)	○		단기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서울)		○	단기	
	울산페이 할인율 인상, 구매한도 상향조정(울산)		○	단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특별할인 전자상품권 발행(강원)		○	단기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서울용산구)	○		단기	
	울산페이 구매동참 릴레이 캠페인(울산)		○	단기	
	관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서울 관악구)	○		단기	
	인근 전통시장과 지역공공기관 협약 전담 이용(서울 동작구)	○		단기	
	'1국·1시장' 전통시장 자매결연(서울 성동구)	○		단기	
	해외입국자 가족안심속소 운영(서울 영등포구)	○		단기	
비용경감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찾기' 캠페인(강원)		○	단기	
	착한 임대료 운동(전주시)	○		단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서울 중랑구)	○		단기	
	용산구 소유건축물 임차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서울 용산구)	○		단기	
	공공기관 소유·관리재산 임차인 지원(대전)		○	단기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광주 등)		○	단기	
	공설시장 점포임대료 감면(전남,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	○	단기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성남시)	○		단기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서울 강남구)	○		단기	
	상가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연체이자·관리비 감면(서울 성동구)	○		단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서울 노원구)	○		단기	
	소상공인 임대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대전)		○	단기	
	시·산하기관 보유상가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		○	단기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대전)		○	단기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차료 지원(충북)		○	단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인천)		○	단기	
세제지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전주시, 양주시)	○		단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성남시)	○		단기	
	사회보험료 지원, 지방세 납부유예, 점용료 감면(서울 구로구)	○		단기	
소비촉진	같이해서 가치 있는 소비 '착한 소비' 캠페인(서울 양천구)	○		단기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경북)		○	단기	
	'착한 소비' 운동(서울 양천구)	○		단기	
	우리동네 음식점 배달이용 촉진(서울)		○	단기	
	전통시장 활성화('청년몰' 개장,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확보, 시장상인 역량개발, 생활상권 육성)(서울 동대문구)	○		단기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서울)		○	단기	
	제천형 공공배달서비스 앱 구축(제천시)	○		단기	
	관광사업체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경남)		○	단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광주)		○	단기	
직접지원 (현금·현물)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보수비용 지원(서울)		○	단기	
	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생계비 지원(창원시)	○		단기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서울)		○	단기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신속 지원(대전)		○	단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진주시)	○		단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화성시)	○		단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부산)		○	단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서울)		○	단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사회보험료·카드수수료·피해점포지원)(전북)		○	단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북)		○	단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포항시)	○		단기	
	광진형 긴급운영자금 지원(서울 광진구)	○		단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울산)		○	단기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울릉군)	○		단기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성남시)	○		단기	
	소상공인 경영유지비 지원(전북)		○	단기	
	신규 자영업자 사각지대 지원사업(서울 서초구)	○		단기	
	영업중단 피해업소에 휴업지원금 지원(서울 강동구, 관악구, 성북구)	○		단기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부산, 광주)		○	단기	
	저소득계층 한시생활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울릉군)	○		단기	
	코로나19 피해 업소 소상공인 특별위로금(경기 수원시)	○		단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긴급생활안정지원금(울산)		○	단기	
	피해소상공인 점포재개장 마케팅 등 비용지원(충북)		○	단기	
	피해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제주)		○	단기	
	확진지방문 피해기업(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지원(서울)		○	단기	
	휴업 등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울산)		○	단기	
	코로나 휴업지원금 지원(서울성북구)	○		단기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지원(서울중구)	○		단기	
고용유지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서울광진구, 강남구)	○		단기	
	광진형 행복일자리 사업(서울 광진구)	○		단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서울은평구)	○		단기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서울)		○	단기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언론매체 자료를 기초로 작성

2) 중소기업 분야

-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출피해기업 물류비 상승분 한시적 지원,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 유치 등 수출지원, 산업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직접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 금융지원: 피해기업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 수출지원: 수출피해기업 물류비 상승분 한시적 지원, 해외바이어 화상수출 상담소 운영, 수출고도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사업 발굴 등 수출 마케팅 지원
 - 산업육성: 지역산업 측면에서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유치, 해외진출사업 참가 중소기업 지원
 - 정보기반: 온라인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모바일 쇼핑물 기반 중소기업 제품 판촉지원 등

[표 3-5] 중소기업 분야 지원시책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금융지원	위기기업 특례보증(광주)		○	단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 인하(서울 강서구)	○		단기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전북)		○	단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용인시)	○		단기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상환유예(인천 서구, 서울 용산구)	○		단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서울 마포구)	○		단기	
산업육성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 지원(경북, 충남, 부산, 대구, 전남, 강원)		○		장기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적극 유치(구미시)	○			장기
	해외진출사업 참가 중소기업 지원(서울 구로구)	○		단기	
수출지원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지원사업(서울)		○		장기
	수출피해기업 물류비 상승분 한시적 지원(원주시)	○		단기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참여(인천 남동구)	○			장기
	해외바이어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 운영(광주)		○		장기
	해외바이어 화상수출상담소 운영(KOTRA와 협업)(광주 북구)	○			장기
	비대면 해외마케팅지원 사업(경남)		○	단기	
	수출고도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사업 발굴(충남)		○	단기	
정보기반	다국어최적화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지원(충북)		○		장기
	경북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지원(경북)		○	단기	
	온라인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서울 구로구)	○		단기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지원(충남)		○	단기	
	온라인 마케팅,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충북)		○	단기	
직접지원 (현금·현물)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서울)		○	단기	
	전국 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광주)		○	단기	
	서울형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서울)		○	단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김포시)	○		단기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경남)		○	단기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광주)		○	단기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언론매체 자료를 기초로 작성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의 여파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체 휴·폐업, 영세 학원의 휴원, 실직 등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 및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직접지원: 예술인 긴급지원금,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지원,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소규모 동네책방 지원 등
- 소비촉진: 착한여행 캠페인, 관광시장 회복 촉진 붐업 프로모션, 국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등
- 온라인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문화시설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온라인 도서대출서비스 등
- 매출증대: 드라이브 스루 관광, 숙박업체 특별할인, 투어패스 판매

[표 3-6]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시책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매출증대	경남 드라이브스루 관광 추진(경남)		○	단기	
	숙박업체 특별할인 실시(강원)		○	단기	
	전북 투어패스 판매(전북)		○	단기	
소비촉진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남도여행 으뜸상품'(전남)		○	단기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경기)		○	단기	
	경북 관광그랜드 세일(경북)		○	단기	
	관광시장 회복촉진 붐업프로모션 추진(인천)		○	단기	
온라인제공	국내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부산)		○	단기	
	노들섬 라이브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서울)		○	단기	
	박물관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서울)		○	단기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서울)		○	단기	
	서울시 문화시설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서울)		○	단기	
	온라인 공원프로그램 운영(서울)		○	단기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서울)		○	단기	
	코로나 아웃, 온라인 희망콘서트(서울 도봉구)	○		단기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온라인 간편 도서대출서비스 운영(서울 송파구)	○		단기	
	나들가게 무료배송서비스(서울 송파구)	○		단기	
	청소년 온택트(Ontact) 페스티벌(서울 성북구)	○		단기	
금융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용자지원(충북)		○	단기	
	스포츠산업 특별용자 지원(충북)		○	단기	
	제주관광기금 특별용자(제주)		○	단기	
직접지원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상환유예(제주)		○	단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통영시)	○		단기	
	마케팅과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전북)		○	단기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서울)		○	단기	
	소규모 동네책방 지원(서울)		○	단기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금(인천)		○	단기	
	코로나19 극복 울산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울산)		○	단기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지원(경남)		○	단기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언론매체 자료를 기초로 작성

4) 농·축·수산 분야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생경제 구축의 견지에서 관내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와 온라인 방식 도입, 착한 소비 운동, 중장기적인 마케팅 확대, 농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금융·인력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매출증대: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농산물 꾸러기 판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 등
- 소비촉진: 농산물·화훼 온라인 판매, 피해농산물 소비촉진운동, 온라인 판촉광고 및 상품 동영상 제작비 지원사업,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 운영
- 금융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유예, 화훼유통 개선 지원, 농어촌개발기금 용자금 지원 등
- 직접지원: 피해어업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 요금감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표 3-7] 농·축·수산 분야 지원시책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금융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유예(보성군)	○		단기	
	화훼유통 개선 지원(충북)		○	단기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충북)		○	단기	
매출증대	농어업인 경영안정 및 농수특산물 판매(해남군)	○		단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방식 농축산물 팔아주기(충남)		○	단기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충주시, 울주군, 서산, 포항, 서울 성북구)	○		단기	
	수산물직매장, 친환경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활용(대전)		○	단기	
	피해 농가 돕기 화훼·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경남)		○	단기	
	농산물 꾸러미 판매(경남)		○	단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경북)		○	단기	
	학교급식 종단에 따른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경북)		○	단기	
소비촉진 (온라인 판매)	온라인 과채류 판매(충남)		○	단기	
	농산물·화훼 온라인 판매(강원)		○	단기	
	코로나19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 운영(경북)		○	단기	
	코로나19 피해농산물 소비촉진운동(광주)		○	단기	
	수국 등 화훼 온라인 판매홈페이지 개설(강진군)	○		단기	
	홍삼포크 온라인 판매(증평군)		○	단기	
	온라인 판촉광고 및 상품 동영상 제작비 지원사업(담양군)	○		단기	
요금감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임실군, 함평군)	○		단기	
	코로나 19 대응 농기계임대료 한시적 감면(전남)		○	단기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경주시)	○		단기	
수출지원	코로나 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전북)		○	단기	
직접지원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전북)		○	단기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언론매체 자료를 기초로 작성

5) 정보화기반(ICT) 분야

- 코로나19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탈피, 데이터 중심 플랫폼 또는 신산업 창출과 연계된 혁신 공간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비대면 영역 확대에 따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민원안내 키오스크 운영,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비접촉 기술 및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접촉 기술: 전자출입명부, 민원안내 키오스크 운영, 청소년 온라인 진로 사업운영 등
 - 정보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대면 소통의 ‘스튜디오 틱움’ 개관, 스타트업 플랫폼 운영
 - 산업육성: 스마트팜·스마트축산 전용산업단지 추진, 바이오 비대면 하드웨어 등의 스타트업 인건비보조 및 펀드조성, IoT 안전산업 추진 등

[표 3-8] 정보화기반(ICT) 분야 지원시책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비접촉기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도입(서울 성동구)	○		단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서울 광진구)	○		단기	
	민원안내 키오스크(Kiosk) 운영(서울 마포구)	○		단기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진로수업 운영(서울 강서구)	○		단기	
산업육성	스마트팜·스마트축산 전용산업단지 추진(울산 울주군)	○			장기
	여수 MICE 산업육성 ‘대학생 온라인 경연대회’(여주시)	○			장기
	바이오 비대면 하드웨어 등의 스타트업 인건비보조 및 펀드조성(서울)		○		장기
	IoT 안전산업 추진(대구)		○		장기
정보기반	코로나 대응 스마트시티 사업(원격회의·재택근무 등)(서울)		○		장기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서울 서대문구)	○			장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대규모 SOC투자사업 추진계획(울산, 대전, 인천, 창원시)	○	○		장기
	비대면 소통의 모범사례, ‘스튜디오 틱움’ 개관(서울 영등포구)(온라인 수업, 온라인 주민간담회, 온라인 정례조회)	○		단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서울 구로구)	○			장기
	스타트업 플랫폼운영(창업정보, 투자유치, 전문가자문)(경기)		○		장기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언론매체 자료를 기초로 작성

6) 사회적 가치 분야

-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가치 벤처펀드, 뉴딜 공공일자리아업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일자리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취약계층 생계지원 희망일자리아업, 뉴딜 공공일자리아업 등
- 돌봄지원: 주민참여형 돌봄협동조합 육성사업 등
- 금융지원: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용자),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용자지원 등

[표 3-9] 사회적 가치 분야 지원시책

지원방식	시책	기초	광역	단기	장기
고용·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구미시, 달성군)	○		단기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통한 고용유지(전주시)	○		단기	
	취약계층 생계지원 희망일자리아업(서울 성북구)	○		단기	
	청장년 공공일자리아업(성남시)	○		단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아업(서울 종로구)	○		단기	
	뉴딜 공공일자리아업(서울 성동구)	○		단기	
돌봄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주민참여형 돌봄협동조합 육성사업(서울 영등포구)	○		단기	
금융지원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용자)(경기)		○	단기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용자지원(경기)		○	단기	

7) 재정지원 분야

-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요금감면, 공사비 신속집행,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요금감면: 상하수도요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대부료 등 공공요금 인하, 지방세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 재정지원: 재정신속집행,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선금지급 확대 등

[표 3-10] 재정지원 분야 시책

지원방식	재정 지원	기초	광역	단기	장기
요금감면	도로사용료 감면(서울 동작구)	○		단기	
	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 납부기한 연장(해남군)	○		단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구 달성군)	○		단기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제 지원(서울 서초구)	○		단기	
	코로나19 고통분담 공공요금 인하(태안군)	○		단기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경남)		○	단기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로 감경(인천)		○	단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연장(서울 노원구)	○		단기	
재정지원	상하수도 요금감면(성남시)	○		단기	
	공사비 신속집행,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선금지급 확대(서울)		○	단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서울 광진구)	○		단기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언론매체 자료를 기초로 작성

3. 정책 진단

-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 정책대응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직접지원(현금·현물) 등 주로 단기적 처방 중심임
 - 지자체 시책은 대부분이 현금·현물보조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책들이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수행되고 있어 사회적 긴급재난에 따른 일회성 시책(예: 긴급수당지급 등)으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보다 중장기

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취약계층(예: 노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탄력적인 시책의 마련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와 협조하는 것이 원칙
- 중앙 위주의 수직적 의사결정보다는 지방정부의 재량·자율성을 토대로 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 시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지자체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그동안 결산잉여금, 예비비, 기금, 세출구조조정 등에 의해 3회에 걸친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제4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시책 개발

제1절 포스트 코로나와 패러다임 전환

제2절 시책 개발의 기본 방향

제3절 분야별 시책의 정책차림표

제4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시책 개발

KRILA

제1절

포스트 코로나와 패러다임 전환

1. 디지털 비대면(Untact)⁴⁾ 문화와 사회가 본격 확산될 전망

- 접촉의 시대에서 클릭의 시대로 전환
 - 코로나19는 접촉에서 전염이 되고 있어 비대면 사회로 전환
 - 원격근무·원격의료 등 새로운 근무형태, 전통시장의 온라인 기술 접목
 - 온라인으로 구매, 배송, 상품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 전략
 -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소비문화의 변화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관광, 항공, 여가, 쇼핑 등 이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
 - 식당 등의 자영업에서 배달에 적합한 업종 방식의 변화, 공동 주문 방식의 외식업이 발전할 전망
 - 쇼핑도 직접 방문에 의한 구입보다 온라인 구매, 홈 쇼핑 등 새로운 방식의 신속한 배달 업종이 발전할 전망
- 교육 방식의 변화
 - 전면적으로 화상교육이 도입되는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전환
 - 미네르바 대학 방식 즉, 캠퍼스 없이 화상강의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 사이버 대학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

4)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의미하는 “언(un)”을 붙인 신조어이며, 비대면(非對面)의 영어식 표현으로 같은 의미의 영어권 용어로는 non-contact(비접촉), zero-contact(무접촉) 등을 들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음

○ 문화생활의 변화

- 집에서 시청하는 방식 확산(넷플릭스가 활성화되는 이유임)
- 공연 문화도 관객이 없는 공연에 대비하는 공급시스템, 관객 없는 스포츠 진행 상황에 적응하여 관객이 없는 스포츠의 경우에 관객이 청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예술가,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증대

-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돌봄, 고용 등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공공성 강화
 - 정부에 의한 공적 마스크 제공,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및 공공성 강화를 경험하고 있음
 - 확진자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통해 개인의 활동이 사회에 공개되고, 자가 격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활동이 유보되었음
-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공동체의 합의보다는 정부의 통제력,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한국은 행정력으로 바이러스 확산 속도 보다 빠르게 추적 관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논할 여지는 없었음

3.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공동체 사회의 중요성 증가

- 코로나19로 접촉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교환도 어려워질 것이며, 폐쇄경제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게 자급자족의 수준이 강화될 것임
 - 한국처럼 자원이 없어서 소규모 개방경제를 채택한 국가는 영향이 더 클 것이며, 당장 식량과 에너지는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해 시장 및 노동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경제성장 둔화, 빈부격차 심화 등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⁵⁾

- 코로나19로 직주분리(職住分離)에서 직주일치(職住一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재택근무,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의 시대에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른 속도로 가능해질 것임
 -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회가 중요해지고 자치가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4.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

-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의 속도와 심각성은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모든 계층에 기본적인 소득 지원을 시도한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임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재정지출,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표 4-1】 COVID-19에 대응한 신규 정책 또는 기존 사회안전망 장치의 확대

국가별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	기존의 실업보험 확대	기존의 자산 상황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확대	특정집단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이전	모든 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조세, 사회보장부담, 주택비용 등에 대한 유예 등을 포함하는 지출에 대한 직접지원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칠레		✓	✓	✓		
콜롬비아			✓	✓		✓

- 5) 2020년 6월, KDI는 글로벌 톱 싱크탱크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 어젠다: 글로벌 관점과 국가적 관점(Growth in a Time of Change: Global and Country Perspectives on a New Agenda)'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국가별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	기존의 실업보험 확대	기존의 자산 상황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확대	특정집단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이전	모든 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조세, 사회보장부담, 주택비용 등에 대한 유예 등을 포함하는 지출에 대한 직접지원
체코	✓			✓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
그리스		✓		✓		✓
헝가리	✓			✓		✓
아이스란드	✓	✓		✓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한국	✓			✓	✓	✓
라트비아	✓	✓	✓	✓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폴란드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터키	✓			✓		
영국	✓		✓	✓		✓
미국(연방정부)	✓	✓		✓	✓	✓

자료: OECD(2020).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Supporting livelihoods during the COVID-19 crisis: Closing the gaps in safety nets

제2절 시책 개발의 기본 방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고려

- 디지털 비대면(Untact) 문화와 사회가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언택트 시대에 재택근무, 원격회의, 온라인 거래 등 비대면 방식 확대
 - 모바일 앱, 전통시장의 온라인 기술 접목, 교육콘텐츠플랫폼 등 정보통신 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화
-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증대
 - 정부에 의한 공적 마스크 제공,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강화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 정부의 통제력 강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공동체 사회 강화
 - 코로나19로 접촉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교환도 어려워질 것이며, 폐쇄경제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게 자급자족의 수준이 강화
 -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원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 및 지역공동체 사회의 중요성이 증가

2. 시책의 유형 구분

- 코로나19 대응 지자체별 지원시책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 정책수단: 직접지원(현금·현물), 금융지원, 재정·세제 지원 등
 - 지원기능: 복지, 산업, 문화관광, 농수산 등
 - 정책효과: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실업구제, 창업, 소비(매출)진작 등

[표 4-2]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지원대책의 유형 구분 사례

구분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창원시
코로나19 대책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적기금융 지원	생계비 긴급 지원	소상공인
	시민 소비 촉진	고용 안정	돌봄·일자리 확대	중소기업·일자리
	피해 업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복지·세제
		중소기업 수출지원 언택트(Untact:비대면) 플랫폼 구축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예술·관광 기타
구분	제주도	경남도	밀양시	사천시
코로나19 대책 분야	소상공인	생활·복지·안전	긴급지원	생활·복지·안전
	생활·복지·안전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일자리	산업일자리	기업지원·일자리	중소기업
	관광	세제계약	세제감면	산업·일자리
	농어업인	문화·예술·관광·체육	농업지원	세제·계약
	기타	농어업인		문화·관광·체육 농·어업인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의 시책 활용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7개 분야 시책으로 구분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 중소기업 분야
- 문화·체육·관광 분야
- 농·축·수산 분야
- 정보화기반(ICT) 분야
- 사회적 가치 분야
- 재정지원 분야

3. 시책의 정책차림표 구성

- 코로나19 대응 시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각 시책에 대한 정책차림표를 작성함
- 정책차림표의 구성
 - 분야별 지원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을 포함하여 구성

[표 4-3] 시책의 정책차림표 구성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	시책의 핵심내용 기술	금융지원	광역 (시도)	단기
		소비촉진		
		매출증대		
		산업육성		
		수출지원	기초 (시군구)	장기
		정보기반		
		직접지원(현금·현물)		
		재정지원		

□ (예시) 시책 :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 조기발행, 1인당 구매한도 상향, 상품권 확대발행	매출증대	광역·기초	단기

제3절 분야별 시책의 정책차림표

1. 개요

- 7개 분야에 걸쳐 52개 시책 개발
 -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8개)
 - 중소기업 분야(4개)
 - 문화·체육·관광 분야(10개)
 - 농·축·수산 분야(10개)
 - 정보화기반(ICT) 분야(9개)
 - 사회적 가치 분야(8개)
 - 재정지원 분야(3개)
-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을 토대로 정책차림표 구성

2.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1) 개요

-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관련 시책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지원, 지역의 사회적 관광기반 구축 등 매출증대와 정보기반 관련 시책
-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사용자·대부료 인하, 금융비용 보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시책 등을 제시함

2) 정책차림표

-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8개 시책에 대해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상품권의 할인율을 3~6개월 기간 동안 6~10%로 인상하여 판매 *현재 할인율 3%(평상시)~5%(특별할인) 수준	매출증대	광역 기초	단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부담해소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사용량의 30~50% 경감	사용료 감면	광역 기초	단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상품권 구입 시 지원되는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대신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립금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 도입 *편의점 1%, 병의원·학원 5%, 전통시장 10% 캐시백 적립	매출증대	광역 기초	단기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 지원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등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여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신력 있는 유통채널을 지자체에서 제공	정보기반	광역 기초	장기
지역의 사회적 관광 기반 구축	스토리텔링, 상담, 명상 등을 포괄하는 치유관광, 사회적 관광(노인, 장애인, 아이 돌봄) 플랫폼 개발	정보기반	행안부, 광역	장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긴급자금 요청시 절차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제도개선	광역 기초	장기
소상공인 국·공유재산 대부로 인하	현재의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까지 인하(*현재 국유재산은 재산가액의 3%, 공유재산은 재산가액의 5%의 임대료 지급)	요금감면	광역 기초	단기
고금리 대출이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방식	금융지원	광역 기초	단기

3. 중소기업 분야

1) 개요

-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등 소비촉진과 규제완화 시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식의 시책을 제시함

2) 정책차림표

- 중소기업 분야의 4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오래된 중고차를 고연비의 친환경 신차로 교환할 경우 중고차의 상태와 신차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미국의 자동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Car Allowance Rebate System)	소비촉진	기초	단기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제도 적용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 *출자출연기관을 한시적으로 포함	규제완화	기초	단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기준 완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금액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이 적용되는 범위 확대	규제완화	광역 기초	단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중소기업에 대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세제지원	광역	단기

4. 문화·체육·관광 분야

1) 개요

- 문화예술분야 영상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나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를 비롯하여 드론으로 먹자골목 가상여행, 휴직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
- 관광버스·영화관을 활용한 학생 등하교 및 각종 행사개최 등 매출증대 시책, 그리고 관광안심존·자가격리호텔 인증제도, 지역관광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체육시설 이용바우처를 통한 경영지원 시책 등을 제시함

2) 정책차림표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10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영상콘텐츠의 신규 기획 및 제작 지원	직접지원	기초	단기
예술하기 좋은 날, 더 넓은 라운드 테이블	전국의 지역문화 활동가, 공연 및 축제 관계자, 예술가, 기획자 100명이 화상회의에 동시에 접속 1분씩 발언	온라인 제공	기초	단기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로 취소된 실내문화활동에 대해 공모 선정하여 온라인 생중계하거나, K-POP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안전으로 하나 되는 콘서트(가칭)” 온라인 생중계	온라인 제공	광역 기초	단기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여행	드론으로 지역 먹자골목길을 촬영하여 지자체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영상물을 제공	소비진작	기초	단기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광 인센티브 세분화로 관광사업 활성화	코로나19로 인센티브 인원조건(20명)을 채우지 못하는 관광사가 많으므로 기존의 관광 인센티브를 세분화	매출증대	기초	단기
관광버스, 영화관을 이용한 학생 등하교 관리 및 강의, 행사 개최	관광버스를 학생 등하교에 이용하거나 각종 행사의 영화관 내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위축된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	매출증대	기초	단기
관광안심존 (safe-zone)지정 및 자가격리 호텔 인증 제도	코로나19 인증에 따른 관광안심지역 지정 및 “자가격리 호텔” 인증제를 실시하여 주요 호텔 예약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	정보제공	기초	단기
휴직 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무급휴직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명소 발굴 및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지역화폐를 활동비 및 임금으로 지급	일자리 제공	기초	단기
주민세 및 개인 대상 보조금 일부를 생활 SOC 문화체육시설 이용 바우처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문화체육 시설 운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및 노인, 육아를 지닌 가정 등 개인 대상의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쿠폰으로 활용	경영지원	기초	단기
지역 관광자원 통합 시스템 구축	지자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지역관광정보를 통합하여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정보기반	광역 기초	장기

5. 농·축·수산 분야

1) 개요

- 주민자치기구 중심의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 지역화폐와 ICT를 활용한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장기적 시책을 비롯하여 농축수산 공공 클라우드 펀딩 조성, 단기적·계절적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품앗이 등 일자리창출 관련 시책
- 정보기반 관련 가상현실·증강현실 로컬푸드 안테나샵 구축, 온라인 농·축·수산물거래소 운영,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2.0 조성 등 장기적 시책, “역인클로저 운동(Reverse-Enclosure Movement)”과 공유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산화 추진,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창출을 활용한 농민수당지급 등의 시책을 제시함

2) 정책차림표

- 농·축·수산 분야의 10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주민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에 도시락·꽃 배달사업,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등 추진, 도농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직매시스템 및 로컬푸드 협업체계 구축	소비진작	기초	단기
지역화폐와 ICT·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지역화폐 전용거래를 전제로 한 공공 배달앱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공공배달앱과 새로운 교통·운반기술 등을 활용한 공공물류·택배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농·수·축산물 수요진작 및 지역일자리 창출	소비진작	광역 기초	장기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비대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로컬푸드 안테나샵 구축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 전과정에 대한 3D 체험콘텐츠 개발, 온라인 증강현실 안테나샵을 구축하고 체험과 특산물 구매를 연계한 상품을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농·축·수산물 마케팅 채널 확보	정보기반	광역	장기
지역 상생경제를 위한 농·축·수산 공공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업생산단체 등이 중심이 된 농사펀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체철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품목별 크라우드 펀딩 수행	매출증대	광역 기초	장기
지역내 농·축·수산 도매전용 결제 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농·축·수산물 거래소 운영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방식	정보기반	광역	장기
“역인클로저 운동 (Reverse-Enclosure Movement)”과 공유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산화 추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역인클로저 운동”의 시행을 통한 지역자산화 추진, 지역내 유희·저활용 국·공유재산의 발굴 및 지역공동체 활용권한 확대, 공유자산 관리를 통해 마을수익의 창출과 마을기금의 적립 활성화	정보제공	기초	장기
재생에너지 자본 투자로 창출한 수익을 활용한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지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농민수당 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귀농·귀촌 등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	정보제공	기초	장기
단기적·계절적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농·산·어촌의 단기 일손투입에 대한 농가별 수요조사 실시, 농가별 총 단기일자리 수요에 따른 공공재원 확보 및 연중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기초	단기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품앗이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능나눔 품앗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타임뱅크 방식(시간당 노동임금 지급)의 지역내 품앗이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초	단기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2.0 조성	스마트팜 2.0의 도입을 위한 지역 농·축·수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팜 2.0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성과공유 및 확산	정보기반	광역 기초	장기

6. 정보화기반(ICT) 분야

1) 개요

- 저소득층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바일 라이프라인(Mobile Lifeline)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 디지털 뉴딜시대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문연구기관 신설 등 직접(현금)지원 시책
-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지자체 차원에서 ICT 기반 감염병 예방 플랫폼 구축사업, ICT활용 버스노선 운행보조 확대 및 노선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 시책을 제공함

2) 정책차림표

- 정보화기반(ICT) 분야의 9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모바일 라이프라인 (Mobile Lifeline) 지원사업	저소득층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Low-Income Consumers)을 수급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직접지원	기초	단기
AI 무장한 코로나 19 방역로봇 다중 이용시설 대여서비스 지원사업	최근 개발·출시된 ICT 탑재 방역로봇 다중이용시설 대여 서비스 실시, 지자체에서 구입 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시행 가능	직접지원	기초	단기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	스마트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	직접지원	기초	단기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초·중·고 학습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온라인 제공	기초	장기
디지털 뉴딜시대 R&D개발을 위한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정책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벤처 창업 기업 지원육성 정책 시행, 중·장기 측면에서의 재정지원	직접지원	광역 기초	장기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원격진료서비스 제공 사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거점으로 AI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위의 판독 업무를 보조	직접지원	광역 기초	장기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문연구기관 신설	국가방역체계에 부합하는 R&D 연구를 전담할 연구기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직접지원	광역	장기
지자체 차원에서의 ICT 기반 감염병 예방 플랫폼 구축 사업	감염병 발생시 스스로 감염병의 유사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정보기반	광역 기초	장기
ICT활용 버스노선 운행 보조 확대 및 노선관리 시스템 구축	버스 노선별 운행횟수를 증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승객 수 만큼 버스당 이용객 수를 낮출 수 있도록 ICT 기반의 노선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기반	광역 기초	장기

7. 사회적 가치 분야

1) 개요

- 온라인 Agile 정책플랫폼 운영,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지식경연 한마당 등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유·초·중등학생의 온라인수업 멘토링 프로그램,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활성화 ‘굿굿즈’ 운동, 비대면 민간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사업 등 돌봄지원,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시책
-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신부 지원 프로그램, 비대면 코로나19 마음챙김 사업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시책,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온-오프 착한소비 운동 등의 시책을 제공함

2) 정책차림표

- 사회적 가치 분야의 8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온라인 Agile 정책 플랫폼 운영	Agile 정책플랫폼은 현장전문가(10년 이상), 지역기업, 협회, 단체,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가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시간으로 주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	정보제공	기초	단기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지식경연 한마당	모든 사람이 교사이며, 모든 사람이 학생(Everybody is a teacher, everybody is a learner)이라는 모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 지식을 경연하고, 이를 정책의 소비자인 시민청중이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방식	정보제공	기초	단기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유·초·중등학생의 온라인수업 멘토링 프로그램	돌봄 공백이 길어지는 유아, 초등학생과 비대면 강의의 자기화로 집에 머물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계하는 방식	돌봄지원	기초	단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활성화 ‘굿굿즈’로 취약계층 매칭	굿굿즈(Good Goods)란 수익의 일부가 선행에 쓰이는 상품을 말하며, 기부단체에서 후원자에게 보상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됨. 기부자들에게 배지, 고무팔찌, 스티커, 이모티콘 등의 굿굿즈를 지급하여 연대감과 소속감을 심어줌	재능기부	기초	단기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신부 지원프로그램	코로나19 이후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스트레스 완화 및 영양 보충 프로그램, 비대면 출산 및 산후관리방식 제안 등 실시	돌봄지원	기초	단기
비대면 민간 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지역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상상황 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	온라인 제공	기초	단기
자원봉사활동의 결합을 통한 온-오프 착한소비 운동	지역 특산물 중에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과 생산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선(善)결제 및 나눔 운동을 지역화페, 타임뱅크, 봉사활동시간 연계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결합하여 실물 인센티브를 제공	소비진작	기초	단기
비대면 코로나19 마음챙김 사업	비대면 온라인 정기상담, 24시간 이내에 상담자가 답변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심리건강 특별 게시판상담실’ 운영	돌봄지원	기초	단기

8. 재정지원 분야

1) 개요

- 계획계약제도를 활용한 재정협력 플랫폼 구축, 위기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재정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보통교부세 정산제도, 부동산교부세 확충 재원을 활용한 추가재원 확보 지원시책을 제공함

2) 정책차림표

- 재정지원 분야의 3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의 주요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차림표를 구성함

시책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계획계약제도를 활용한 중앙-지방간 재정협력 활성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계획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하는 재정협력 플랫폼 구축	직접지원	광역 기초	단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위기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 이 경우 투자심사, 사업타당성조사, 채무발행, 예산편성 등 일련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단축 및 간소화하여 재정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도개선	광역 기초	단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추가재원 확보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보통교부세 정산제도, 부동산교부세 확충재원을 통해 코로나 대응 추가 재원을 확보	제도개선	광역 기초	단기

제5장

분야별 시책의 주요내용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제2절 중소기업 분야

제3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4절 농·축·수산 분야

제5절 정보화기반(ICT) 분야

제6절 사회적 가치 분야

제7절 재정지원 분야

제5장

분야별 시책의 주요내용

KRILA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1.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하므로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높음
-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3%~10% 선이며, 할인액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50% 지급됨
- 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 규모는 2.7조원이었으며, 전국적인 확대 발행을 통해 발행액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평상시에는 3%, 명절 등 특별할인 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중임
-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6개월 기간 동안 6~10%로 인상함으로써, 상품권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할인율 인상에 따른 상품권의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구매금액 제한을 유지
- 이와 함께 구매자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음식점, 마트, 학원, 병원 등 가맹점을 모집해 수시로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시책의 효과

- 상품권 할인율 인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는 물론, 특히 지역 소비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따른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부담 해소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
- 도·농복합시와 농촌지역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청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운영경비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시책의 내용

- 각 지자체는 상하수도 요금을 경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을 적용토록 함
-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량의 30~50%를 경감
-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인 등이 시책 대상
- 또한 가정용 수도 사용자들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

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출산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아 요금 감면 지원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을 덜어주는 효과
- 상하수도 사용이 특히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 그리고 다자녀, 취약계층 가정의 고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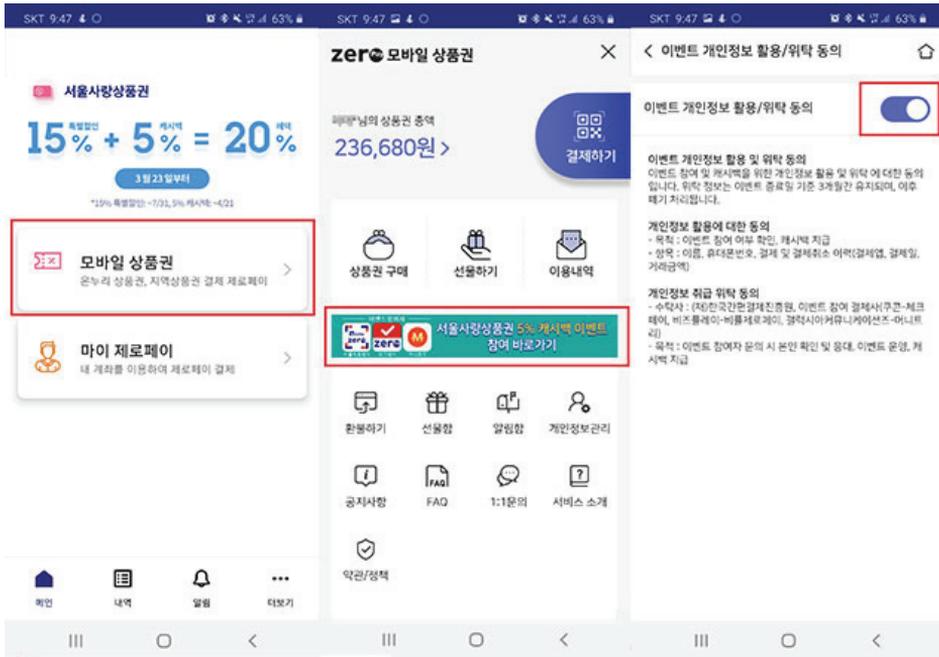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모바일로 확대하게 된다면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1회 한시적으로(3개월) 개인의 체크/신용카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나,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기간 설정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한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음
- 그러나 현금성 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어차피 소비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대체적 소비를 하는 것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매출 증대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전자제품 구입, 고가 사치품 구입 등의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시책의 내용

- 상품권 구입, 소비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된다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이 가능할 것임

- 모바일 플랫폼에서 품목별·점포별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함
- 가령 상품권 구입 시 지원되는 할인율(3%~10%)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대신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특정 업체·업종에서 결제 시 차등해서 적립금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즉, 편의점 등에서 소비 시 1% 캐시백이 적립된다면, 지역 내 병원, 학원 등을 이용 시 5% 캐시백 적립, 전통시장 농수산물 가게에서 축산물, 수산물을 구매 시 10% 적립 등으로 차등화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적립된 캐시백을 현금화 하거나 추가적으로 상품권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적립률에 따른 캐시백을 지급함

[그림 5-1] 제로페이 캐시백 혜택 사용방법



□ 시책의 효과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어 소비진작에 효과
-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구매 후 현금화 과정에서 소위 ‘깡’을 할 우려가 있으나, 모바일 기반의 결제시스템의 경우 구매 및 사용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혜택이 직접적인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사용실적에 기초하게 되어, 특정 상품·업종에 대한 가격보조, 할인의 혜택으로 지급됨

4. 지역의 사회적 관광기반 구축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수도권 이외의 경우 사회적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무너진 지역의 관광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령 특수 분야 관광으로 노인 관광, 장애인 관광, 치매노인 관광 등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관광 수요가 해외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국내 관광으로 전환될 것이고,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 관광지로 돌리려면 고급화, 새로운 상품, 패키지화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 인프라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국단위 플랫폼 개발 등 사회적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을 위한 인프라 투자
 - 초기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일반적인 관광이 어려운 관광 취약

- 계층에 대한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등 준비
- 노인 관광의 경우 지역에 여행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사가 필요하고, 노인 케어를 위한 안전시설 개보수가 필요함
- 안전을 위한 상시대기, 상주인력 확보(간호인력, 병원 의료진, 긴급진료 등)도 고려되어야 함
- 관광지에서 공공 WiFi 인프라를 확대하여 센서를 부착한 노인(혹은 아동)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알람이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음
- 지역기반 공급자와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를 위한 기반 구축
- 사회서비스(노인 서비스, 아이 돌봄) 공급자는 지역실정과 수요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행정안전부의 경우 전국단위 플랫폼 개발을 통해 중개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또한 스토리텔링, 상담, 명상 등을 포괄하는 치유관광, 사회적 관광 패키지 개발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국가가 담당
- 이들 관광자원 인력들에 대한 자격증, 평가 등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고, 소방, 경찰, 119 등에서 안전관리를 제공하도록 함

□ 시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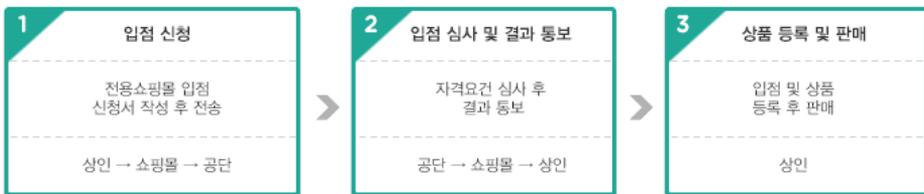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이동제한이라는 관광산업 위기를 국내관광의 다양화, 고급화, 패키지화로 국내 관광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 품질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국내 관광산업 기반의 확충 및 고급화되는 향후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5.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 지원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외출자제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실제 매출 급감이 심각함
- 온라인 기반의 새벽배송 신선식품 서비스의 경우 제품의 규격화 및 유통채널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저 없이 구매를 선택하는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농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이러한 제품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고객을 발굴함으로써 매출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임
- 이밖에도 우체국 전통시장,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팔도시장, 사람풍경 등 온라인 유통채널이 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와 차별성이 없고, 통합되지 않고 운영주체별로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홍보도 부족한 실정임

[그림 5-2] 온누리 전통시장관 입점절차



□ 시책의 내용

-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상, 반찬가게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지자체에서 개발·운영
- 소비자의 경우 평소 이용하던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등 제품을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는 공신력 있는 유통채널을 제공하고 시장상인들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며, 시장상인들은 내방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온라인 장터 매출로 전환이 가능함
- 또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배송 과정에서 단계별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확인하도록 기반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책의 효과

- 전통시장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물건을 집으로 배달해주게 되면, 소비자들이 외출이 꺼려지는 때에 온라인 동네시장 장보기로 전통시장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됨
- 부가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 제품이 소비자에게 근거리 배송되는 근거리 배송수요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유통 현대화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인력의 필요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음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2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매출액 감소율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평균 50.1%, 전통시장은 평균 49% 감소
- 국내 자영업자들의 약 70%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는 상황임

-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도입, 소상공인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등 근본적인 정책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시책의 내용

-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긴급자금 요청 시 절차와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함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월 납입액의 일부(30~50%)를 지원하여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연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납입금 일부를 지원
- 직장인과 비교하여 연차 및 연차수당이 부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유급 병가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연 15일 이내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시책의 효과

-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 저소득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실질적인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음
-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재기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높음

7. 소상공인 국·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비용중 고정비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와 상가임대료로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는 이러한 고정경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수임
- 코로나 19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의 지출은 곧바로 적자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오게 되며, 임대료 지출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악화에 숨통을 트여줄 것임

□ 시책의 내용

- 현재 국가소유 재산에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의 3%,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의 5%의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 현재의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까지 낮추어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개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며, 지원의 혜택이 일부 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최대 경감액 기준(연 2천만원 이내)을 설정하도록 함
- 또한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 공항 내 편의매점(공항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공사), 항만 임대시설(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시설에 대해서도 3~6개월 기간 동안 30%~50%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함

□ 시책의 효과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가임대료의 감면으로 일시적 경영난 악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고 동시에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보존을 도모할 수 있음

8. 고금리 대출이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유동성 자금의 지원은 고정비 지출의 경감을 돕는 정책과 병행하여 실시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경영난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조달 목적의 대출인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출상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책정할 가능성이 높음

□ 시책의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만크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음
- 가령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금리가 4~5%로 책정이 되었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2~3%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2% 내외로 낮춰주는 방식임
- 또한 대출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데, 보증보험의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줄 수 있음

□ 시책의 효과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고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기여함

제2절 중소기업 분야

1.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중고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중고차 업계 “자동차 산업 보호서 외면 당했다”, IT Choson 2020/5/3 기사 참고)
 - 신차의 경우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는 정책에 따라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중고차 판매가 크게 감소되었음
 - 3월 신차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반면 중고차 판매는 9.9% 감소
- 2017년 기준 중고차 사업체수는 5,913곳이며 이중 판매업자의 99.9%, 종사자의 95.5%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 1회, 한국경제 2019/12/9 기사 참고)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일수록 불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고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시책의 내용

- 과거 금융위기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자동차 보상판매 프로그램(Car Allowance Rebate System)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를 통해 중고차 거래를 촉진함
 - 미국에서 시행한 자동차 보상판매 프로그램은 저연비의 오래된 중고차를 고연비의 친환경 신차로 교환할 경우 중고차의 상태와 신차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3,500 혹은 \$4,500)을 지원해주는 방식임

- 2009.7.27 \$10억의 재원을 가지고 2009.11.1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높은 수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20억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2009.8.25에 조기 종료됨
 -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래된 중고차를 고연비의 친환경 중고차로 교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함
- 미국의 자동차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소비진작과 환경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회의적이지만 미래 시점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는 가졌던 것으로 평가됨

□ 시책의 효과

- 침체되어 있는 중고차 거래 시장을 단기간 내에 활성화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일 경우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중고차 보상에 해당되는 연비나 연식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환경개선과 먼 미래 시점의 소비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적용범위 확대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큼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경향신문, 2020.05.10 기사 참조)⁶⁾
 - 피해내역 중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가장 많이(약 81%) 거론됨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102110025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등의 정책은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요구됨

□ 시책의 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적용 공공기관은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⑥지방의료원이 속함
 -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들 기관이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효과

-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수출을 통한 판매와 비교하여 판매대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신속히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음
- 생산한 제품을 정부에게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받는다라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에 비해 부작용이 작음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기준 완화기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의 대상 금액 기준을 완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필요

□ 시책의 내용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되는 제품이 중소기업 자간의 경쟁제품이 아닌 것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 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 현재 조달물품 금액의 1억원 미만일 경우 소기업간 제한경쟁이 명시화되어 있고 1억원 이상~2.1억원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명시화되어 있음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기준의 일시적 완화
 - 금액 기준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의 정부기관에 대한 판매 기회를 증대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에 따라 판매 부진에 처한 피해중소기업의 매출증대와 경영애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정부기관에 대한 제품 판매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7) 유사한 시책으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준 완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4.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로 자금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세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 희망 지원정책 중 조세 감면 및 유예가 25.0%로 자금 유동성 지원이(29.7%)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임 (매일경제, 2020.5.12 기사 참조)
- 현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간의 유예나 세율인하 등 다양한 세제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보다 좀 더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책의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임
 - 지방세에 속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고 있음
- 세율조정이나 세액감면보다는 세금에 대하여 면제를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시책의 효과

- 은행을 통한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세금 감면이나 면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3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1.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히 침체된 지방자치단체 예술인의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문화예술 생태계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지원
 - 지자체 곳곳에서 예술백신 프로젝트가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함

□ 시책의 내용

- 코로나19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분야 영상콘텐츠의 신규 기획 및 제작 지원
 - 코로나19의 극복을 주제로 한 영화/만화 제작 및 공유
 - 비대면 사회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감상 콘텐츠 제작 및 공유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예술 치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유
 -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예술 놀이 콘텐츠 제작 및 공유
- 긴급 작품구입 및 활용(경기문화재단 참고)
 - 작품 판로가 막힌 전업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수요처에 대여
 - 구입한 작품은 이후 지자체 미술관에 전시(경기문화재단의 경우 향후 구체화될 '경기미술은행'에 전시할 예정)

□ 시책의 효과

- 사회참여형 예술활동 공모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주민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실효적 공모 지원이 가능함

- 예술인들은 향후 도래할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키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음
-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예술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주민들은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한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음(경기문화재단 드라이빙 씨어터)
- 주민들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음



주: 경기도형 예술백신 프로젝트

2. 예술하기 좋은 날, 더 넓은 라운드 테이블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 활동 위축
- 안부를 묻고 지역 피해사례 및 극복방법에 대하여 공유 필요

시책의 내용

- 새로운 소통의 방식과 대안 마련을 통해 고립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도전의식 고취

- 전국의 지역문화 활동가, 공연 및 축제 관계자, 예술가, 기획자 100명이 화상회의에 동시에 접속해서 각자 1분씩 발언하는 형식을 취함
- 회의 이후 ‘생각지도’를 작성하여 공유
 - * 서울문화재단 THE 넓은 라운드테이블 기록집 참고

□ 시책의 효과

-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코로나19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
- 논의된 이야기를 기록하여 이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재난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음



주: 경인데일리. 오산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시민 100인 라운드 테이블

3.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업계 종사자들의 활동영역을 넓힘

-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문화 관람을 누릴 수 있도록 어디서든 문화예술사업 추진
- 비대면 문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연 수요 증대
 - IT기술 발달에 따라 코로나19의 비대면 문화에 기반한 예술관람 인식의 변화 확대
 - 유튜브,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전세계 온라인 예술공연의 접근 기회 증가
- K-방역수출과 함께 K-POP의 인지도를 활용한 온라인 K-culture로 확대 필요
 - K-POP, 코로나19의 선진방역체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등의 평화, 안전,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성을 활용한 문화이미지 제고 확대 필요

□ 시책의 내용

-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실내 문화 활동들을 선정하여 기관에서 추천한 테마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이는 프로젝트
 -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바니〉, 〈마술피리〉 등 오페라를 통해 만나는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
- 온라인 응원과 공연실황 영상 시청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선물 증정
- 문화예술단체가 아카이빙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녹화본 공개(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마린스키 극장, 볼쇼이 극장 등은 정해진 기한 안에만 관람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함)
- 온라인으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랜선 전시’, ‘VR 전시’ 추진 (참고) VR 전시를 실시하고 있는 사비나 미술관⁸⁾
- 방탄소년단 등의 K-POP 주류단체와 세계의 유명한 엔터테이너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안전으로 하나 되는 콘서트(가칭)”을 개최하여 온라인 생중계 개최

8) http://www.savinamuseum.com/upload/vr_data/destiny_z200417_8296A/

□ 시책의 효과

- 예술단체와 상생과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생중계로 접근성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 향유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소비자층이 확대될 수 있음
 - 문화예술단체는 미디어 분야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음
 - 문화예술 소외계층(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도 서비스 향유 가능
- VR전시, 랜선 전시의 경우 전문 큐레이터의 음성해설을 추가하여 전시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문화예술단체는 온라인 전시, 공연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온라인 K-culture의 경우 국가의 브랜드 파워 강화에 기초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



주: 힘내라 콘서트 서울시 오페라단 특독 모차르트

4.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 여행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임
- 주요 관광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됨
-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의 골목상권을 홍보하고 음식 등을 배달시킬 수 있는 가상 여행 제안

□ 시책의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의 협력 하에 드론으로 지역 골목길을 촬영하여 1인칭 시점으로 여행하는 느낌의 영상물을 제작
- 지자체 유튜브 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여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도록 함
- 펍수, 뽀로로 등 유명 마스코트 등과 협력하여 흥미진진한 나레이션을 삽입
- 골목길에 인접한 업체들과 제휴로 방문 예약 및 선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과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 주문을 확대

□ 시책의 효과

- 지역 유명 음식거리 및 골목상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의 기회
- 골목상권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용률 및 코로나 이후 방문객 증가에 기여함



주: 대구 교동시장 먹자골목

5. 관광 인센티브 세분화로 관광사업 활성화)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하는 여행사가 많은 지금 관광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국내관광의 경우 각 시·군·구별로 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음
 - 20명 이상 인원을 모집해야 인센티브가 나오거나 인센티브를 버스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인원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관광사가 많이 있음
-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광 인센티브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지자체별로 관광과에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적어도 10명에서 15명만 관광에 참여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함

9) 코로나 19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번호: 772.

- 실내 관광지 보다는 외부 관광지를 선호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지원조건을 추가해야 함
- 관광지에 사람이 적은 주중에 방문하거나, 외부 관광지로만 코스를 구성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 시책의 효과

- 관광객들은 적은 인원으로 관광 상품을 즐길 수 있기에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을 즐길 수 있음
- 관광사는 인원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버스대여 문제로 취소된 여행 상품을 지자체에게 판매할 수 있음
- 수학여행·단체여행 취소로 일거리가 줄어든 관광버스 업계에 도움이 됨



주: 경남매일뉴스. 거창군을 방문한 단체관광객.

6. 관광버스·영화관을 이용한 학생 등·하교 관리 및 강의·행사 개최¹⁰⁾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관광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광버스 사업도 영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등·하교하면 지하철, 버스에 많은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휴무 또는 운영 단축 중인 영화관 급증
 - 대학 강의 등 학술행사를 온라인 화상 회의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집중도 하락, 해킹 우려,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학술심포지움, 세미나, 포럼 등 대학과 민간의 학술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 따라서 휴무 중인 영화관 및 상영관을 활용한 강의 및 학술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정부에서 보장하고 장려해주는 사업을 제안함

□ 시책의 내용

-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관리. 자리를 지정하고 탑승 인원을 제한함
 - 탑승한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함
 - 관광버스 업체, 교육부, 학교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이동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제도가 안착이 되면 다양한 학생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인 방역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보장
- 영화관 대관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홍보함으로써 각종 행사의 영화관 내 개

10) 코로나 19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번호: 757. ; 코로나 19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번호: 678

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 교육학술행사 유관기관과 극장업계 등이 함께 신청 플랫폼 조성
-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는 학술모임 등의 신청을 받고 본 사업에 영화관 대관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관을 연계
- 대관 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또는 한시적 이벤트 개최로 대학교, 학술재단 및 연구소들의 참여를 독려함
-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영화관 대관 행사에 참여함

□ 시책의 효과

- 위축된 문화관광 사업에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 방역이 완료된 관광버스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 등교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의 경우,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음
 - 등·하굣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극장업계의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
 - 대관료/시설이용료 뿐만 아니라 다과 제공 등을 활용한 부가 수입 확대와 식품 재고에 따른 비용절감에도 기여함
- 국내 주요 학술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통해 교육과 학술활동을 장려함
 - 2차 대유행에 따른 우려 상황에서 2학기 대학 강의 및 학술행사 개최와 극장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와 대책으로 활용 가능함
 - 유희 영화관 인력이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주최 측의 방역 부담을 줄여줌
 - 영화관은 학술행사 개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음



주: 오산시민신문. 관광버스를 이용해 등하고 하는 오산대호중 학생들



주: 중앙일보.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첫날 영화관.

7. 관광 안심존(safe-zone) 지정 및 자가격리 호텔 인증제도¹¹⁾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소규모 그룹 및 가족단위의 관광활동 증대
 - 코로나19로 비대면의 관광인식에 따라 소규모 및 가족단위의 관광계획이 증가하고 있음
 - 관광계획을 세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규모의 펜션, 관광지역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관광수요자 맞춤형의 관광 안심지역을 발굴 필요
-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자가 격리 숙소는 자가격리자의 다양한 불편 사항

11) 코로나 19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번호: 753.

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격리시설 이탈 등 위험성이 존재함

- 비즈니스 목적이거나 친지 등 가족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해서 격리시설의 선택지와 편의성을 높이면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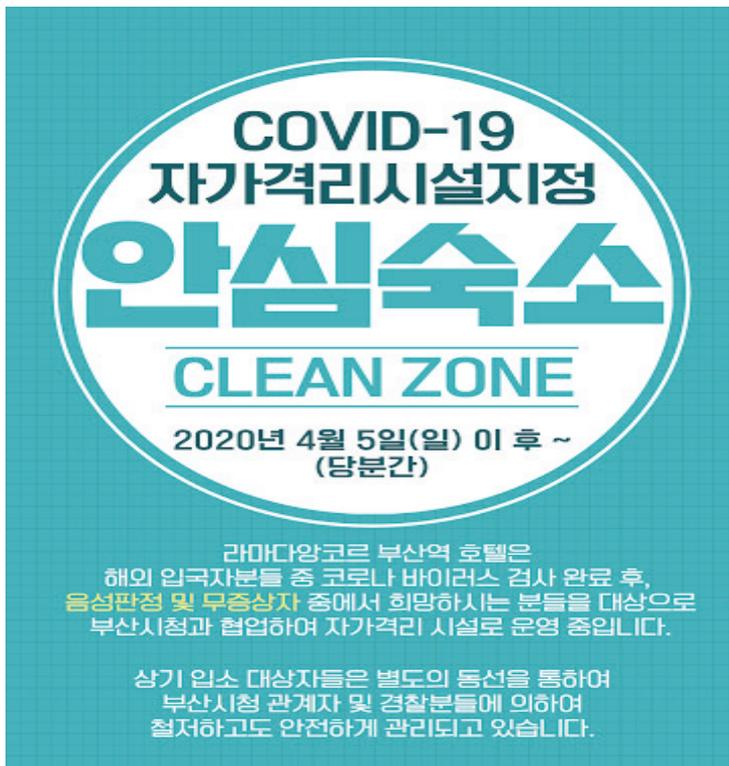
□ 시책의 내용

- 전국의 소규모 펜션 및 관광지역을 유형화하여 코로나19의 인증에 따른 관광안심지역을 지정 및 인증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협동조합의 행·재정적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거버넌스체제 구축
 - 관광안심존의 숙박-관광명소-지역특산물-지역음식점 등을 연계하여 예약제 관광플랜 구축
 -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관광마케팅을 통한 맞춤형 관광지구 개발
- 자가격리호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련의 기준을 충족한 호텔 등 상업 숙박시설에서 무증상 자가격리자 수용
 - 자가격리자 수용 가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 및 직원들이 방역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주요 호텔 예약 플랫폼과 연계하여 “자가격리 호텔” 또는 “quarantine hotel” 등 항목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지자체에서 간호직 직원을 호텔로 파견하여 의료업무 지원 & 호텔 내선 전화를 이용하여 심리 상담 운영

□ 시책의 효과

- 맞춤형 관광계획과 소규모의 안심관광지구 지정을 통한 관광수요 확보 가능
 - 인구소멸지역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사업 지원 확대에 기여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해짐
 - 숙박업소의 다양한 전략에 따라 비즈니스형, 의료형, 관광형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안전하면서도 격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낮추어 한국 방문을 유도함
 - 자가 격리 대상자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편의성 확보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기본 15일 장박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주: 해외입국자 지정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라마다 양코르 부산역 호텔

8. 휴직 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¹²⁾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인해 휴직하는 승무원이 많이 발생
- 주요 관광지의 관광수요 회복과 더불어, 인지도가 낮은 관광지의 활성화도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 생활이 보편화되어 유튜브 접속이 늘어남

□ 시책의 내용

- 지자체 관광부서 및 한국관광공사,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 주요 관광명소 및 관광업이 발달하지 않은 농어촌 등의 관광명소 발굴 및 홍보영상 촬영
- 지역기반 운수·항공 승무원들과 함께 지역관광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는 사업
 - (예) 무안국제공항 허브항공사 제주항공 승무원들과 함께 호남의 숨겨진 관광지 소개
- 무급 휴직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촬영, 편집, 외국어 자문 등의 역할 부여
- 본 프로젝트 수행 후 거주지의 지역화폐를 활동비 및 임금으로 지급

□ 시책의 효과

- 무급 휴직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재능기부와 긴급 일자리 창출 및 생활고 해소에 도움
-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운수업·항공업의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공헌 사례가 될 수 있음

12) 코로나 19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번호: 494

- 지자체는 외국어·관광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주: KBS. 객실승무원 무급휴직 뉴스 화면.

9. 주민세 및 개인대상 보조금 일부를 생활SOC 문화·체육시설이용 바우처화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운영실태 악화
 - 공공시설 및 생활SOC 시설의 확대에 따라 지역주민 삶의 질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및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
 -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유지 및 활성화가 절실함
- 현행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시책은 공급자의 직·간접 지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활동보조를 통해 공급자의 운용을 간접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현재 지역주민들의 주민세 및 노인, 육아를 지닌 가정 등 개인 대상의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쿠폰으로 활용
- 예를 들면, 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듯이, 주민세 및 개인 대상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바우처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이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배부하는 것임

□ 시책의 효과

- 문화·체육 관련 공공시설의 유향화를 막고 새로 건설되는 생활SOC 건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0. 지역 관광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지역관광의 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수단이 분산화 되어 통합된 관광정보 수집의 한계 노출
 - IT기술 발달 및 SNS의 소통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만, 다양한 정보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 또한 증가하였음
- 또한 지역관광업계의 홍보성의 관광정보로 방문객의 기대와 다른 실망감이 증대하고 있어 지역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시책의 내용

-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통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양한 관광지 소개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 현재 문체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지역관광정보를 통합하여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지역관광지 소개, 지역특산물, 지자체 축제, 자연관광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플랫폼 제공

□ 시책의 효과

-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다양한 관광지역을 소개함으로써 분산된 관광활동 기대
- 지자체 내에 소개되지 않은 지역관광 명소의 발굴을 통한 지역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4절 농·축·수산 분야

1. 주민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수요의 급락 등 단기 및 중·장기적인 수요 감소에 대한 판로확대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 필요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산물 수요 진작을 위해 도·농교류 등 민관협력을 통해 농산물 꾸러미 판매, 공공부문 농산물 구매촉진 등 다양한 시책 필요
-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판로 및 마케팅 채널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적절한 내수를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지역 외부의 충격을 흡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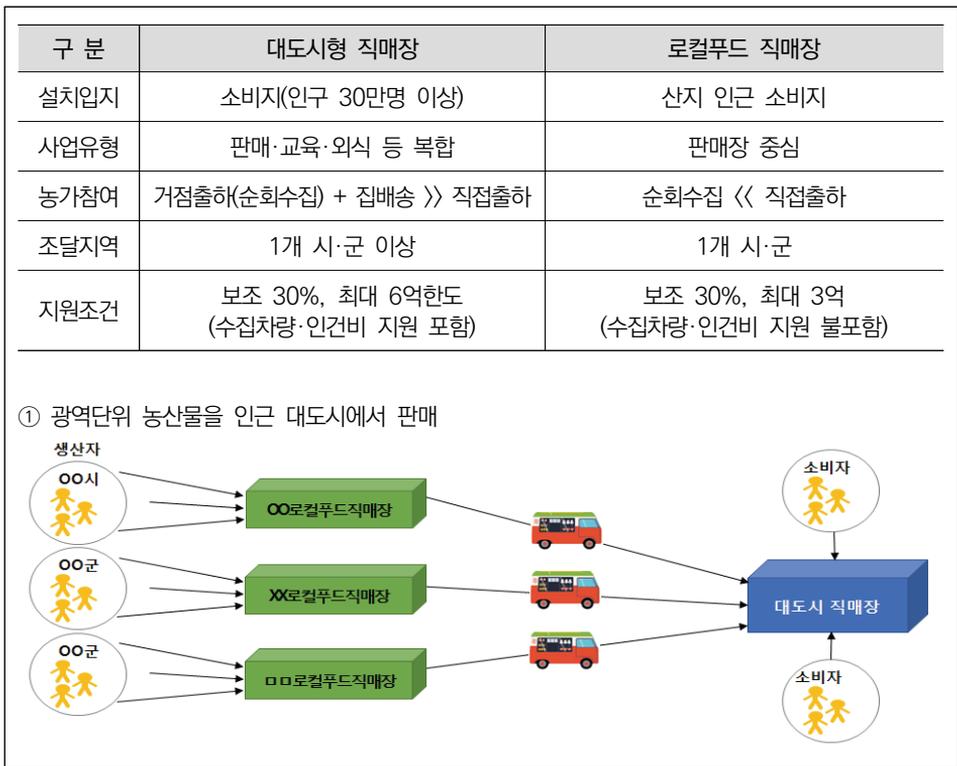
□ 시책의 내용

- 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 읍·면·동의 주민·마을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이·통장협의회 등과 같은 주민자치기구 중심으로, 마을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기업, 학교, 관공서, 주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로컬푸드 순환경제 거버넌스”를 구축
- 로컬푸드 순환경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혹은 통합함으로써 지역 내 농·축·수산물의 과잉공급이나 초과수요를 해소
- 비상상황에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락·꽃 배달 사업,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등 추진, 도농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직매시스템 구축
 - 평상시 식품 소비체계와 달리, 주민자치기구 등을 중심으로 비상상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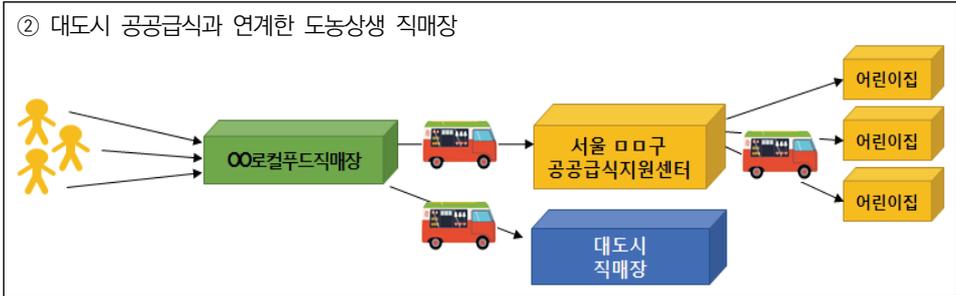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락 배달 및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추진체계 마련

- 꾸러미 사업을 통해 작황여부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
- 주민자치기구의 도·농 자매결연의 확대를 통해 자매결연 지역 간 농·수·축산물의 직매시스템 및 로컬푸드 협업체계 구축
 - 자매결연 도시지역 주민자치기구를 중심으로 농산어촌 주민자치기구와 협업을 통해 농·축·수산물 나눔행사, 팝업스토어, 임시 직거래매장 등 운영

[그림 5-3]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의 개념



② 대도시 공공급식과 연계한 도농상생 직매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04.27일자 보도자료

□ 시책의 효과

- 지역 농·축·수산업의 위기상황에서 대도시 지역과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적인 수요감소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 판로 구축
- 꾸러미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감염병 위기로부터 지역 내 농·축·수산물의 불안정적인 공급 상황에 맞춘 안정적 수요창출 및 가격안정, 지역 농가 소득 보전 등에 기여
- 주민자치기구의 도·농 자매결연의 확대를 통해 지역 간 협력 확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 가능

2. 지역화폐와 ICT·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및 운영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전형적인 수요경로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함
 - 기존 특정된 수요자가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 불특정 수요자에 대한 판매 및 지역 내·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등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거래를 위한 이동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민간택배 시스템에서의 감염확산 및 소비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 등으로 책임성이 강화되고 위기상황에서 공정한 거래를 지향할 수 있는 공공택배시스템 등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공공배달앱의 구축과 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단과 기술을 적용한 공공택배·교통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동제약으로 인한 수요위축을 극복하고 새로운 마켓플레이스와 거래관행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지역화폐 전용거래를 전제로 한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 지역 내 농·축·수산 마을기업 및 생산업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지역 내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영업상 어려움을 감안한 공공배달앱 구축
- 공공배달앱과 새로운 교통·운반기술 등을 활용한 공공물류·택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요진작 및 지역일자리 창출
 - 주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드론택배, 무인전동카트, 인공지능 로봇 등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시제품들을 적용한 로컬푸드 택배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변 등 이동루트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드라이브스루 지역특산품·로컬푸드 팝업스토어’를 조성·운영
 - 지자체의 생산자이력시스템 등 적절한 보증을 통해 신뢰성과 이동편리성 제고

[그림 5-4] 국내 이동통신사와 벤처기업이 개발한 5G·AI 자율주행 방역로봇



자료: 동아일보, 2020년 5월 27일자, 유근형 기자

[그림 5-5]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 드론택배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10월 26일자 보도자료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물의 직판경로를 확대하고 거래를 위한 이동제한 등을 극복
- 로컬푸드 분야의 공공택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택배시스템에서의 감염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및 새로운 마켓플레이스와 거래관행의 창출

3. 비대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로컬푸드 안테나샵 구축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농·수·축산물 등 특산품 판매를 위해 대도시 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허브에 안테나샵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그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의해 고속터미널, KTX역사, 공항면세점 등에서 지역 특산품 전용매장 등이 운영되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온라인 쇼핑몰 역시 자치단체 독자운영, 온라인 쇼핑몰과 자치단체의 제휴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단순한 쇼핑몰 운영에는 한계가 존재함
-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 접촉 및 거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시장이나 쇼핑센터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온라인 직거래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산품 가상체험 등과 연계된 지역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안테나샵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 전과정에 대한 3D 체험콘텐츠 개발
 - 지역 내 대표적인 특산품을 선정하고, 직접 이를 생산하는 과정마다의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 수확을 체험하고 인증샷을 남기고, 수확한 특산품을 수일 후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안테나샵을 운영
- 온라인 증강현실 안테나샵을 구축하고 체험과 특산물 구매를 연계한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축·수산물 마케팅 채널 확보
 - 방송용 홍보프로그램의 제작, 다양한 국내외 포털 등과 연계한 홍보 병행

-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지역 방문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실제로 지역방문을 유도

[그림 5-6]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의 쇼핑분야 활용 사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7 보도자료

□ 시책의 효과

- 대도시 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허브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안테나샵을 구축하여 판매 및 홍보 촉진
-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의 지리적 원격성을 극복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 지역 농·축·수산 특산품 가상체험 등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 및 지역 6차산업화 촉진 도모

4. 지역 상생경제를 위한 농·축·수산 공공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귀농·귀촌 청년들이 도시지역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농사펀드”를 조직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판로를 확보하는 사례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즉, 도시지역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생산 전 생산자금을 확보하고, 생산 후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러한 산발적이고 소규모의 민간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농사펀드를 체계화시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농사펀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이를 통해 생산자-소비자가 통합된 농·축·수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축·수산업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업생산단체 등이 중심이 된 농사펀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므로, 생산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수익률 등을 제시
- 제철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품목별 크라우드 펀딩 수행
 - 품목별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 유기농 및 무(저)농약 재배 등 친환경 재배를 통해 환경보전 및 농가수입 제고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유도
 - 플랫폼에서 외지 투자자들이 직접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으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매 시 할인을 혹은 구매 마일리지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제공

[그림 5-7] 경기도의 농사펀드 플랫폼

팜메이트

사전에약 2019년 햅쌀 견고추

Stay hungry, stay foolish!

price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GFI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Gyeonggi agrofood institute

2020년 9월에 생산되는 첫 쌀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사전에약 선착순	진행기간	할인률
1,000명	90일	20%

자료: 팜메이트 농사펀드(www.farmate.kr)

□ 시책의 효과

- 기존 계약재배 방식을 P2P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귀농·귀촌 및 청년농부들을 육성하고 생산 및 생활안정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성 있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며 도·농간 신뢰 구축 및 교류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의 생산자들에게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5. 지역 내 농축수산물 도매전용 결제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농축수산물 거래소 운영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거래 필요
 -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구매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 옴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주목 받으면서 농산물 도매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 필요
-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보다 농산물 생산자에게 친화적인 결제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채널을 구축
 - 광역 또는 지역 수준에서 지역화폐의 새로운 형태로서 농·축·수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 도매전용’ 화폐를 활용하여 지역 내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가격보조를 통해 지역 내 농·축·수산물 생산의 경쟁력을 제고 필요

□ 시책의 내용

-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방식임
- 전국의 주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양파, 마늘 거래 등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임
- 온라인 거래에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하며, 주요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 유통을 비롯해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등임
 - 거래 방식은 입찰거래와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하되 ‘지역 농·축·수산물 도매전용 모바일 화폐’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
 -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4~7%)보다 낮은 3%로 책정하고, 모바일 화폐를 통해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가격보조를 시행
 - 또한 구매자 역시 도매전용 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할인율(5%)을 부여하여 저렴한 가격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문자 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직배송
 -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의 잔액을 전용화폐 플랫폼의 계정(전자지갑)에 지급되도록 설계
 - 구매자는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APC를 선정하여 품질을 사전에 검증해 분쟁이 없도록 유도

[그림 5-8]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유통단계



자료원 : 연합뉴스, 2020년 5월 26일자, 고은지 기자

□ 시책의 효과

- 중간과정을 줄임으로써 가격 급등락을 완화시키고, 유통·물류비는 2~15% 절감시키며, 전용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할인율을 부여하는 가격보조를 통해 산지 출하품에 대한 도매가격 경쟁력을 제고
 - 상품이 산지에서 직배송되므로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상·하차로 인한 감모나 손실이 줄어들어 상품 신선도가 높아짐
 - 유통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으므로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음
-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

6. “역인클로저 운동(Reverse-Enclosure Movement)”과 공유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산화 추진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 제고, 공유경제 및 사

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재를 통한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시민 거버넌스의 조성이 필요

- 영국에서 17~18세기 근대 산업사회를 시작하면서 중세 목초지(장원)의 해체를 촉진시켰던 “인클로저 운동” 이후 상실된 공유재 관리거버넌스 역량을 회복함으로써 공유경제의 실현과 사회혁신을 도모
- 공유자산 회복 운동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희·저활용 자산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매입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의 시민자산화 또는 마을자산화하고 공유재의 관리거버넌스 구축 필요
- 커먼즈 운동에 의해 시민 공동의 이해관계망 형성과 수평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유재의 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위기대응 시민역량 제고 도모

□ 시책의 내용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역인클로저 운동(Reverse-Enclosure Movement)”의 시행을 통한 지역자산화 추진
 - 지역사회 내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Community-Value Assets)을 비롯하여 유희·저활용 국·공유 및 민간소유 자산(폐교·폐철도 부지 및 빈집 포함)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이를 ‘주민신탁(Local Trust)’ 또는 자산인수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자산매입 등 공유자산화 추진
 - 마을공동체부터 시민사회 전체까지를 아우르는 공유자산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빈집은행 포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공익 및 사회적 경제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구축 운영
- 지역 내 유희·저활용 국·공유재산의 발굴 및 지역공동체 활용권한 확대
 - 필요시 유희·저활용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또는 사용·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유재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마을 및 지역공동체 공유경제 거버넌스 촉진
- 공유자산 관리를 통해 마을수익의 창출과 마을기금의 적립 활성화

- 지역 내 다양한 위·수탁 대상 공공시설(생활형 SOC, 도시재생사업의 조성 시설 등)을 비롯하여 지역 내 유휴시설을 관리 및 수익창출(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마을기금을 적립하고 주민자치 활동으로 활용

[그림 5-9] 주민주도의 지역자산화의 사례: 마을기업 “건맥1897 협동조합”의 공유건물



주: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마을기업 “건맥1897 협동조합”의 공유건물은 마을팍 및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음

자료: 건맥1897 협동조합([facebook.com/PUB1897](https://www.facebook.com/PUB1897))

□ 시책의 효과

- 공유재를 통한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역량의 활성화 및 유휴 공유자산의 발굴·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유휴자산 및 주민참여를 전제로 조성한 위·수탁 대상 공공자산 등을 주민자치조직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마을기금의 적립 등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

7. 재생에너지 자본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활용한 농민수당 및 농민 기본소득 등 지급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농·산·어촌의 구매력은 제한적이며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농민수당 등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보다 안정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또는 국민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농·산·어촌 지역에서 최근 도입이 활발해진 농민수당 등의 기본소득의 지급 시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원 외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함
 - 마을목장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부지임대사업 등으로 연간 1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제주도 가시리의 사례 이후, 최근 마을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금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음
- 자치단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및 시민기업화(주민지분투자 공모)를 통해 주민들에게 발전사업의 혜택이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

□ 시책의 내용

- 농·산·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외지의 대기업을 아닌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가 존재함
 - 농산어촌 지역은 유휴부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주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자본투자에 대한 정책지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투자를 최소화 시키되, 주민이 다수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주민기업으로 육성
 - 발전사업의 수익률 대비 훨씬 저렴한 대출이자를 제공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주민들의 순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금융조건 등 제시
- 또한 신협·마을금고·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저리로 연계
 - 발전사업의 수익률과 대출이자 간의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 재원에 기반한 수당을 지급하되, 장기적으로 농민수당의 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수익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농민수당 혹은 농민기본소득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소득을 높이고 귀농·귀촌 등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함

[그림 5-10] 유희부지의 활용을 통한 강원도청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가덕산 풍력사업 “ 쉽게 투자하세요! ”

모집대상

태백시민 누구나

(만 18세 이상)

투자수익

연 수익률 7.0 %

(세전이율)

수익기간

만기 20년 상품

(분기별 연 4회 이자수익지급)

투자한도

10만원~4천만원

(1인당 투자한도)

투자 개요

가덕산 풍력사업은 강원도, 한국동서발전의 주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지주주인이 직접 투자해 함께 수익하는 친환경 풍력단지 개발사업입니다.

✓ **안정성** ① 고품질 설자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
② 풍요기후의 주도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

✓ **유동성** ① 2021년부터 분기마다 이자 수익 지급 (연 4회)
② 1년 통부타 자산에 투자 가능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방식의 투자 수익의 적은 재원형도 가능해졌습니다.
(21년재생에너지 보급 5만4천 기종, 2018.10.26)

● 공공기관 투자사업
- 강원도, 한국동서발전 참여
- 20년 95% 회계 계약 체결

● 사업 안정성 확보
- NH농협은행의 계약관리
- 신용보증기금 지원 (자산담보없이 투자 가능)

NAVER

이자 수익

발전소 인근 주민은 (연동, 동서발전, 한서(한동) 부대급)에 적용합니다.
✓ 1,000원을 투자 시 월에 받는 수익 비교

투자금	연 수익률 (%)	연 수익액	월 수익액
10만원	7.0%	7,000원	583원
1,000원	7.0%	70,000원	5,833원
10,000원	7.0%	700,000원	58,333원

※ 이자 지급 일정(연동, 한동, 동서발전)은 투자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익금 지급은 투자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

태백 시민 투자를 위해 부지(태백)가 태백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ROOTENERGY 강원사업 3층 A, 1층 12호

문의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 연락처: 033-9152-9999
- 부지(태백) 사무실: 02-792-8934 | 홈페이지: www.rootenergy.co.kr

자료: 태백시청

□ 시책의 효과

- 유희자산에 대한 재생에너지 등의 설비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및 농민수당 등 시민배당 활성화, 주민의 실질소득 제고 가능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

8.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계절적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 단기적·계절적 노동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농·축·수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식품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의 유희 노동인력을 훈련시켜, 농촌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농촌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시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기적·계절적 노동자의 수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의 단기적·계절적 노동일손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역 내 농·축·수산업의 원활한 생산을 도모 필요
 -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농업인력 육성사업,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것이 필요함

□ 시책의 내용

- 농·산·어촌의 단기 일손투입에 대한 농가별 수요조사 실시
 - 각 읍면동별로 농·축·수산업 품목별 단기 일손투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확기별 인력투입계획을 수립
- 농가별 총 단기일자리 수요에 따른 공공재원 확보 및 연중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단기일자리 수요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및 공고를 통한 단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품목별 단기 교육·실습 실시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추진
- 필요시 인근 특별·광역시 및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의 대도시 등과 협력을 통한 단기일자리 희망자 확대 모집
- 서울시의 ‘농촌 단기일자리지원사업’ 등과 같이 인근 특별·광역시 및 주변국 대도시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단기일자리 참여희망자 모집
- 코로나19의 일괄검사 및 필요시 자가격리 기간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중장기적으로 국내 귀농·귀촌 및 해외 농·축·수산업 연수생 프로그램 등의 연계(인센티브 부여 등)

[그림 5-11] 서울형 농촌일손 교류프로젝트: 농촌 단기일자리지원사업

농촌 단기 일자리를 지원해드립니다

단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키농거촌을 꿈꾸시는 분
 농촌 체험을 원하시는 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형 농촌일손 교류 프로젝트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모집기간
 1차 — 2020. **5.20** (수) ~ **5.26** (화)
 2차 — 2020. **5.27** (수) ~ **6.02** (화)

근무조건
 농가별 근로조건 상이
 서울시 및 (주)푸마시 홈페이지 확인

신청방법
 서울시 일손 교류 프로젝트
 중간지원조직 (주)푸마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사항 ☑ 교통 ☑ 보험료

www.poomasy.com **신청**

자료: 서울시청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 위기로 외국인 단기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농·축·수산 분야의 단기적·계절별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농·축·수산업의 생산 안정화에 기여
- 지역 내 및 지역 간 상생협력의 강화 및 신뢰구축, 연결망 확대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증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 및 해외 연수생 등 인구유입에 기여

9.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품앗이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로 지역화폐의 할인율 인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감소와 가계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기업체들의 매출감소 및 경영위기는 물론 실직과 고용불안 등 대부분의 가계에서 소득이 감소되어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봉착함
- 지역화폐(또는 지역사랑상품권)는 본래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하던 품앗이 화폐를 근간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
 - 주민·마을자치(위원)회 등의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의 품앗이 수요와 공공일자리 등을 연계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연결하고 그 보수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화폐를 통한 구매력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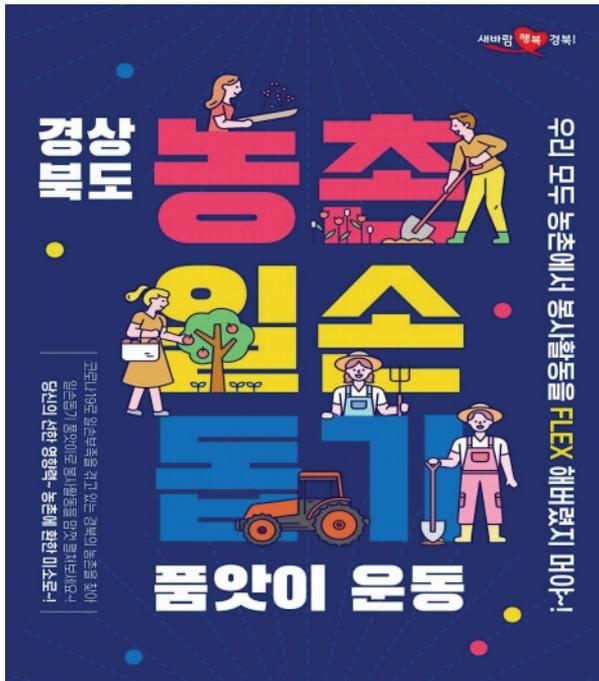
□ 시책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능나눔 품앗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재능나눔 품앗이가 가능하도록 재능나눔 품앗이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을 구축·운영

- 지역화폐를 활용한 타임뱅크 방식(시간당 노동임금 지급)의 지역 내 품앗이 활성화
- 플랫폼을 통해 주민 간의 품앗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타임뱅크 방식(시간당 1만원 혹은 최저임금 수준)의 수고비를 지역화폐로 거래하게 함으로써 소득보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재능나눔 품앗이 플랫폼의 활성화에 따라 중고물품 나눔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
 - 각 마을공동체별 중고물품 나눔, 온라인 플리마켓 활성화, 주말을 활용한 오프라인의 플리마켓 운영 등 다각화 시도

[그림 5-12] 경상북도 농촌일손 품앗이 사업



자료: 경북도청

□ 시책의 효과

- 지역화폐로 품앗이 일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매력 보완 및 소비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 등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에 기여
- 품앗이 활동과 지역화폐의 순환을 통해 지역애착심 및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주민 간 신뢰·관계망의 강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10.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2.0 조성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 단기적·계절적 노동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농·축·수산업의 원활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일손의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투입노동력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2세대 스마트팜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및 모듈화된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농·축·수산업의 탈노동화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농·축·수산 생산시설 내 최적의 재배환경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실증되고 상용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범적인 적용이 가능해짐

□ 시책의 내용

- 스마트팜 2.0의 도입을 위한 지역 농·축·수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스마트팜에 관련된 농업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EPIS), 광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역농업기술센터, 농축산업 생산자 모임, 기타 기술지원조직

(민간업체) 및 전문가 그룹 등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및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 스마트팜 2.0의 시범사업 추진

- 지능형 로봇에 대한 시장조사와 관련 기술지원 체계와의 협력 하에서 스마트팜 2.0의 도입을 위한 품목별 및 지역별 테스트베드 생산시설을 선정
- 중앙정부의 스마트팜 교육, 자금지원 및 모델개발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의 추진

○ 스마트팜 2.0의 시범사업의 성과공유 및 확산

- 지역사회 스마트팜 추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성과공유 및 환류체계 마련
- 지능형 로봇 등 자본투자를 위한 민관협치 방식의 지역기금 마련 또는 재단 설립, 크라우드펀딩 및 신용보증·이차보전 등 재정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그림 5-13] 지능형 로봇에 의한 스마트팜 2.0



자료: 농업경제신문 김수진 기자, 2019.01.11일자.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 등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및 감염병 위기로부터 농·축·수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통한 노동의존도 축소 및 생산성 제고 등 지역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스마트팜 2.0 등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화를 통한 기술 및 관련 노하우 축적을 통해 수출 및 국제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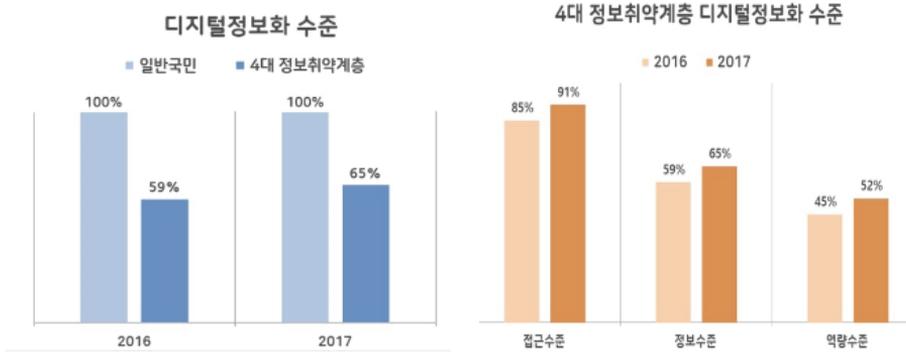
제5절 정보화기반(ICT) 분야

1. 모바일 라이프라인(Mobile Lifeline) 지원 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체계마련 필요
 - 지역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감염자 현황 및 추적경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전달
 - 모바일 데이터 사용 및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바이러스 대처방안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지역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감염자 현황 및 추적경로 등에 관련된 신속한 정보획득이 중요
-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의 안전을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소외계층 및 소외 지역사회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필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인터넷 연결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 not)간의 격차가 크고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수준에 관련된 정보 격차 심화
 -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7년 기준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5%로 정보의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된 상태
 - 재난 발생 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사업 마련이 필요함

[그림 5-14]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출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17)

□ 시책의 내용

- 저소득층(Low-Income Consumers)을 수급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수급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 긴급재난 발생 시 모바일 기기 사용을 통해 신속한 정보접근이 가능하게 모바일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사업
 - 긴급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 가능
-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에 서는 라이프라인(Lifeline Cell Phone Service)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임
 -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인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별도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이 자격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집으로 휴대폰이 배달되고, 사용 시간 및 모바일 데이터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빈곤선의 135%를 넘지 않는 가구 소득을 가진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 달에 몇 분이나 무료로 통화 및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지는 주에 따라 다름. 필요할 경우 선불카드를 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통화를 사용가능¹³⁾

- 미국 일부 주정부(플로리다, 미네소타, 켄터키,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에서는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일부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통신사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시행¹⁴⁾
- 미국의 ITDRC(정보기술재난자원센터)는 Facebook과 NetHope 같은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 및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 시책의 효과

- 다양한 주체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통신업체 등)간의 파트너십 협력 구축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힘든 지역사회 또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서비스 지원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제한된 정보접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 고조현상을 방지
- 온라인 개학과 같은 일상의 방식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모바일 데이터의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시행을 통해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취약 청소년 계층의 학습권을 우선 보장

2. AI 무장한 코로나19 방역로봇 다중이용시설 대역서비스 지원 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 기반의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기존의 병리학적 접근을 넘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 과학기술 기반 융합 솔루션 적용 필요

13) <http://www.lifeinus.com/USGuide/topic.cfm?TopicID=81>

14) <https://www.fcc.gov/general/lifeline-program-low-income-consumers>

-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마트화된 감염병 대응 시책 마련 필요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방역로봇 투입 검토 필요
 - 「감염병예방법 제48조」¹⁵⁾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및 기타 방문객을 위한 소독 등의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화된 위생관리 인프라 구축·지원 필요
-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 사회 도래
 - 코로나 팬데믹 등의 블랙 스완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위험이 일상화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의 체온 및 기타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생활방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시책의 내용

- 최근 개발·출시된 ICT 탑재 방역로봇의 다중이용시설 대여 서비스 실시
 - 최근 SK텔레콤에서는 체온검사, 방역, 소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역로봇 개발
 - 코로나19 방역로봇은 5G, AI 등 첨단 ICT 기술과 로봇 자율주행, IoT 센싱 등 공장 자동화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실시간 서버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주행하면서, 체온검사, 방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가능
 - 로봇이 사람의 체온을 측정했을 때 열이 있는 것으로 체크되면 서버에 실시간 데이터로 전송되어 건물의 출입을 제한
 - 상반기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건물에 우선적으로 투입 예정
-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에서 구입 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여서비스 시행 가능

15)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 의무화

[그림 5-15] 코로나19 방역로봇이 방문객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자료: SK텔레콤 제공

□ 시책의 효과

- 인간 개입 없이 로봇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로봇 기반 생활방역 가능
 -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내의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가능
 - 혁신기술(로봇·ICT) 적용을 통해 상시적 생활방역 가능
- 빅데이터 기반의 접촉자 관리 등 과학기술 기반의 감염병 대응 가능
- 생활방역에 대한 역량 강화로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 가능

3.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초·중·고부터 대학·대학원까지 합치면 약 840만명의 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접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및 교원들의 감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제도 구축 필요
 - 현재 원격수업은 기술적·내용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원격수업이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

-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학교를 벗어난 임의의 공간과 불특정 시간에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및 교사들의 학습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긴급 상황을 대비한 원격교육 장비 지원 및 대여 정책 확대를 통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없이 평등한 교육환경 제공이 필요
- 저소득층 자녀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¹⁶⁾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이버 가정학습, EBS 수능강의 및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사각지대가 없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함
-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보다 세심하고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기본법」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로 근거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는 언론과 선행연구들이 있음
 -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미보유 학생은 1차 조사결과 22.3만 명으로 집계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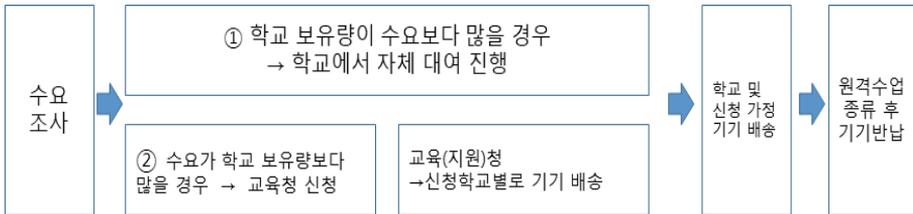
□ 시책의 내용

- 스마트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 이하)는 학교 및 교육청 기준에 따라 자녀 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추가 지원을 통해 데스크톱 PC, 노트

16)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31799>

- 북 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1개를 최소 1대 대여해주는 사업
- 온라인 개학부터 등교 개학까지 스마트기기를 대여하며 대여방법은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 전까지 소속 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그림 5-16] 스마트기기 대여 절차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31799>)

○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

-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학습권 보장
-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모바일의 경우 교육 사이트 접속 시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학교 현장의 원격수업용 상용사이트 접근 허용, 교실 내 WiFi(공유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청 보안 정책을 점검하여 각 교육청과 함께 교사의 원격수업 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즉각 지원함

□ 시책의 효과

○ 재난 발생 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방식의 개정과 교육 사각지대 계층의 조사로 인한 교육 관련 복지서비스 향상 기대
- 또한 교육 방식의 스말로그(스마트와 아날로그의 합성어) 교육 확대로 교

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 창구가 늘어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도 기대 가능

4.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상황에 대비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학습 공백 발생 방지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강의와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융합 플랫폼 제공을 통해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 정착과 고등교육을 위한 실험 및 연구활동과 시뮬레이션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융복합·신기술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 정부에서는 이러닝(e-learning)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교육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이러닝 콘텐츠·솔루션 개발자, 이러닝 학습과정 설계자 등과 같은 미래유망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기획재정부, 2016)

□ 시책의 내용

-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초·중·고 학습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다양한 방법과 내용의 수업 실현을 위해 공공플랫폼을 구축
 - 안정화된 플랫폼 운영을 통해 안정된 서버 제공 필요

[그림 5-17] 현재 운영 중인 초·중학교 온라인 교육플랫폼 「e학습터」



<https://cls.edunet.net/>

○ 원격수업 플랫폼 제공을 위한 민간 온라인 협약

- 시스템 과부하 등 긴급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격수업의 협력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시책 마련
- EBS의 경우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체 방송프로그램, 라이브특강 등을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며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온라인 클래스'를 새로 구축한 후,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동시접속이 최대 300만 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을 증설
-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 장기화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계속됨에 따라, EDISON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습·실험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연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R&ED 융합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 시책의 효과

-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서비스 혁신 가능
 - 학습자는 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일방적인 지

식전달 형태를 탈피하여 실시간 상호작용형 수업으로 향후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된다면 학습 효과 측면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

- 코로나19 이후 재난상황에 대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교육플랫폼 구축 확대로 에듀테크 벤처기업 육성으로 연계 가능

5. 디지털 뉴딜시대 R&D개발을 위한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뉴딜로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필요
 - 디지털 뉴딜이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재정정책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5G·데이터·AI관련 분야가 새로운 추진사업의 일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 적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디지털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구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스타트업 분야를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 필요

[표 5-1]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

분야	추진과제	3년간 재원	일자리창출목표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6조 4,000억원	22만 2,000개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8,000억원	1만 5,000개
	초중고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	1조 4,000억원	2만 8,000개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 구축 등 SOC 디지털화	4조 8,000억원	6만 5,000개

자료: 기획재정부(2020)

□ 시책의 내용

- 지역인재양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스타트업 정책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주도하는 스타트업·벤처·창업 기업 지원육성 정책 시행
 - 생활방역에 관련된 R&D 기술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술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사업 실시
 - 청년 창업 및 간접 지원을 통한 창업공간 및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일자리 토대 마련
- 중·장기 측면에서의 재원지원
 - 단기간의 성과 도출에 따른 평가와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외국처럼 펀드운 영기간을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금 등을 제공
 - 연구개발 장소 및 가구시설 등 연구주제·연구기간 및 연구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구비 및 연구환경 조성비 지원
 -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예산중에서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관련된 재원으로 관련사업 시행·확대 가능

□ 시책의 효과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R&D개발에 종사하는 창의적인 청년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활력 제고 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방역 등에 관련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뉴딜시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IT 및 바이오 관련 일자리 창출 가능
 - 방역 및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혁신적 일자리 창출 가능

6.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원격진료서비스 제공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AI를 활용한 공공보건 의료 강화
 - AI를 활용한 의료영상 판독은 크게 진단방사선 이미지, 심혈관진단, 폐, 뇌 등으로 의료진이 육안으로 판독하기 힘든 영역의 표식을 찾아 낼 수 있음. 따라서 판독 과정에서 의료진의 오진 확률을 낮춰 병의 조기 발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거점이 되는 보건소의 경우 공중보건외과가 판독업무를 과반 수 이상 수행하고 있어 오진확률이 높음¹⁷⁾.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AI 의료영상 판독 및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책의 내용

-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서비스 제공

17) <https://www.ceart.kr/webcontent/ckeditor/2019/12/4/b58e0aec-5bd4-4826-8851-8c554f8ed07a.pdf>

-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거점으로 AI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판독 업무를 보조함
- AI 활용을 통한 진료 및 환자관리 프로세스의 효율화
 -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의 위험을 관리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동선을 통제 및 관리하거나 감염 통제를 통해 보건 위생을 관리하는 등 추론과 판단이 가능함(김승현, 2019: 10)¹⁸⁾
 - 영상 분석 업무를 넘어 어시스턴스 분야로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이 가능함

□ 시책의 효과

- 감염통제 가능
 - 손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병원감염 및 감염환자 비접촉 치료가 가능하며 또한 손 소독을 하라고 손목밴드에서 알림을 주어 손 마찰시간과 접촉에 관련한 데이터 제공(김승현, 2019: 11)
- 국민체감 공공의료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축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AI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활용하여 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의료거버넌스 구축 가능
-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신시장 창출

7.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문연구기관 신설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방역체계에 부합하는 R&D 연구를 전담할 대응기관의 부재

18) 김승현(2019). “인공지능(AI)의 의료 활용과 주요이슈”. 한국과학기술원 Issue Paper No.7.

- 의료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 확보와 조기 대응에 관련된 연구개발 추진 필요
- 의료현장 중심의 조기대응 및 방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신속한 신종 감염병의 감지를 위한 ICT 기술 개발 필요

□ 시책의 내용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신종 전염병 대응 생활방역 기술개발 추진
 -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
 - 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병원 방역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 협력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기술 개발에서 산업화 촉진까지 협력체계를 마련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및 성과공유 차원에서의 사례집 및 정기간행물 발간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위기 대응 경험을 사례집으로 엮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수행
 - R&D 개발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 발행
- 감염병 연구단계별 국제 공동연구 추진
 - WHO, WPRO 등과 협력하여 감염병 R&D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 사업 추진
 - 글로벌 감염병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기반 강화

□ 시책의 효과

- 국가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친 R&D 개발환경의 구축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ICT 기반 감염병 특성·전파 정보, 스마트검역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개발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 및 방역기기의 개발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 수행

8. 지자체 차원에서의 ICT 기반 감염병 예방 플랫폼 구축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지역 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임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최근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 과기정통부에서도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및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 및 ICT 기술이 활용된 예방추적 방역시스템 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민관협력 사례로 추진 가능함

□ 시책의 내용

- 감염병 발생 시 스스로 감염병의 유사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완성하여 새로운 감염병 바이러스의 출현 및 확산경로

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이 개발된 App을 설치해 독감 및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독감 유행지역 및 확산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다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바이러스의 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현황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
-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SMS 발송하는 기능을 통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응대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 시책의 효과

-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ICT 기반의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어 감염병 조기진압이 가능
-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의 이동-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

9. ICT 활용 버스노선 운행보조 확대 및 노선관리시스템 구축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시내버스 운행이 줄어들거나 노선이 감소하는 상황 발생
 - 감염병 발생 시 버스노선 횟수를 줄이고 버스 운행 시 승객을 모아서 운행하는 실정
 - 대중교통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어려움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발생
- 축소되는 버스노선 및 운행 횟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 발생
 - 운행 횟수 감소에 따라 버스 대기시간이 늘어남
 - 노선 감소에 따라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증가

- 코로나19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대되는 상황 발생
 - 버스 운행회수 감소에 따라 운행버스 당 승객 수가 증가하는 실정

□ 시책의 내용

- 버스 노선별 운행횟수를 증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승객 수만큼 버스당 이용객 수를 낮출 수 있도록 ICT 기반의 노선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해당 버스운행 증차 및 노선관리에 필요한 세부적 지원을 위해 노선관리를 돕도록 지원책 마련
 - 시간대별 실시간 시스템 자체 판단으로 전체 운행 횟수와 차량 운행 간격에 대한 최적화 스케줄 제공
 - 승객 탑승이 폭주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 운행 횟수에 대한 조절을 통해 시스템 운행량 조절
- 승객 탑승 센서를 확대 설치하여 적정 탑승인원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유도
 -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적정인원만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객 탑승 센서를 확대 설치하여 탑승인원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
- 운행보조시스템 구축 및 적정 탑승 인원관리 센서 설치운영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 수행
 - 코로나19에 따른 노선 운행 감축에 대한 운행스케줄을 최적화하고 동시에 시스템 사용의 가능성을 점검

□ 시책의 효과

- 버스노선 운행보조 확대 및 노선관리시스템, 승객탑승 센서 설치 등을 통해 적정 탑승 인원을 유도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바이러스 감염통제 가능
- 제도적으로 대중교통 적정인원만을 탑승할 수 있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감염 바이러스 전파 방지

제6절 사회적 가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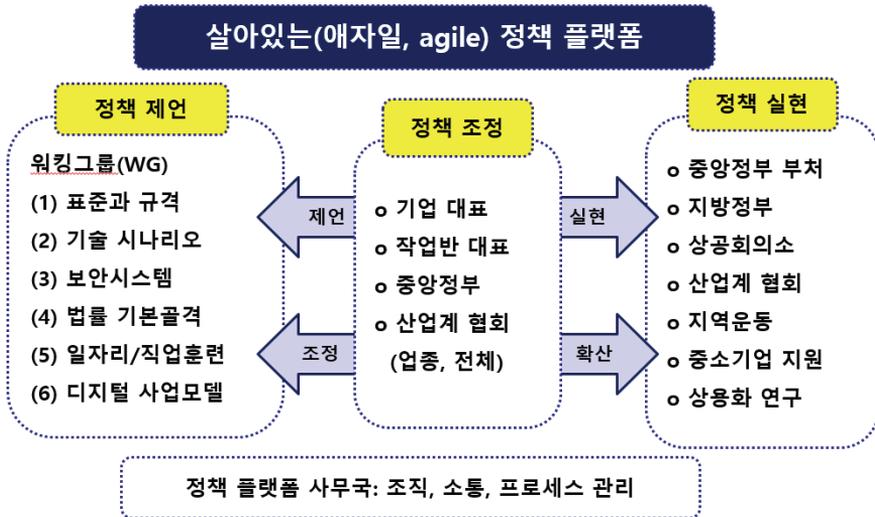
1. 온라인 Agile 정책플랫폼 운영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피해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규모와 양상은 제각각일 것이며,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시책개발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자체로도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연결되는 것이며 정책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Agile 소통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시책의 내용

- Agile 정책플랫폼은 현장전문가(10년 이상), 지역기업, 협회, 단체,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가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통하여 합의로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시간으로 주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
- 소통플랫폼의 기본적인 활동은 워킹그룹(WG) 활동을 통해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은 워킹그룹을 통해 제안하고 정책조정을 거쳐 정책 실현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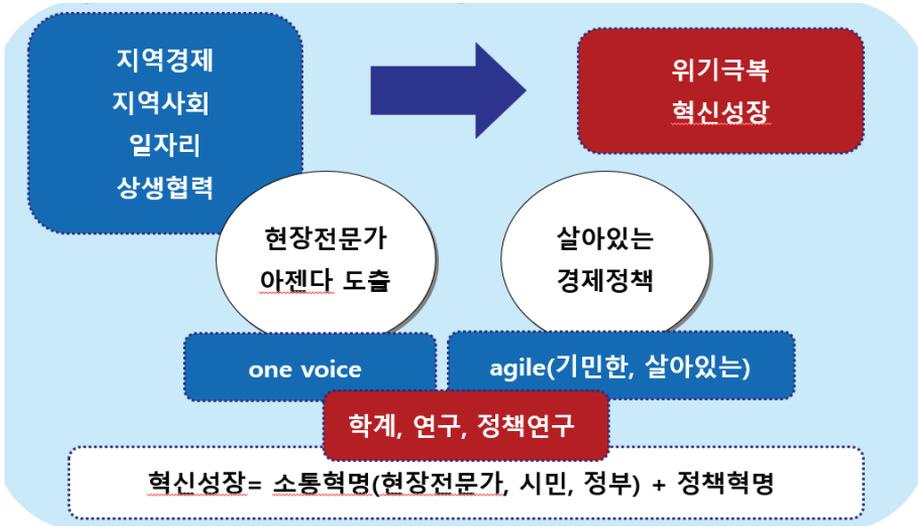


주: 독일 Plattform I4.0 홈페이지.

□ 시책의 효과

- 정책 플랫폼 사무국은 현장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권 행사를 통해 살아있는 정부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소통 및 프로세스 관리
- 정책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살아있는 정책, 포용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음
 - 모두가 토론하고, 발표하고, 질문함으로써 소통을 통해 정책도출
 - 정책공급자 중심에서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방향 전환
- 주민을 정책대상에서 정책의 결정자로 격상(by the people)함으로써 지역 민주주의 실현

[그림 5-18] 현장전문가의 살아있는 정책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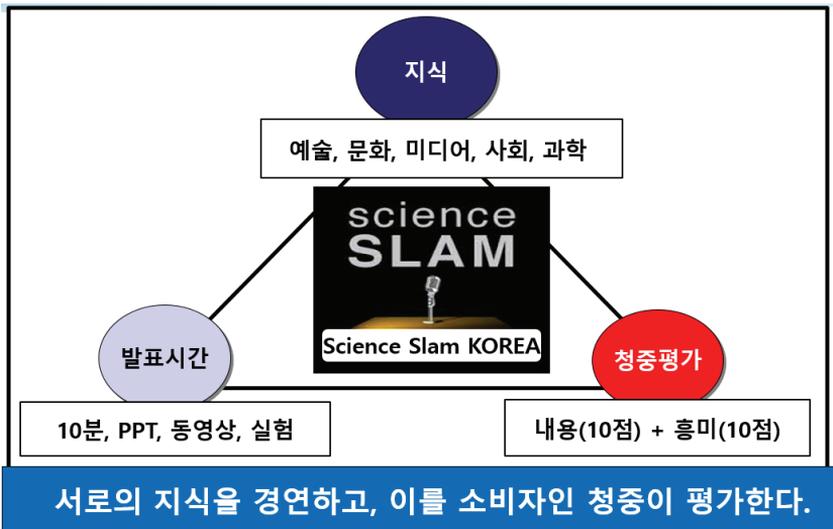
2.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지식경연 한마당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정책이 양산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이 만족할 만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면 주민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여러 정책 비용이 수반됨
 - 정책 실시 전에 주민의 만족도를 물을 수 있다면 정책실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정책의 지식을 경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지식경연 한마당'을 운영 필요

□ 시책의 내용

- 모든 사람이 교사이며, 모든 사람이 학생(Everybody is a teacher, everybody is a learner)이라는 모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 지식을 경연하고, 이를 정책의 소비자인 시민청중이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방식
- 기존 정책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시민이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이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방식



□ 시책의 효과

- 한국드라마의 성공요인과 최근 가요프로그램(Mr. 트롯 등)의 성공요인은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시민 스스로 의견을 제공하고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

- 정책경연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시간 청중의 평가를 거쳐 결정됨으로써 민주성과 수용성이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음
 - 서로의 지식을 경연하고, 이를 소비자인 청중이 평가
- 주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하고 협력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간으로 개발할 수 있음
- 정책경연에서 다루어진 정책들은 영상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화 함

[그림 5-19] 정책지식경연 한마당



3. 유·초·중등학생의 온라인수업 멘토링 프로그램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유아 및 초중고학생의 개학 지연과 대학생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개학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음
 - 맞벌이 가정 등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가정의 경우 학생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생의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수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지 않고 컴퓨터 게임 등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에 따라 ‘대학생을 활용한 유·초·중등학생 온라인수업 멘토링’ 운영 필요

□ 시책의 내용

- 돌봄 공백이 길어지는 유아, 초·중등학생과 비대면 강의의 장기화로 집에 머물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계하는 방식
- 양질의 멘토링을 위해 청년대학생 가운데 우선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교직 전공자들 위주로 선발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임용고시 준비생 중에서도 멘토 선발
 - 멘토링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면접 및 인성테스트 실시
 - 멘토링 지원단을 구성한 후 맞벌이 가구 보호자에게 연결해 주는 방식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유·초·중학생들에게는 돌봄과 교육공백 해소의 기회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활성화 ‘굿굿즈’로 취약계층 등 매칭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국무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밝힘(2020.4.22.)
 - 고소득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음
 - 자발적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및 코로나 피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활성화 프로그램(굿굿즈)’을 운영 필요

□ 시책의 내용

- 굿굿즈(Good Goods)란 수익의 일부가 선행에 쓰이는 상품을 말하며, 기부단체에서 후원자에게 보상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됨
- 기부자들에게 배지, 고무팔찌, 스티커, 이모티콘 등의 굿굿즈를 지급하여 연대감과 소속감을 심어줌
- 기부자들에게 기부증서와 기부사실증명서를 발급
 - 기부증서는 대부분의 기부단체에서 현재 발급 중, 특히 자택이나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는 상장과 유사한 디자인의 기부증서를 발급하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
 - 기부사실증명서는 정부24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에서 이를 제시할 경우 약간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면 기부문화 확산과 소비 촉진에 기여 가능
 - 수능응시표를 제시한 경우 각종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기부자가 기부행위를 통해 국난 극복을 위한 연대의식을 공유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부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기부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음

5.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산부 지원프로그램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가 받는 스트레스는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 만성스트레스를 받은 임산부일수록 저체중 신생아나 미숙아 등 비정상적인 신생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음
 - 비정상적인 신생아의 경우 증상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단기적인 의료비용 뿐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수준의 저하로 인한 낮은 생산성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산부들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급격히 증가
 - 다수의 바이러스 감염소식, 감염에 대한 공포감, 야외 활동 자제 등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어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임산부들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산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단기간에 끝나는 수준이 아닌 만성스트레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시책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제공
 - 소득기준으로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하지만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를 건강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신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정책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이후 임신을 시작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스트레스 완화 및 영양 보충 프로그램
 - 비대면 출산 및 산후관리방식 제안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시책의 효과

- 비대면 지원을 병행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이며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자 불편을 개선하는데 기여

6. 비대면 민간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 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관은 운영 중이지만 대상자는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대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
 - 코로나 초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잠깐 멈추고, 이 기간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간주하여 적극적 대응시기를 놓쳐버림
 - 일부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식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가족이음 함께 키트(Kit)'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지원 봉사활동을 운영

하고 있으나 전국적 차원에서 비대면 봉사활동의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도 부재한 상황임

- 컨트롤 타워가 후원금 지원 및 배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사회복지 직능협회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후원 필요-관리-지급의 전 프로세스의 통합적 관리방식이 요구됨

□ 시책의 내용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인이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식을 완전한 표준화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관리
 -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며 봉사자는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맞추어 집에서 실시간 화상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재능나눔을 실시
 - 비대면 봉사활동은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진로 탐색, 댄스, 영어, 취미 활동 등)을 선정한 뒤,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사전에 등록한 봉사자 중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봉사자를 연결하여 화상시스템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표준화 비대면 자원봉사방식과 참여절차의 공표
 -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역체계 내의 자원봉사 대응 행동지침을 제작해 전국 시도에 배포
 - 재난발생 단계별로 봉사활동 방식, 자원공급 방식, 수단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리(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경우, 이용자, 자원봉사자, 시민이 왔을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며 사후 안정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 지역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상상황 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
 - 예상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조직 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협의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특화된 상시모니터링 체계와 민간자원관리체계를 결합하여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사회적 약자 및 노약자의 감염 예방안전, 의료 지원의 어려움 해소 기여, 코로나19가 주는 심리적 위축, 불안감 및 두려움을 해소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봉사 단원 간 의사소통 강화 및 심리적 단결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7. 자원봉사활동의 결합을 통한 온-오프 착한 소비 운동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착한 소비 운동’은 농·어촌,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골목식당가,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자 개개인의 선의에 근거한 후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음
 - 개학 연기와 외식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편임
- 착한소비 방식, 착한소비가 가능한 기관, 대상자 유치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음

□ 시책의 내용

- 지역 특산물 중에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과 생산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단체, 노인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들의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매 추진
 -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지역 농가를 위해 미나리·삼겹살·새송이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종을 확대하여 공급
-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식당가를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선(善)결제 및 나눔 운동을 지역화페, 타임뱅크, 봉사활동시간 연계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결합하여 실물 인센티브를 제공함
 - 선결제 금액, 홍보활동 만큼 복지포인트 지급,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의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의 전염 예방을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킴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을 도울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8. 비대면 코로나19 마음 챙김 사업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고 있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특히 사회적인 관계가 제한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을 합성한 ‘COVID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남

- 보호자는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새로운 양육방법을 찾거나 출근을 할 수 없는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됨. 무엇보다 자녀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보호자 스스로가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영향으로 가족, 교우관계, 일상생활 및 넓은 범위에서의 지역사회 혼란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면위주의 서비스, 상담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울 정도임
 - 공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주로 대면 개인상담 중심의 상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 감염병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비대면 상담시스템 도입이라는 상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시책의 내용

- 상담개입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과 같은 비대면 상담개입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비대면 온라인 정기상담 운영
 - 의사소통 방법 등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부모의 자녀 인터넷 지도 방안 등과 관련 내용을 유튜브(고민프리 상담소)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제공
- 24시간 이내에 상담자가 답변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심리건강 특별게시판 상담실’ 운영
- 자기주도 학습법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사회적 가치 시책 4, 6과 연계하

여 하나의 통합망으로 구축가능)

- 청소년이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탄력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짐.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나 시간관리, 위기상황에서 문제해결 등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멘토링 사업을 연계함

□ 시책의 효과

- 학부모와 청소년, 아동의 심리적 우울감 해소 및 스트레스의 원인 경감
- 비대면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으로 상담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

제7절 재정지원 분야

1. 계획계약 제도를 활용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 활성화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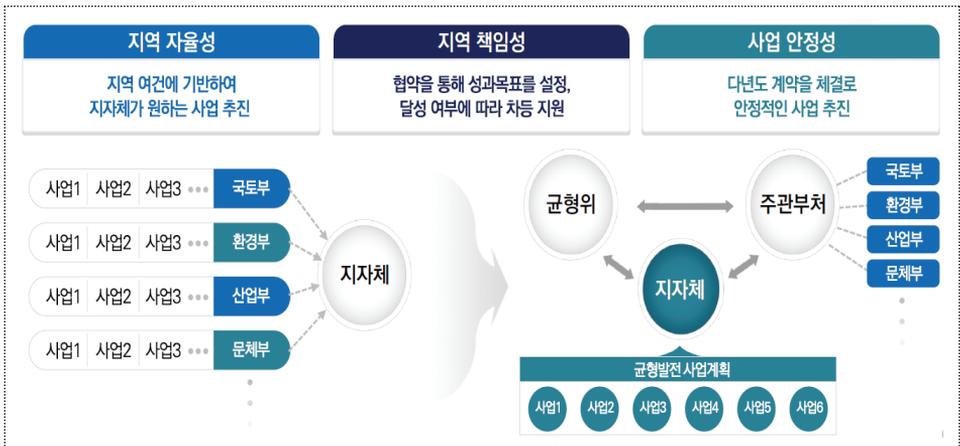
- 중앙부처의 칸막이식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사업의 효율성 저하
 - 지자체는 각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에 한계
 - 국고보조사업은 부처의 계획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가 결정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한계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처별 개별 시책들의 중복성 여부 및 장기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계획 수립에 한계
 - 현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부처별 사업을 보면, 기능 및 대상에 따라 중복 문제(일자리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및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시책에 대한 매칭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투자계획을 위한 재정우선순위의 왜곡 가능성이 높음

□ 시책의 내용

- 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계획계약제도(지역발전투자협약)를 활용한 포괄보조형식의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투자사업의 플랫폼 구축
 - 현행 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계획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다부처·다년도 묶음 계획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포괄보조형식)하는 재정협력 플랫폼
- 중앙-지방 간 재원은 현행 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과 각 부처의 국

고보조금을 통합한 포괄보조금, ② 2단계 재정분권의 국세의 지방이양 재원, ③ 국세-지방세의 공동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중앙-지방 간 계약기간 및 평가방식은 향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기본방향은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이후 평가에 따라 연장 및 지속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 방식



□ 시책의 효과

-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 구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사업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2. 지방재정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이 소진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재정 충격은 지방채무 발행을 수반하는 상황에 있음

- 자치단체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채 발행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
- 위기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복구 관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의 대상과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책의 내용

- 코로나19 관련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 고민스럽긴 하나, 정책당국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보전 용도로 지방채발행을 허용
 - 자연재해대책법(제1장 제2조 제1항)은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
 - 국어사전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으로 풀이
 - 코로나19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연동하여 천재지변도 아닌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기준과 범위를 뉴노멀 시대에 맞도록 시급히 개정하여야 함
 - 인간 및 동물의 감염병 등 사회적 재해도 포함되도록 시급히 개정
- 아울러 천재지변이 법적 용어가 아니고, 법적 정의도 없다면, 사전적 용어 풀이에 집착하기 보다 유연성을 발휘하여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해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시행규칙(훈령) 등에 천재지변의 정의와 범위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채발행도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경우 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시급을 요하는 재정사업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와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타당성조사는 우선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배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제도 적용
-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함
 - 코로나19 관련 재정사업은 행정안전부령에 포함시키거나, 기타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 시책의 효과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투자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단축 및 간소화하여 재정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3.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예산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총동원 되었으며, 재정여력이 소진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지자체의 일선 담당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
 - 이 상태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세 징수기반이 더 악화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특히, 시·군의 세입 여건은 삼중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소비세 감소 시, 보통교부세는 시·도에 더 배분되는 구조
 - 이로 인하여 시·군은 보통교부세 자연감소에 더하여 조정교부금도 감소

□ 시책의 내용

- 우선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보통교부세 정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 규모를 2년 후 적용하거나, 2년에 걸쳐 안분하여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을 추진함
 - 다만, 이 대안은 재정당국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임
- 둘째, 보통교부세 총량 범위에서 자치단체별 교부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
 - 보통교부세 총량이 줄어들 경우, 당해 자치단체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감액하는 방식이 통상적임
 - 예년의 이러한 운용방식을 견지하되, 지방세가 급감하거나 전년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액이 덜 줄어들도록 예외적으로 조치
 - 이 조치로 혜택을 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향후 2~3년에 걸쳐 다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재원으로 활용하여 형평성 확보
- 한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제에 인구과소지역이나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 일부,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 재정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고유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한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 가능
- 가령, 인구과소지역 및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발전계정과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계정의 설치 가능

□ 시책의 효과

-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통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에 추가 재원을 투입 가능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KRILA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으로서 7개 분야에 걸쳐 총 52개 시책을 제안함
 -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8개, 중소기업 4개, 문화·체육·관광 10개, 농·축·수산 10개, 정보화기반(ICT) 9개, 사회적 가치 8개, 재정지원 3개
- 제안된 시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시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장기적 시책도 포함되어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온라인 제공 등은 주로 단기적 처방에 해당함
 - 반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적 관광 기반구축(소상공인·자영업자), 공공물류 플랫폼(농·축·수산)과 교육콘텐츠 플랫폼 구축(정보화기반), 지역공동체 자산화(농·축·수산),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지원 사업(정보화기반) 등은 장기적 방안에 해당됨
-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 긴급재난에 따른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책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고용 충격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지자체도 2차 대유행을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여야 함
 -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의 유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며 지역주민의 구성과 사안별 시급성도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 시책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의 협력적 추진 필요
 - 대표적 사례로서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20.2.12.)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들 수 있음. 이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에서 시작하여 전북도내 전통시장으로 확산되었고 전북도, 전주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개 시군상인연합회, 62개 전통시장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이룬 성과임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와 사회가 확산될 전망이고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 수는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를 마주하면서 이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의한 뉴 노멀(New Nomal),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여야 함
-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님
 - 향후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마련에 있어서 지역별 경기변동, 산업구조 등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시책 개발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2020).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 국회입법조사처(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 관계부처합동(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김승현(2019). “인공지능(AI)의 의료 활용과 주요이슈”. 「ISSUE PAPER」 No.7. 한국과학기술원(KAIST).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0), 시도별 코로나19 대책자료.
- 서울특별시(202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대책.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020), 코로나19 대응 시군구 시책 및 사례
- 참여연대(2020). <좌담회>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 한국개발연구원(2020). 「KDI 경제전망」(2020년 상반기), 37(1), 2020.5.
- Hamilton, J. D.(1989).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Analysis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and the Business Cycle." *Econometrica*, 57(2). 357-384.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June 2020.
-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 OECD(2020).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 Supporting livelihoods during the COVID-19 crisis : Closing the gaps in safety nets.
- 통계청, 2020년 고용동향(3월~5월)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0.5.28.)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4.23.)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https://www.mss.go.kr/site/smba/>

부록 1 GRDP 전망모형과 추정결과

KRILA

○ GDP에 대한 GRDP의 VECM(1) 전망

$$\Delta \ln GRDP_t = \mu + \beta' (\ln GRDP_{t-1} + \alpha \ln GDP_{t-1}) + \Gamma_1 \Delta \ln GDP_{t-1} + \Gamma_2 \Delta \ln GRDP_{t-1}$$

[부록 표 1] GRDP 전망을 위한 VECM(1) 추정 결과

	μ	β'	α	Γ_1	Γ_2	$Adj.R^2$
서울	0.051 (5.17)**	-0.318 (-4.41)**	-0.687 (-18.0)**	-0.199 (-0.62)	0.167 (0.47)	0.54
부산	0.063 (5.20)**	-0.911 (-5.00)**	-0.658 (-48.7)**	-0.673 (-1.97)*	0.367 (1.37)	0.43
대구	0.067 (2.74)*	-0.630 (-4.71)**	-0.575 (-26.5)**	-0.735 (-1.72)	0.361 (1.12)	0.40
인천	0.069 (2.74)*	-0.206 (-3.18)*	-0.565 (-7.44)**	-0.253 (-0.36)	0.007 (0.102)	0.29
광주	0.065 (3.42)**	-0.075 (-2.63)*	-0.169 (-1.03)	-0.519 (-0.90)	0.216 (0.61)	0.14
대전	0.037 (3.95)**	-1.201 (-3.55)**	-0.763 (-76.8)**	-0.231 (-0.84)	0.314 (1.27)	0.34
울산	0.054 (2.43)*	-0.375 (-2.89)*	-0.304 (-3.16)*	-0.707 (-1.24)	0.032 (0.11)	0.38
경기	0.105 (8.54)**	0.028 (6.31)**	-4.43 (-10.2)**	-2.218 (-5.11)**	1.260 (4.25)**	0.64
강원	0.033 (2.61)*	0.009 (0.97)	-2.13 (-7.25)**	-0.099 (-0.36)	0.177 (0.69)	0.06
충북	0.095 (5.73)**	-0.016 (-3.41)**	3.09 (3.69)**	-0.968 (-2.61)*	0.369 (1.59)	0.30
충남	0.058 (1.70)	-0.034 (-0.69)	-1.891 (-11.9)**	-0.119 (-0.20)	0.046 (0.23)	0.04
전북	0.043 (2.43)*	-0.036 (-1.99)*	0.275 (1.27)	0.109 (0.26)	-0.196 (-0.65)	0.22
전남	0.016 (0.70)	-0.039 (-0.67)	-1.123 (-12.6)**	0.489 (1.38)	-0.273 (-1.43)	0.10
경북	0.058 (2.67)*	0.066 (1.67)	-1.659 (-13.2)**	0.050 (0.11)	-0.152 (0.56)	0.14
경남	0.006 (0.08)	-0.017 (-0.61)	1.436 (3.49)**	0.908 (0.66)	-0.333 (-0.931)	0.13
제주	0.042 (2.19)*	0.008 (1.07)	-3.700 (-6.08)**	0.497 (1.57)	-0.281 (-1.46)	0.24

주: ()내는 t값이며, **와 *는 각각 1% 및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함

○ GDP에 대한 GRDP의 FMOLS 전망

$$\ln GRDP_t = \alpha + \beta_1 GRDP_{t-1} + \beta_2 \ln GDP_t$$

[부록 표 2] GDP에 대한 GRDP 전망을 위한 FMOLS 추정 결과

	α	β_1	β_2	$Adj.R^2$	RMSE
서울	3.252 (4.7)**	0.642 (6.7)**	0.267 (3.2)**	0.99	0.021
부산	8.563 (-0.9)**	-0.090 (11.2)**	0.788 (10.2)**	0.99	0.015
대구	6.062 (6.3)**	0.269 (2.2)*	0.481 (5.4)**	0.99	0.023
인천	2.661 (5.6)**	0.542 (5.1)*	0.397 (3.8)**	0.99	0.044
광주	3.069 (5.6)**	0.361 (2.7)*	0.560 (4.5)**	0.99	0.028
대전	5.105 (11.0)**	0.205 (2.6)*	0.612 (9.4)**	0.99	0.013
울산	2.730 (1.5)	0.765 (3.7)**	0.107 (0.8)	0.94	0.033
경기	0.818 (3.7)**	0.782 (4.6)**	0.245 (1.1)	0.99	0.050
강원	1.721 (2.1)*	0.834 (8.8)**	0.084 (1.4)	0.99	0.039
충북	0.883 (2.2)*	0.861 (5.7)**	0.113 (0.7)	0.99	0.057
충남	0.399 (1.8)*	0.832 (7.0)**	0.191 (3.0)**	0.98	0.071
전북	3.238 (4.2)**	0.556 (4.6)**	0.323 (3.3)**	0.99	0.035
전남	3.392 (3.9)**	0.576 (4.8)**	0.300 (3.3)**	0.98	0.054
경북	1.076 (3.4)**	0.818 (8.1)**	0.161 (1.5)	0.99	0.065
경남	2.870 (3.1)**	0.688 (6.1)**	0.202 (2.2)*	0.94	0.088
제주	1.183 (3.0)**	0.847 (8.1)**	0.096 (1.0)	0.99	0.074

주 ()내는 t값이며, **는 1%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정부최종소비지출에 대한 GRDP의 FMOLS 전망

$$\ln GRDP_t = \alpha + \beta_1 PCOM_t + \beta_2 \ln GCOM_t,$$

여기서, $PCOM$ 은 민간최종소비지출, $GCOM$ 은 정부최종소비지출

[부록 표 3]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정부최종소비지출에 대한 GRDP의 FMOLS 추정 결과

	α	β_1	β_2	$Adj.R^2$	RMSE
서울	3.163 (3.7)**	0.306 (2.9)**	0.613 (8.7)**	0.99	0.024
부산	-8.674 (-3.3)**	1.571 (5.6)**	-0.067 (-0.42)	0.95	0.042
대구	1.999 (2.2)*	0.564 (5.6)**	0.364 (1.9)*	0.99	0.018
인천	0.865 (0.5)	0.761 (3.7)**	0.243 (5.7)**	0.98	0.032
광주	0.703 (1.1)	0.723 (8.4)**	0.280 (4.9)**	0.99	0.019
대전	3.535 (3.2)**	0.649 (4.3)**	0.179 (1.9)*	0.99	0.020
울산	3.340 (2.1)*	1.139 (5.8)**	-0.283 (-2.4)*	0.96	0.029
경기	-0.627 (-0.4)	0.452 (1.7)	0.663 (3.0)**	0.99	0.042
강원	5.826 (3.7)**	0.298 (1.8)*	0.402 (4.8)**	0.98	0.024
충북	0.803 (0.7)	0.330 (2.2)*	0.708 (8.4)**	0.98	0.026
충남	-12.04 (-3.8)**	1.671 (-3.7)**	0.106 (0.4)**	0.97	0.066
전북	5.800 (2.9)**	0.133 (0.7)	0.590 (6.5)**	0.98	0.027
전남	16.99 (5.1)**	-0.625 (-2.3)*	0.710 (8.1)**	0.94	0.045
경북	-7.655 (0.8)	0.930 (1.1)	0.598 (1.0)	0.88	0.104
경남	-2.106 (-1.0)	0.972 (3.5)**	0.203 (1.1)	0.97	0.041
제주	0.250 (0.1)	0.695 (2.8)*	0.344 (2.2)*	0.99	0.034

주 ()내는 t값이며, **는 1%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전기 지방세와 당해 연도 GRDP를 설명변수로 하는 세수함수에 대한 FMOLS 전망

$$\ln T_t = \alpha + \beta_1 \ln T_{t-1} + \beta_2 \ln GRDP_t$$

[부록 표 4] 지방세수함수에 대한 FMOLS 추정 결과

	α	β_1	β_2	$Adj.R^2$	RMSE
서울	-9.72 (-2.4)*	0.520 (3.2)**	0.899 (2.6)*	0.97	0.061
부산	-10.45 (-3.3)**	0.549 (4.2)**	0.952 (3.5)**	0.97	0.064
대구	-10.52 (-3.0)**	0.585 (4.2)**	0.940 (3.1)**	0.98	0.060
인천	-9.767 (-3.3)**	0.541 (4.1)**	0.919 (3.4)**	0.98	0.050
광주	-8.044 (-4.2)**	0.544 (5.1)**	0.838 (4.3)**	0.99	0.043
대전	-13.72 (-3.9)**	0.282 (1.7)*	1.375 (4.1)**	0.97	0.061
울산	-6.638 (-1.3)	0.799 (7.4)**	0.528 (1.4)	0.98	0.058
경기	-3.799 (-2.3)*	0.612 (4.4)**	0.522 (2.6)*	0.98	0.075
강원	-4.821 (-1.0)	0.828 (4.7)**	0.419 (1.0)	0.98	0.064
충북	-8.634 (-3.3)**	0.509 (3.2)**	0.883 (3.3)**	0.98	0.065
충남	-4.030 (-1.8)*	0.670 (4.7)**	0.485 (3.1)**	0.98	0.071
전북	-10.48 (-4.9)**	0.634 (8.7)**	0.894 (5.0)**	0.99	0.040
전남	-5.830 (-0.9)	0.862 (6.1)**	0.437 (1.0)	0.99	0.057
경북	-2.738 (-2.2)*	0.802 (11)**	0.311 (2.5)*	0.99	0.054
경남	-2.375 (-1.1)	0.895 (12)**	0.217 (1.2)	0.97	0.090
제주	-9.321 (-1.4)	0.738 (4.5)**	0.784 (1.5)	0.97	0.146

주 ()내는 t값이며, **는 1%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1.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72년 이후 처음으로 연도 중 3회 추경을 단행하였음
- 2회 추경은 14.3조원(국비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국채발행 3.4조원과 지출구조조정 8.8조원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하였음
- 3회 추경은 35.1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음(정부안 35.3조원)
 - 세입경정: 국가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 반영
 - 금융: 135조원 이상의 금융안정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지원
 - 고용: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국가경제로 전환
-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11.4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4월 기준 국세 징수액은 100.7조원이며, 전년 동월대비 -8.7억원 줄어들었으며, 특히 기간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음

[부록 표 5] 2020년도 주요 국세의 징수실적

	총국세 (조원)	내국세(조원)					특별 회계 (조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관세	기타		
'20년	본예산	292	88.4	64.4	68.9	10.2	41.5	7.9
	추경예산(3차)	279.7	88.5	58.5	64.6	7.7	41.1	7.9
	징수액	100.7	28.8	21.7	29.5	2.2	16.2	2.2
	진도율(본예산 기준)	34.5%	32.6%	33.7%	42.8%	21.6%	39.0%	27.8%
	진도율(3차추경 기준)	36.0%	32.5%	37.1%	45.7%	28.6%	39.4%	27.8%
'19년	예산액	294.8	80.4	79.3	68.8	9.1	50	7.6
	징수액	109.4	26.2	24.9	33.2	2.7	19.4	3
	진도율	37.1%	32.6%	31.4%	48.3%	29.7%	39.0%	39.5%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통계(www.openfiscaldata.go.kr/fdata/V6DS59P3M2769NM4RP2T798570)

- 올해 당초예산 대비 3회 추경은 법인세 -5.9조원, 부가가치세 -4.3조원, 개별소비세 -0.7조원 등 내국세가 -7.5조원, 전체 국세는 -12.3조원 감액됨

[부록 표 6] 국세의 당초 예산세입과 추경 세입경정 비교

	'19년 징수액 (조원)	'20년			3회 추경 증감		
		당초예산 (조원)	2회추경 (조원)	3회 추경 (조원)	20년 당초예산 기준	19년 징수액 기준	
총국세	293.5	292	291.2	279.7	-12.3	-13.8	
내국세	소계	255.8	251	250.3	243.5	-7.5	-12.3
	소득세	83.6	88.4	88.4	88.5	0.1	4.9
	법인세	72.2	64.4	64.4	58.5	-5.9	-13.7
	부가가치세	70.8	68.9	68.6	64.6	-4.3	-6.2
	개별소비세	9.7	10.2	9.8	9.5	-0.7	-0.2
	증권거래세	4.5	4.4	4.4	4.9	0.5	0.4
	과년도수입	5.9	5.4	5.4	4.9	-0.5	-1
	기타	9.1	9.3	9.3	12.6	3.3	3.5

출처: 연구자가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수치 등을 이용하여 산산

2. 재난지원금과 지방예산 부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재난지원금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포함 13.7조원으로 나타남
 - 168개 시군구가 조사에 응하여 과소 추계된 결과이기는 하나, 국가재난지원금 10조원,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3.7조원으로 조사됨
 -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도비 2.6조원, 시군구비 2.2조원의 지방비가 투입되었음
 - 국가재난지원금에 한정해도 지방예산은 1.2조원(시도비 0.7조원, 시군구비 0.5조원) 투입되어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였음

[부록 표 기] 국가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단위: 억원)

		합계	시	군	구	
합 계	합계	137,142	74,331	12,590	50,221	
	국비	88,450	44,835	7,532	36,082	
	시도비	26,270	14,224	1,446	10,601	
	시군구비	22,422	15,272	3,611	3,538	
국가재난지원금	소계	100,575	48,645	8,802	43,128	
	국비	88,450	44,835	7,532	36,082	
	시도비	7,120	1,397	670	5,053	
	시군구비	5,493	2,815	685	1,993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시도	소계	22,262	14,916	1,623	5,723
		시도비	19,151	12,827	776	5,548
		시군구비	2,624	1,687	762	175
	시군구	14,304	10,770	2,164	1,370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정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168개 시군구에서 응답한 수치임

- 재난지원금 재원은 잉여금(36.1%), 지출구조조정(23.5%), 재난관리기금(16.4%), 통합관리기금(7.3%)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일부 시군구는 지방채무 발행 조치도 취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임
-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재난지원금 경비를 충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부록 표 8]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식

(단위 : 억원)

	합계	잉여금	재난관리 기금	통합관리 기금	세출사업 조정	전입금	지방채무	기타
합계	24,604 (100%)	8,870 (36.1%)	4,046 (16.4%)	1,785 (7.3%)	5,788 (23.5%)	738 (3.0%)	325 (1.3%)	3,051 (12.4%)
시	17,755	6,900	3,094	1,617	4,402	614	325	802
군	3,522	661	301	57	1,138	92	0	1,272
구	3,327	1,308	651	111	248	32	0	978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168개 시군구에서 응답한 수치임

3. 지방세입의 충격

□ 지방세

- 재난지원금 비용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적 조치가 불가피한 반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 GRDP 전망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지방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지방세와 GRDP의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여 FMOLS 기법으로 전망하였음

$$\ln T_t = \alpha + \beta_1 \ln T_{t-1} + \beta_2 \ln GRDP_t + \beta_3 \ln GRDP_{t-1}$$

- 다음의 표는 전체 지방세에 대한 전망 결과로서, 모든 지역에서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부록 표 9] 지역별 지방세 전망(전년도 징수액 대비 증감액)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증감률	부정적	3.3%	3.4%	3.1%	4.9%	0.7%	0.0%	1.4%	4.4%
	중립적	3.7%	3.8%	3.4%	5.2%	1.0%	0.5%	1.6%	4.6%
증감액	부정적	6,472	1,603	926	2,054	123	0	273	9,040
	중립적	7,093	1,763	1,026	2,194	173	81	309	9,42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증감률	부정적	3.6%	1.8%	6.4%	3.3%	2.7%	3.3%	1.4%	3.6%
	중립적	3.8%	2.1%	6.6%	3.6%	2.9%	3.4%	1.5%	3.9%
증감액	부정적	723	397	2,045	648	645	1,195	689	556
	중립적	752	465	2,101	711	682	1,235	726	599

주: 시도세+시군구세 기준 전망 결과임

- 그러나,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수입과 비교하면, -6.2조원 이상 부족함
 -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세가 당초예산 규모에 미달
 - 비수도권 도 지역에서 당초예산 지방세에 현저히 적은데,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에 반영
 -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나 부동산시장 호조에 따른 취득세 여건 개선, 전년도 징수실적 저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작용
- 이미, 3회 추경에서 부가가치세는 -4.3조원 조정한 바, 단순 계산으로도 지방소비세가 21%인 -0.9조원 가량 줄어든다고 봐야 할 것임
 - 최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조치 일환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율 인상을 추진할 예정
 -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의 확충이 예상되나, 지방세 전반의 징세여건 악화와 지방소비세 위축을 상쇄할 것인지는 미지수

[부록 표 10]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대비 과부족

(단위: 억원)

	'20년 당초예산 지방세수입	중립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전망치	과부족	전망치	과부족
합계	916,941	854,344	-62,597	852,296	-64,645
서울	228,448	213,376	-15,072	212,716	-15,732
부산	54,122	51,122	-3,000	50,954	-3,168
대구	35,793	33,700	-2,093	33,591	-2,202
인천	48,084	48,961	877	48,806	722
광주	20,006	17,931	-2,075	17,879	-2,127
대전	19,689	18,137	-1,552	18,052	-1,637
울산	19,617	19,986	369	19,950	333
경기	230,244	229,973	-271	229,560	-684
강원	24,368	20,374	-3,994	20,345	-4,023
충북	24,518	21,615	-2,903	21,550	-2,968
충남	39,165	36,092	-3,073	36,031	-3,134
전북	27,490	20,698	-6,792	20,635	-6,855
전남	31,142	23,121	-8,021	23,086	-8,056
경북	43,870	36,873	-6,997	36,834	-7,036
경남	54,774	47,456	-7,318	47,421	-7,353
제주	15,611	14,927	-684	14,887	-724

주: '20년 당초예산 지방세수입은 통합재정개요에 수록된 시도+시군구 합계 수치임

□ 지방교부세

- 정부의 3회 추경은 내국세에 대한 -7.5조원 세입경정이 포함되어 있음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약 -1.4조원 조정된 상태에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정부 예상치 1.6조원의 세수증대가 실현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교부되며, 그 규모도 커, 시도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를 부동산교부세로 상쇄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임

4.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조치

□ 지방교부세

- 재난지원금 재원조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총동원 되었으며, 재정여력이 소진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지자체의 일선 담당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
 - 이 상태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세 징수기반이 더 악화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특히, 시군의 세입 여건은 삼중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소비세 감소 시, 보통교부세는 시·도에 더 배분되는 구조
 - 이로 인하여, 시군은 보통교부세 자연감소에 더하여 조정교부금도 감소
- 첫째, 보통교부세 정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 규모를 2년 후 적용하거나, 2년에 걸쳐 안분하여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을 추진함
 - 다만, 이 대안은 재정당국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임
- 둘째, 보통교부세 총량 범위에서 자치단체별 교부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조정함
 - 보통교부세 총량이 줄어들 경우, 당해 자치단체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감액하는 방식이 통상적임
 - 예년의 이러한 운용방식을 견지하되, 지방세가 급감하거나 전년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액이 덜 줄어들도록 예외적으로 조치
 - 이 조치로 혜택을 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향후 2~3년에 걸쳐 다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재원으로 활용하여 형평성 확보

- 한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제에 인구과소지역이나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 일부,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 재정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고유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한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 가능
 - 가령, 인구과소지역 및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발전계정과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계정의 설치 가능

□ 지방채무

- 더 이상의 재정충격은 지방채무 발행을 수반하는 상황이며, 자치단체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채 발행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 고민스럽긴 하나, 정책당국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보전 용도로 지방채발행을 허용
 - 자연재해대책법(제1장 제2조 제1항)은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
 - 국어사전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으로 풀이
 - 코로나19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연동하여 천재지변도 아닌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기준과 범위를 뉴노멀 시대에 맞도록 시급히 개정하여야 함
 - 인간 및 동물의 감염병 등 사회적 재해도 포함되도록 시급히 개정
- 아울러 천재지변이 법적 용어가 아니고, 법적 정의도 없다면, 사전적 용어 풀이에 집착하기보다 유연성을 발휘하여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해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시행규칙(훈령) 등에 천재지변의 정의와 범위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발행도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복구 관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의 대상과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음
- 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시급을 요하는 재정사업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와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타당성조사는 우선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배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제도 적용
-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함
 - 코로나19 관련 재정사업은 행정안전부령에 포함시키거나, 기타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